

모심과 살림

2012년
0호

생명운동이론지

모심의 눈 문명재와 새로운 상상력
제언 농지에 자유를!

특집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조합

생명운동과 탈근대 협동운동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실험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하여

협동조합은 '충분히' 여성적인가?

영성과 협동조합

살림의 길

생명문화운동 “놀이가 밥이다”

생활협동운동 일본 생협의 위기 대응을 둘러싼 이론적 고찰

사회실천운동 2012년 '가이야'를 점령하라

지구의 창

방사능 문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

왜 쿠바의 생태농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모심과
살림연구소



생명운동이론지

2012년
0호

모심과 살림

펴내는 글

생명운동 이론지 <모심과 살림>을 펴내며

시장포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자본주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세계화의 뒤끝,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와 전환이 운위되고, ‘다른 삶’과 ‘다른 세계’는 지금 여기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운동이란 말이 세상이 나온 지 30년, 모심과살림연구소 10년을 맞는 해에 드디어 생명운동 이론지가 선을 보입니다.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살림운동, 생명운동, 생명평화운동의 30여 년 실천 바탕 위에서 ‘오래된 새길’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왜 ‘한살림운동’ 이론지가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만, 편집자의 생각으로는 ‘생명(운동)’과 ‘한살림(운동)’은 둘이 아닙니다. ‘한살림’은 “생명의 이념과 활동”이며, 생명성(生命性)을 형용사와 동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운동이란 말은 이를테면 ‘통칭’입니다. ‘생명’과 ‘운동’ 사이에는 광활하고 역동적인 여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엔 사람과 못 생명의 공동체, ‘생명(공동체)운동’이 있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평화로운 ‘생명(평화)운동’이 있으며, 굶주리고 억압받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살림)운동’이 있고, 사람들 마음과 우리 사회에서 생명을 중심 가치로 만들어 가는 ‘생명(문화)운동’이 있습니다.

아직은 ‘0호’입니다. 모습은 있되 생성 중입니다.

‘모심의 눈’은 성찰입니다. 열정적인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이며 모심과살

림연구소 이사장인 박맹수 교수가 후쿠시마 이후 일본에서의 사색을 정리했습니다.

‘제언’은 주목해보아야 할 새로운 운동과제입니다. 연대를 통한 땅 살리기의 비책을 제시합니다.

‘특집’으로는 협동조합을 다루었습니다.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조합’입니다. 생명의 눈으로 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를테면 살아 약동하는 주체로 협동조합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전체를 보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근본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침체의 탈출구로써도 중요하겠으나 삶의 전환, 협동살림의 대안적 주체로써 그 의미와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살림의 길’입니다. 쓰러진 것, 주저앉은 것들을 일으켜 삶의 참다운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살림의 큰 길 안에는, 이를테면 세 개의 작은 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무늬를 바꾸는 ‘생명문화운동’, 협동적 생활양식을 일구는 ‘생활협동운동’,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실천운동’이 그것입니다. 세 개의 운동영역에서 성찰하고 탐색해야 할 운동적 쟁점을 국내외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지구의 창’에서는 한국에도 『공생공빈』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쓰치다 다카시 선생을 통해 방사능 시대를 함께 살아내고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 들어보고 쿠바 유기농업의 지난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한살림선언(1989)은 위기의 근본원인을 낡은 세계관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환기의 세계와 한국 사회, 대선판과 협동조합 신드롬을 보면서 사상상의 위기와 철학의 빈곤을 절감합니다. 물론 아직은 준비 중입니다. 통상 ‘준비호’라고 하지만, 감히 ‘0호’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발아하기 전의 씨앗, 혹은 어린 묘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쯤 전환기를 사는 님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탐색하려 합니다.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명을 창조하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 salim@hansalim.or.kr 02-6931-3604

모심과 살림 0호

발행일 2012년 11월 1일

발행인 박맹수

기획·편집 모심과살림연구소

발행처 도서출판한살림

편집디자인 디자인 이인

※ 본 도서는 비매품입니다.

004 펴내는 글 · 편집부

모심의 눈 008 문명재와 새로운 상상력 · 박맹수

제언 018 농지에 자유를! · 박용범

특 집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조합

026 생명운동과 탈근대 협동운동 · 김용우

050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실험 · 조완형

063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하여 · 정규호

087 협동조합은 ‘충분히’ 여성적인가? · 하승우

104 여성과 협동조합 · 주요섭

살림의 길 130 생명문화운동 “놀이가 밥이다” · 편해문

140 생활협동운동 일본 생협의 위기 대응을 둘러싼 이론적 고찰
· 강내영

156 사회실천운동 2012년 ‘가이아’를 점령하라 · 데이비드 니콜

지구의 창 162 방산능 문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 · 쓰치다 다카시

176 왜 쿠바의 생태농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 페르난도 푸네스

문명재(文明災)와 새로운 상상력

일본에서 바라본 생명의 위기

새로운 발걸음을 위하여

나는 1979년 2월 말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마음씨 좋은 종교 교역자가 되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 4년 간의 생활무대는 오로지 종교적 수련을 겸한 기숙사와 강의실, 도서관뿐이었고, 격변하고 있던 70년대 후반의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내용이 진실 그 자체라고 믿어버리는 순진(?)하기 짝이 없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입대한 군대 안에서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5월 광주’는 평범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렸다.

1980년 ‘5월 광주’ 당시, 나는 육군 제 37사단 연락장교의 직책으로 고급 군사기밀을 취급했다. 또한 매일 새벽 6시 정각에 지하병커로 출근하는 사단장에게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건’ 전말을 브리핑하는 일을 했다. 당시는 계엄령 아래 언론보도가 극도로 통제되고 있었고, 더욱이 군 조직

*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의 특성상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의문은 있었으나 그 어떤 문제제기나 행동도 하지 못한 채로 ‘5월 광주’를 맞이하고 보냈다.

81년 6월 말 제대한 뒤에 접하게 된 ‘5월 광주’의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무고한 시민학살에 가담한 가해자의 처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대가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음에도 ‘5월 광주’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5월 광주’의 비극이 한국 근현대사의 파행적 전개에서 기인한 문제점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음에도 그 같은 문제점과 모순을 제대로 파악할 만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한 통절한 자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5월 광주’의 비극을 계기로 한국 근현대사의 파행적 전개에서 유래한 제반 문제점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눈뜨게 된 나는 80년대를 내내 ‘뜨겁게’ 보냈다. 밑바닥 민초들과 아픔을 나누고자 야학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변혁을 위한 각종 투쟁에 꾸준히 참여했을 뿐 아니라, 변혁운동을 위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일환으로 대학원에도 들어갔다. 대학원에서도 투쟁을 계속하여 어용교수 반대 데모, 노동조합 결성,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의 ‘주동자’가 되었다. 덕분에 10년 간 학위논문 제출도 취직도 불가능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5월 광주’를 계기로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 사회가 지닌 구조적 모순에 눈을 뜬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 뒤에 뛰어든 사회변혁 운동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맛보았다. 깊은 좌절감 때문에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 갈 무렵,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천도교의 삼암 표영삼 선생님, 시인 김지하 님, 인농 박재일 님 등을 만나 생명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위당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 그 당시 나는 노동조합 결성 및 어용교수 반대 데모를 주도했다는 이유

로 면접에서 불합격시킨 모 연구기관을 상대로 한 ‘불합격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크게 낙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때 무위당 선생님은 나를 불러 ‘내유천지 외무소구(內有天地 外無所求; 내 안에 천지 같은 큰 마음만 있으면 밖에서 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화제를 쓴 난한 점을 주시며 큰 격려를 해주셨다. 고립무원과 절체절명의 실존적 위기 상황에서 선진들의 힘을 빌려 재기의 토대를 삼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무위당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스승과 선배님들의 무한한 격려와 사랑 덕분에 지난 30년 간 이 땅의 자생적 생명사상의 효시인 동학과 그 실천으로 나타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물론 나의 동학 연구의 출발점은 ‘5월 광주’이며, 동학에 주목한 것은 한국 근현대사의 파행적 전개에서 기인하는 ‘5월 광주’의 비극을 한국 근대 최초의 자생적 생명사상인 동학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극복해보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¹⁾이다.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무거운 가르침인 것이다. 시간축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재의 모순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나의 동학 연구가 어느덧 30년을 맞이했다. 30년 간의 연구는 『해월 최시형 연구』(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6), 『동경대전』(한글판, 지만지, 2009),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모시는 사람들, 2009),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동학농민혁명과 제국일본-』(모시는 사람들, 2011) 등의 성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1) E. H. Carr

‘3.11’과 나의 새로운 과제

30여 년에 걸친 동학 연구를 일단 마무리하면서 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그것은 시간축을 중심으로 동학의 생명사상을 해명하고자 한 지금까지의 문제의식과는 다른, 보다 열린 관점이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온 것이었다. 다른 관점이란 바로 ‘공간축’을 중심으로 동학의 생명사상을 새롭게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9세기 중엽 한국에서 동학이 자생적 생명사상으로 성립될 무렵,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사 속에서는 과연 어떤 사상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는지, 생명사상으로서의 동학의 실천운동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실천운동들이 동시대 동아시아와 세계사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성립되고 전개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서 21세기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할 때 동시대 동아시아와 세계사 속에서도 그 같은 과업이 가능한지 등등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민을 할 무렵, 근무하고 있는 대학 측으로부터 1년 간의 연구년 혜택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일치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연구년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2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공공철학(公共哲學)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토포럼 공공철학공동연구소’의 김태창 소장님 소개로 교토대학에서 초청장을 보내주기로 했다. 2010년 9월에 일본행이 결정되었고, 연구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년 간이었는데 학내 사정으로 2011년 8월부터 1년 간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일본행 준비를 하는 도중에 가공할 만한 사태가 일어났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앞바다에서 거대지진이 일어나 수십 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가 해안 도시를 휩쓸어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제 1원전의 냉각장치가 마비되어 원전이 폭발하는 사태가 일어나 일본 전역뿐 아니라 전 지구적 규모로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3.11’의 비극은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사태였다. 거대 지진의

로 인한 쓰나미의 위력도 위력이려니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또한 천대미문의 대재앙이었다. 주변에서 모두들 일본행을 만류했다. 하지만 나는 ‘3.11’의 비극을 맞은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예정대로 2011년 8월 중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정을 변경하여 처음 1개월 동안은 도쿄에서 생활했다. 도쿄에서도 가장 방사능 오염이 심한 카츠시카 구에서 지내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진상과 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행 전에 생각하고 있던 연구의 방향을 전격적으로 전환할 필요를 느꼈다. 동학사상에 대한 공간축 중심의 연구 주제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 문제에 대한 검토로 서둘러 바꾸었다. 그 후 나의 연구는 좁은 강의실을 벗어나 활짝 열린 현장으로 향했다. 내가 주로 택한 ‘현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테마로 한 각종 토론회와 심포지엄이 열리는 회의장, 사고의 진상과 피해 상황 등을 증언하는 모임, 원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등이었다. 물론 원전 사고를 계기로 고조된 반원전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방송과 신문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원전 사고에 관한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일과 함께, 원전 사고 이후 속속 간행되는 원전 관련 서적에 대한 검색 작업을 계속했다. 이 같은 일은 귀국 직전까지 1년 내내 계속되었다.

천재가 아닌 인재이자 문명재(文明災)

귀국 1개월 전인 2012년 7월 초에 일본 국회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것이었다. 이 발표에 대해 대다수 일본인들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지극히 늦게 발표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진상조사 발표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천재 아닌

인재'인 이유도 속속 드러났는데 그 주요 내용을 열거하면, 첫째로 20여 년 전부터 이미 지진 연구자 및 원전 전문가들이 거대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원전의 냉각장치 마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 1원전을 관리하는 동경전력 측은 그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해 버리고 아무런 안전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반원전 운동가들은 후쿠시마 제 1원전을 포함하여 건설된 지 40년이 넘는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끊임없이 폐로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연장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마침내 사고를 초래하고 말았다. 셋째, 후쿠시마 제 1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폭발에 버금가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빈발하였다. 그렇지만 동경전력 측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취하는 노력보다는 사고 은폐에만 급급함으로써 결국 폭발이라는 대사고를 불러오고 말았다. 넷째, 원전의 안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일본 정부 차원의 각종 위원회는 동경전력 측의 자금 제공 등 회유책에 휘말려 안전성 검증보다는 동경전력 측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노릇만 함으로써 사고를 방조했다. 다섯째, 매스컴 역시 원전의 사고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보도보다는 원전의 폐로 또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반원전 운동가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대라는 식의 보도로 일관함으로써 사실상 원전 추진파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노릇을 해 왔다는 것 등이다.

위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을 현대 일본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근대 일본이 쌓아온 역사의 구조적 모순의 집약적 표출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려는 견해도 나왔다. '일본의 양심'이라 불리는 나카츠카 아키라(中塚 明) 교수의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동일본 지역은 일찍이 메이지유신 정부에 맞서다가 쓰라린 패배를 맞본 지역으로, 1945년까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오다가 도쿄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전력 공급이라는 명목상 1950년대 말부터 원전 건설이 급격히 추진된 곳이었다고 한다. 메이지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문명개화’ 정책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약자의 배제와 희생 위에 성립된 것인데, 국내의 경우는 동일본을 비롯하여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국외의 경우는 조선과 타이완을 비롯하여 만주, 동남아시아 등이 희생양이 되었다. 나카츠카 교수는 2차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과거에 자행했던 약자의 배제와 희생이라는 과오의 전면적 인정과 사죄, 배상을 비롯한 근본적 청산을 요구받았지만 끝내 그것을 무시한 채 오늘에 이름으로써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비극을 맞이했다고 진단한다. 동일본 지역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과 근대 일본 역사의 총괄이라는 측면에서 사고 원인을 찾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일본의 구조적 모순에서만 사고 원인을 진단하는 일반적 흐름에 일침을 가하는 통찰이라 하겠다.

여기에 더하여, 환경 파괴와 생명 말살로 이어지는 부(負)의 그늘을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근대 과학기술이 지닌 문제점, 다시 말해 우리 시대 ‘문명’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순이야말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사고 당시부터 있어 왔다. 교토학파를 대표하는 우메하라 다케시 선생이 사고 직후 후쿠시마의 비극은 단순한 인재의 차원을 초월한 ‘문명재’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문명재’적 관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바라보는 견해는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시론지의 하나인 계간지 『환(環)』²⁾의 필자들에게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일상화되고 있는 문명재의 비극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웃나라 한국이 아닌 일본과 아주 멀리 떨어진 독일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

2) 후지와라서점 발행

고 직후 독일에서는 시민들의 반원전 의식이 고양되어 종래의 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내각회의에서 2022년 말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보다 독일인들이 더 크게 놀라 신속하게 대응한 이유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기술 선진국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있다고 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원전 사고의 가능성과 그 치명적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각을 독일인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고가 일어난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정부가 취한 원전 정책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이라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정책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즈음하여 독일과 한국이 취한 원전 정책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40여 년 전에 이미 『공업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치명적 문명재를 예견했던 쓰치다 다카시 선생은 원전 사고 소식을 전국 유기농대회가 열리고 있던 후쿠이 현에서 들었다고 한다. 쓰치다 선생은 우리에게 『지구를 부수지 않고 사는 방법』과 『공생공빈(共生共貧)』의 저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40여 년 전부터 반원전(反原電, 또는 脫原電)의 길을 묵묵히 실천해 온 운동가라는 사실이다. 40여 년의 온갖 수고와 노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 사고의 위험성을 그토록 끈질기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고가 일어나고야 만 현실 앞에서 쓰치다 선생은 망연자실하여 잠시 동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한다.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내가 만난 많은 일본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가장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바로 쓰치다 선생님과 같이 오랜 기간 반원전 운동을 해 온 분들이었다.

7월 중순 교토대학의 <마음의 미래 연구센터> 주최로 '동일본대진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이재민의 마음을 어떻게 치

유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시에서 은 겐유 스님이 보고하기를, 사고가 일어난 지 1년도 훨씬 더 지난 7월 초 기준 연간 피폭 허용량의 국제기준인 1미리시버트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이 11개 현(여기에는 도쿄도 포함된다)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현의 경우는 아직도 1백만 명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을 일상적으로 당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 중순에 서둘러 사고가 수습되었다고 선언했다. 참으로 기막힌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21세기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문명재'가 점차 일상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에서 확인되는 사기극마저도 일상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문명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이 글 앞부분에서 '3.11'의 비극적 현장인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영상으로 '3.11'을 접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 앞에 통곡하는 일본인들 옆에 그저 '그냥' 함께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2011년 8월 중순부터 2012년 8월 중순까지 나는 일본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술한 생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명재'가 가져온 비극 앞에서 절규하는 그들과 함께 절규할 수 있었고, 한 오라기의 희망이라도 건져 올리기 위해 광막한 폐허더미 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눈물과 아픔을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내 안에서 가만히 솟아오르는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무한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세계와 더불어 영원불멸하는 생명에 대한 강렬한 확신이었다.

나를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환경학연구과 외국인초빙학자로 초청해준 일본의 ‘한국학의 대가’ 오구라 기조 교수는 바로 ‘3.11’의 현장인 동일본, 즉 동북지방 출신의 학자다. 그는 나에게 동북 일본인들은 끊임없이 쓰나미를 당하면서도 결코 내륙이나 고지대로 거처를 옮기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동북지방의 문화와 전통은 우주 대자연의 자연스런 현상인 지진이나 쓰나미 앞에서 때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치르면서도 언제나 그 대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영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같이 우주 대자연의 자연스런 운행을 거스르는 인위적 ‘문명’ 때문에 오히려 동북 일본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동북 일본인들의 희생은 더욱 더 막심해졌다는 것이다. 바로 그 극명한 증거가 ‘3.11’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것이다. 방사능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한 국제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앞으로 10년 안에 수십만 명이 암에 걸릴 것이라는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바로 이것이 오구라 교수가 지적한 ‘문명재’가 가져온 치명적 결과이다.

‘문명재’ 극복의 길은 아주 간단명료하다. 그것은 우리 모두 우주 대자연의 자연스런 운행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인위적 ‘문명’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우주 대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 간단명료한 길을 일본의 쓰치다 선생님과 한국의 김종철 선생님은 ‘공생 공빈’으로 제시하고 계시다. 두 분의 해안에 깊이 공감하면서 나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 공생공빈의 길로 함께 가자. 가다 못 가면 잠시 쉬었다 가더라도.”

제언 글 박용범*

농지에 자유를!



• 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한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와 수확 조건이 같다면 최소한 1,400제곱미터의 비옥한 땅이 있어야 합니다. 식량농업기구에 있는 학자들의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남한 땅 1천만 헥타르 중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은 현재 168만 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썸을 해 보면 남한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1천 2백만 명, 24%의 사람들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식량자급률과 비슷한 수치네요. 비상시에 국민이 모두 합심해 하루 한 끼로 연명한다고 하더라도 1,400만 명은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급률을 앞세워 위기론을 끄집어내려는 식상한 의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겨우 24%의 사람들만 먹여 살릴 땅마저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해마다 2만 헥타르 이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3만 개가 넘는 학교운동장 넓이만큼의 농지가 해마다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단지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족한 식량을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으로 먹거리를 그나마 풍족하게 들여줄 수 있는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진 동북지역의 땅은 급격한 도시화로, 서남지역은 대규모 단작으로 표토가 고갈되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자본주의에 이제 막 눈을 뜬 신흥공업국들의 도시화와 산업화의 확대는 더욱 빠르게 토양을 콘크리트 밑으로 파묻어버리고 있습니다. 도시근교를 건물과 도로가 잠식하면서 밀려난 공장과 시설은 값싼 농지로 자꾸만 뺏어나갑니다. 대규모 단작과 비료의 과용, 쟁기질로 착취당해 온 토양은 물과 바람으로 침식되어 농지가 아닌 농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물은 주로 30센티미터 내의 겉흙에서 뿌리내리며 자랍니다. 1센티미터의 겉흙을 만드는데 적어도 200년이 넘게 걸리지만 날려버리는 데는 몇 년을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지력 상실로 인한 농지 감소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육식의 증가로 사람과 가축이 식량을 놓고 경쟁하면서 식량위기가 가속

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로 자동차와 경쟁하기도 하지요. 그렇더라도 극한 상황에서는 사료 작물을 사람이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땅이 없이 식량을 만들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지 감소는 한 나라의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보다도 핵 위험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에 대응하는 경작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경작지는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줄어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농지의 개척은 필요합니다. 아시아나 유럽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북미도 남에게 내놓을 여유가 없습니다. 기후온난화로 먹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동토의 시베리아 지역은 기대와 달리 많은 곳이 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남미의 열대우림과 아프리카를 개발하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특히 숲이 없는 열대농지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금세 지력이 고갈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토지거래 시장이 활발합니다. 플랜테이션을 확보하려는 경쟁의 선두는 중국과 일본이며 한국도 그 뒤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95%가 소농이고 앞으로 장기비상사태가 계속되는 절대적 결핍의 시대에 자국의 식량을 남의 나라로 빼앗기는 현실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우니 이를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의 땅에 눈독을 들이기보다 이미 있는 땅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새만금 간척지를 아직도 농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식량자원 기지로써의 농지개발을 목표로 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토목사업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농업용지 대 산업용지의 7:3비율이 뒤집혀서 3:7로 바뀌었습니다. 도리어 기업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멀쩡한 국가가 땅 세탁을 주도한 것입니다. 농지의 감소를 걱정하는 것

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오히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plant factory)이니 버티컬 팜(vertical farm)이니 선전하는 것도 식량위기를 핑계로 한 지칠 줄 모르는 개발주의자들의 농지침탈 계약일 뿐입니다. 식물공장이라니 이렇게 뻔뻔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건물을 높여 농장을 만든다는 생각도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수경재배가 중심이니 토양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한정된 영양소로 키우니 채소들이 겉모양만 멀쩡합니다. 생명에 필요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양소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온전한 음식이 아니지요. LED라지만 전기 소비도 엄청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더 짓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음식과 에너지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화된 농업은 에너지 고갈을 장막 뒤로 숨겨두고 성장을 노래합니다. 농업이 기업의 대열로 들어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가 175만 헥타르는 필요하다는데 그때는 160만 헥타르 밑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 난무할 테지요. 공단이니 산단이니 신도시니 대부분 기름진 전답을 갈아엎개고 들어섭니다. 그럼 자급을 위한 땅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농지를 건물에다 만들겠다는 걸까요?

더 이상 늘어날 농지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농지는 지키고 농지의 개발과 전용은 막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 헌법으로 최저농지면적을 정하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최저농지는 생명줄입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한 번 짓밟힌 농지를 다시 생명이 자라는 살아있는 땅으로 바꾸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최저한도 이상의 전용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농사짓지 않을 사람이 농지를 자산가치로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농지 거래 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국가

가 철저히 환수하여 언감생심 생명을 담보로 한 농지의 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십여 년 전에는 귀농 사례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서 귀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수많은 책과 정보와 교육을 접할 수 있지만 오히려 높은 땅값이 귀농의 진입장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수한 이익으로 국가가 농지를 사들여 국유농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농지면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생명지기를 키우는 젊은 귀농자를 키우기 위해서도 국가의 농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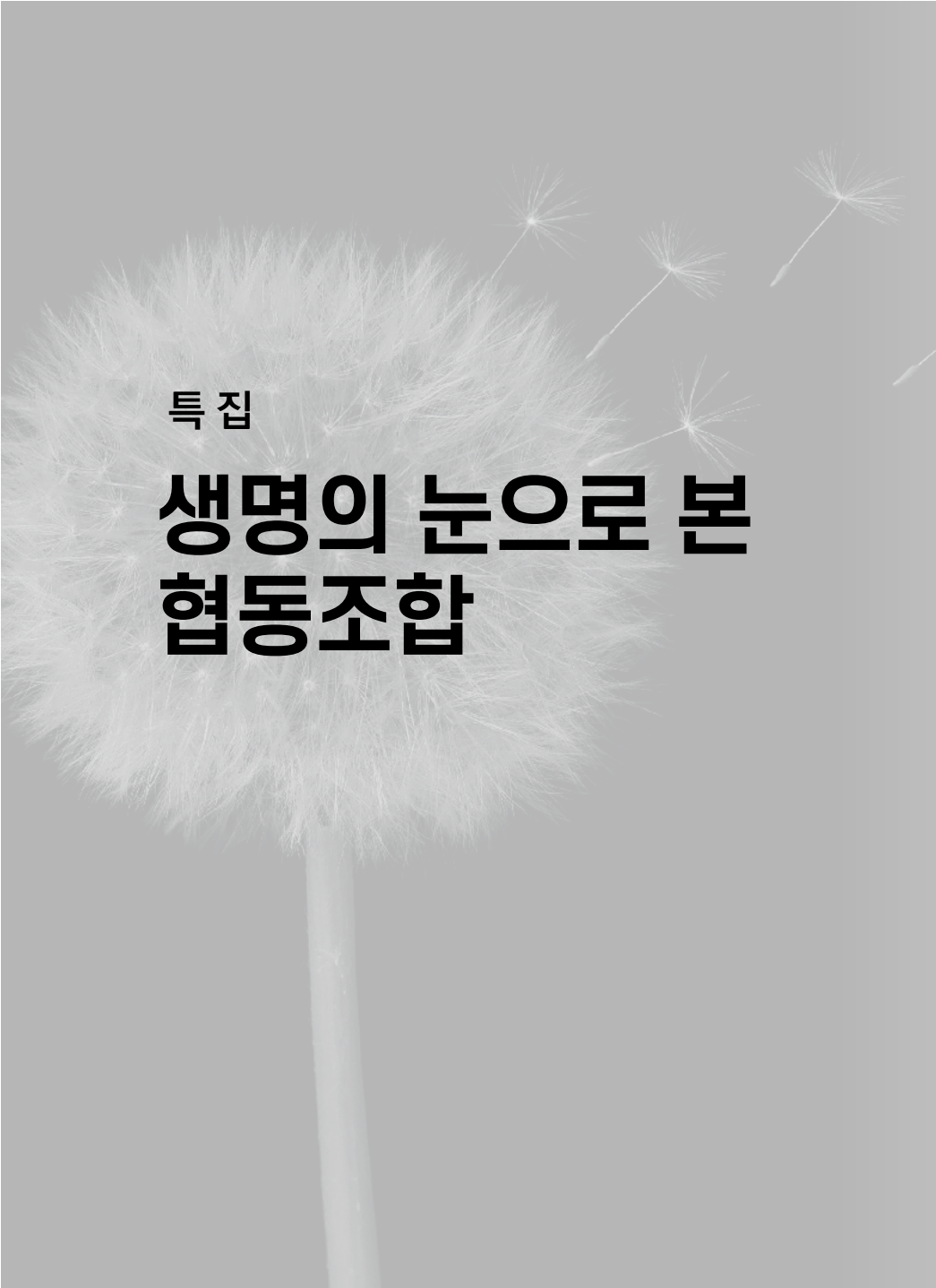
솔직히 법이나 제도가 앞서서 농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도록 부추기는 일은 언제나 국가나 정치인이 아닌 시민의 각성과 여론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농지의 소유를 공공의 영역으로 맡기는 신탁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비록 내 자식일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농지를 상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물려주자는 의도입니다. 절대적으로 농지로서 보전할 것을 명시한 조합에 가입하여 농지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또는 신탁법인 같은 곳에 소유권을 넘기고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신탁법이 존재합니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국민신탁법인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농지기금을 마련하여 농지를 사들이고 농부를 모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태와 자립의 농사를 짓고 가꾸도록 돕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한살림 같은 생협의 소비자들이 나서줘야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농지기금이 붙은 생산물을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가 확보되면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도 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농지를 매개로 먹거리를 나누는 운동입니다. 농지의 감소는 토양의 비옥도 상실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되도록 경운하지 않고 비료는 가능한 적게 주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 멀칭과 탄소질 중심의 퇴비로 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기금으로 짓는 농사는 철저히 자연의 농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농지보전의 뜻이 온전해집니다. ‘Agriculture’는 땅이라는 ‘agri’와 경작이라는

‘culture’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흔히 이 말을 두고 땅을 경작하는 것이 농업이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관행농업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온갖 수단을 가지고 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땅을 파 뒤집고 비료도 만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뜻은 땅이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땅속의 수많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 작물에게 영양을 주는 게 유기농입니다. 비료는 바로 흡수하지만 퇴비는 땅속의 경작자인 미생물이 없으면 바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땅을 빈틈이 많은 폐알구조로 만들어 배수와 보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장일순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지요. 무엇을 위해 하는 사람은 자연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농사는 자연이 짓는 것이며 우리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그래야 땅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유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시애틀 추장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어 소름 끼치게 놀랐습니다. “백인은 어머니인 대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마치 양이나 목결이처럼 사고팔고 약탈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백인의 식욕은 땅을 삼켜버리고 오직 사막만을 남겨 놓을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시애틀 추장이 걱정하던 백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지만은 사고팔 수 없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 인류의 원칙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서 법과 제도가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의 시대지만 농지의 사용가치는 살리고 교환가치는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귀농이란 말도 단지 농사를 짓기 위해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도시적 삶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립하면서 생태계의 일원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대지인 농지에 자유를 돌려줍시다. 도법스님이 서울 시민을 패륜아라고 표현하셨지요. 돈이 안 된다고 무식하다고 모시기 힘들다고 부모를 버리는 행동을 패륜이라고 합니다. 시민을 먹여 살리는 농업, 농촌, 농민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십시오. 더 이상 패륜아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농지는 지켜져야 합니다.



특 집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조합



생명운동과 탈근대
협동운동 · 김용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실험 · 조완형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하여 · 정규호

협동조합은 ‘충분히’
여성적인가? · 하승우

영성과 협동조합 · 주요섭

생명운동과 탈근대 협동운동

협동조합 열풍과 시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는 협동조합으로 열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협동조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정부도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고 연일 행사계획과 보도자료를 내놓는다. 7월 7일 '협동조합의 날' 행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협동조합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도 있었다. 이쯤 되면 한국 사회가 협동조합을 대안경제의 핵심으로 파악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협동조합은 1844년 '로치데일 공정선거자조합'이 처음으로 성공한 이후 17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경제제도인데 왜 하필 이제 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가? 또한 그렇게 각광받을 만한 것인가? 모든 협동조합이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초기 협동조합은 산업자본주의 횡포에 맞선 반독점운동이자 노동자들의 자립적 운동이었다. 당시 자본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독일의 경우는 소농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지역농업위원장

과 수공업자, 소상공인들의 영농 및 운영 자본 조달을 위해 신탁운동이 싹텄다. 당시 금융자본은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항적 방식으로서의 ‘노동조합’과 창조적 방식으로서의 ‘협동조합’이라는 근대대항 무기(?)였다. 특히 협동조합은 인류의 오랜 이상적 공동체 건설에 대한 상상과 실험 속에서 싹텄고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우애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은 사회주의 사상을 싹트게 하는 촉매가 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초기 협동조합은 독점적이고 착취적인 자본주의적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고 도시에서는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 농촌에서는 수공업자와 농민들, 즉 약자들의 조합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약 1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탈근대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반자본주의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또한 그 안에서 독점자본과 경쟁하면서 생존과 확장을 동시에 꾀해온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탈근대적인 측면에서 또는 자본주의 폐해를 넘어설 대안으로 조망받을 때 우리는 ‘어떤 정신(사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그러한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이 자체의 정형화된 틀이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시대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여 진화해온 개방적인 운동이고 본질적으로 인류의 오랜 열망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생명운동의 시선에서 협동운동은 재해석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인류의 다양한 협동운동의 형식과 제도 중에서 체계적으로 정리·정착되고 세계화된 제도의 하나이다. 한살림으로 대표되는 ‘생명운동’은 협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식과 제도¹⁾ 중에서 현재까지의 협동조합이 가지는 장점을 창조

1) 사실 우리나라의 계나 두레, 서구의 다양한 마을단위 우애에 기초한 협동 전통들, 세계의 다양한 공동체와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임은 모두 협동운동의 한 형식이며 언제든지 현실의 운동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다.

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운동의 지평을 열었다. 이것은 서구의 오랜 전통을 가진 협동조합운동과는 다른 생각과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새로운 시도는 스스로의 자산이고 훌륭한 씨앗이다.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폭넓은 조망과 성찰, 평가없이 조성되는 협동조합운동의 봄은 실속이 빈 약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배려 등에 기대어 협동조합에 고무되고 있는 시민사회 역시, 다음과 같은 조건들로 인해 협동조합운동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것이다.

첫째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운영 경험을 가진 활동가(지도자) 층이 빈곤하다. 협동조합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충분한 이론적 학습과 고민을 거친 지도자가 길러지기 전에 협동조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실제 협동조합의 조직화가 진행될 때 성공과 안착에 희망을 갖기 힘들다.

둘째로, 협동운동의 기본은 민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자율적인 조직인데 현재의 흐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결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협동조합 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관 주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생명력과 자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는 최근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협동조합 이론과 경영서들이 절대적으로 빈곤하다. 협동조합의 170년에 가까운 오랜 경험 속에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 함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협동운동진영은 아직 서구 협동운동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다양한 사례들을 풍부히 알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 역시 자칫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미성숙성이다. 유사의료생협과 유사대안교육과 같은 천박성이 횡행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의 천민자본주의적 속성과 한국 시민사회의 미성숙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속에

서 협동조합법과 정부의 협동조합 장려 정책이 자칫 유사협동조합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신뢰의 싹을 잘라버릴 위험을 낳는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 상황에 맞는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를 우선 잡아야 한다. 그리고 왜 현재 한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구와 다른 조건과 인식은 무엇인지 등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제기된 생명사상과 생명협동운동의 성과-이것은 단순히 한살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주의 지역협동운동 사례나 실상사가 있는 산내의 공동체운동 성과, 다양한 대안교육운동 성과, 귀농운동본부, 녹색평론의 성과 등을 포괄한다. -와 의미를 자기 자산으로 할 때 희망이 구체화됨을 의미한다.

근대 협동조합의 형성과 분위기

서구에서 태동된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근대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산업혁명과 함께 형성된 근대민주주의와 근대국가, 시장경제체제, 자유·평등·우애로 대변되는 이념적 가치 세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근대국가체제나 시장경제체제를 넘어서려 하지도 않고 또한 근대 가치를 넘어서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근대국가체제 안에서 근대민주주의 원칙 아래 운영하고, 근대시장체제 안에서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경영하려고 하며,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은 '자유·평등·우애'의 근대 가치에 충실하다. 어찌 보면 협동조합이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국가의 다양한 폭력과 욕망을 넘어서 자구적으로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특성은 근대의 폭력과 수탈에 시달린 사람들에게도 그렇

고 자본주의와 근대를 초극하려는 다양한 운동진영에도 매력적인 희망을 준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이러한 자체의 근대성 때문에 근대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을 때, 또는 협동조합을 끌고 갈 희망을 갖지 못할 때 협동조합은 시장과 국가에 의해 굴절될 가능성을 이미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 왔는지를 아는 것은 탈근대적 생명협동운동이 협동조합운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진화한 오늘의 현실에서 생명운동이 만나고 바라보는 협동조합운동이 만개하고 확장할 것이다.

먼저 로치데일 공정선거자조합이 설립될 즈음(1840년대)의 영국 사회 현실과 대다수 도시노동자들의 삶의 실상은 어떠했는지 엥겔스²⁾의 시각을 빌려보자.

노동자가 구입하는 감자는 열등한 것이고 채소도 시들은 것이며 치즈는 오래되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고 돼지고기는 고약한 냄새가 나며 소고기는 불품없고 질기며 늙고 병들어 자연사한 소의 고기여서 처음부터 신선하지 않고 때로는 반쯤 부패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자들은 대개 열등한 상품을 구입하여 싸게 파는 행상인들이다.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보잘 것 없는 수입으로 필요한 양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3쪽)

노동자계급은 중간계급의 돈 욕심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희생당한다. 제조업자와 상인은 소비자의 건강은 조금치도 생각하지 않고 극히 유해한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식료품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104쪽)

2)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F. 엥겔스, 박준식외 옮김, 도서출판 두리)에서 인용했으며 해당 쪽수를 표기하였다.

소매상들은 일반적으로 가짜 저울이나 가짜 자를 사용한다. 경찰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범죄 행위가 수없이 발견된다. 이러한 형태의 속임수가 얼마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맨체스터 가디언〉지에서 발췌한 다음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844년 6월 16일 로치데일 지방재판소 : 4명의 소매상인이 가벼운 저울을 사용한 혐의로 5~10실링의 벌금형을 받았다.

스톡포트 지방재판소 : 두 소매상인이 1실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가벼운 저울 7개와 가짜 저울은 1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명 다 경고를 받았다.

6월 19일, 로치데일 지방재판소 : 소매상인 한 명이 5실링의 벌금을 받았다.

6월 22일, 맨체스터 치안재판소 : 19명의 소매상인들이 2실링 6펜스에서 2파운드까지 벌금형을 받았다.

7월 13일 맨체스터....., 7월 24일 로치데일....., 7월 27일 볼튼....., 8월 3일 볼튼....., (107쪽)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해서 그날 벌어 그날 쓰는 식으로 살아간다. 여러 집단이 모여 사는 사회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가족들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수단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가장 여건이 좋은 노동자들조차 실직과 기아의 위기에 항상적으로 직면해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이 때문에 죽는다. (108쪽)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노동자들은 아주 오래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이상촌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로버트 오웬과 윌리엄 킹의 뉴라나크 실험과 초기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실패 경험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어찌되었든 로치데일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원칙을 들여다보는 것은 협동조합의 시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을 창립한 사람들은 그 이전해에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해고된 28명의 노동자들이었다. 처음 해고된 사람들은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의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을 창립할 때는 28명만이 남게 되었다. 이때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운영원칙에는 ‘정량·정품을 제 가격에’라는 원칙이 있다. 이것은 초기협동조합이 반독점운동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주권운동이며 약자로서의 생활방위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모습

1814년 빈 회의를 통해 느슨한 독일연방으로 출범한 독일에서는 왕정복고를 놓고 메테르니히가 통합과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세력을 탄압하였다. 관세동맹은 독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시켰다. 한편으로 독일의 서부와 중부지방에서는 농노제가 소멸되어 농지를 할양 받은 소농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영농자금이 없어 고리대금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려 농자재나 새끼돼지를 사서 수확 또는 사육해 출하한 뒤에 돈을 갚았는데, 워낙 고리채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빚은 늘어나고만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840년대 감자의 흉작이 찾아왔고 1845-1847년의 곡물흉작은 소농의 생존위기를 불러왔다. 1848년 3월 혁명이 일어났고 메테르니히는 실각했다. 그러나 빌헬름4세 황제와 자유주의세력 간의 갈등 속에 혼란기간이 지속되고 소농들은 시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862년 비스마르크 수상이 앉을 때까지 계속된다. 라이파이젠은 1845년 마을의 촌장에 취임한 이후 1848년 빛의 지옥에서 허덕이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경제대출조합과 빵 조합을 만들었다.

초기 라이파이젠 조합은 라이파이젠 자신이 기독교신자였기에 기독교에 바탕을 둔 박애주의 정신에 뿌리박은 자선적 성격의 조합이었다. 즉 돈 있는 사람들이 출연하고 이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베푸는 방식이었다. 그

러나 후에 이것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1864년경에 이르면 돈을 빌린 사람도 출자하고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끼리 서로 돕는 상호부조와 자력갱생의 신용대출조합으로 거듭나게 된다.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라는 슬로건은 이즈음부터 사용되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도시에서는 독일수공업자들이 길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서히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있었다. 길드 제도 아래서의 도제공과 하청업체들은 이후 독일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직공과 수공업체제로 변환되는 데, 작센 주의 텔리체 읍장이었던 술체는 읍 주민의 고통스러운 삶 이면에 있는 것을 자본의 부족으로 보고 이를 위해 1849년 공제조합(질병과 사망)과 구두제조직공을 위한 원료구매조합을 결성했으며 이어서 1850년에는 직공들을 중심으로 대부조합을 만들었다. 라이파이젠과 술체에 의해 독일의 협동조합 전통이 세워졌다.

프랑스의 모습

샤를 푸리에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계급 대립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업과 산업자본의 횡포를 ‘최대의 악’으로 보았다. 그는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노동의 정의와 사회화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는 땅과 건물(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팔랑주에서 공동으로 노동하여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조합 같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토록 하는 유토피아를 생각하였다. 특히 푸리에는 과일생산이 노동자들을 빈곤하게 만든다고 보고 생산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노동자의 욕망은 선하게 보았다. 푸리에의 생각은 미국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은 생시몽이었는데 그 역시 소유권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결국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공동체적인 협동조합의 소유로 하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시몽과 푸리에의 생각은 노동자협동조합의 현

실화에 강한 자극을 주었다. 생시몽과 푸리에는 협동조합을 직접 조직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만 들어지고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초기 협동조합 태동기의 상황을 보면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Association)로 출발했지만 산업자본주의체제와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 시선과 과학주의에 기초한 성장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폭력적인 산업자본주의 횡포와 근대 국가가 초기의 혼란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구적이고 자립적인 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후 전개된 상황에서도 확인되지만 산업 및 유통 자본과 경쟁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며 산업공황을 만났을 때는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곤란에 봉착하기도 한다. 영국의 소비조합이나 독일의 신협과 농협, 프랑스의 노동자 협동조합은 산업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강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산업자본에 저항한 자립경제와 공동체에 대한 열망에 기초하고 있다.

초기협동조합은 사회의 절대다수자인 노동자와 농민 등 경제적 약자들이 우애의 협동조합으로 결집하고 구매와 이용을 집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구의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해온 과정은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하며 부침을 거듭해왔다. 즉 협동조합 역시 자본기업과 경쟁하면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자본기업을 꺾기도 하며 때로는 침몰하기도 해온 역사이다. 소비조합만을 놓고 본다면 경쟁에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은 협동조합이 어떤 대안사회로의 전망을 가지고 운동해 왔다가보다는 반독점운동으로서 자본기업과의 경쟁에 치중해 왔다는 점일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국가를 변혁하거나 대안사

회로 나아가는 목표가 아니라 협동조합적 자본주의로의 대체를 꿈꿔 왔지만 그 역시 험난한 경쟁을 통해서 현재의 지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적 자본주의 노선과 협동조합을 사회주의 이행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는 입장은 둘 다 근대성의 한계에 갇혀 있다.

한국에서의 협동운동과 생명운동의 등장

한국 사회에 전근대적인 협동운동인 계나 두레가 아닌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아직도 논란거리이나 대체적으로 1920년을 전후한 시기로 본다. YMCA, 천도교 등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운동과 재일유학생들의 환국과 신간회 등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농촌소비조합운동이 1920년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때의 협동조합은 소비조합과 공제조합이 중심이었으며 농촌조합의 경우 농자재를 공동구매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한때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던 자주적인 협동조합은 1938년 일제의 해산령으로 모두 사라지고 만다.

민간 협동조합운동은 해방 후 몽양 여운형의 인민위원회를 따라 전국에 다시 등장했지만 1948년 미군정의 인민위원회 불법화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 공교로운 것은 이 시기까지 협동조합이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과제 앞에서 전개된 운동이었기에 좌익으로 몰려 해산당했다는 사실이다. 일제와 미군정의 이러한 시선(視線)은 주민의 자발적 결사체가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좌익적 경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권력이 부담스러워했으며 협동조합운동가들을 사회주의자로 몰아 탄압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극심한 좌우대립의 최정점인 한국전쟁은 한국에서 민간 협동조합이 발흥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조건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민간 협동조합은 외국인이자 성직자인 메리 가별수녀에 의해 1959년에야 다시 시작되며 가톨릭이라는 조직을 배경으로

신용협동운동으로 출발하게 된다. 한편 1960년 상업은행에 세워진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의 소비조합운동도 있다. 이 운동은 이승만 정부 아래서 어용노총으로 세워진 한국노총을 체제 내화하기 위한 당근 정책으로 시작되었는데 박정희 권력과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부산의 항운노조와 광산노조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들이 있었다. 항운노조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광산노조 소비조합은 70년대 원주교구의 활동과 맞물려 생필품을 공동구매함으로써 소비조합 본연의 반독점 운동을 전개한 성과들이 있다.

1972년 남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가톨릭 원주교구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지역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은 그 자체로 한국협동조합운동사에 길이 남는 장면이다. 원주를 중심으로 한 협동운동은 신용협동조합운동과 소비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1961년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개량,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보급, 농기계 보급사업 등이 새마을운동과 함께 시작되었고, 한편으로 박정희 정권은 수출을 통한 산업증대 전략으로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농촌에서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농약중독으로 인한 농민의 죽음을 불러왔으며, 도시에서는 무분별한 산업전략으로 인해 도심 하천의 극심한 오염과 대기오염 및 도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였다. 또한 이 정책은 농업 인구의 급감과 도시 인구의 급증을 불러왔는데, 1975년을 기점으로 농업 인구가 48%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원주의 운동가들은 농촌과 광산 및 어촌 지역의 협동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성찰적인 시대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을 파괴와 죽음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인간을 개인주의화 하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 생명본연의 인식을 가로막는 산업문명과 기계문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운

동을 모색한 것이다. 장일순 선생과 박재일 선생을 필두로 1977년 경부터 시작된 고민은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폭력적으로 자연을 침탈하고 인간과 인간사회를 파괴하는 현대 산업문명과 근대국가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간화와 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생명사상과 운동을 제창하게 된다.

“한살림 운동은 몇십 년 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70년대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반독재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종전의 맑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악순환이 계속 되겠더라 말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마구 뿌리고 도시 산업화를 꾀하는 걸 보니 이 강토 전체가 황폐화 되겠더라고요. 환경도 살고, 우리도 살자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군요. 6.3사태 이후에 원주에서 농촌운동을 하려고 한 박재일씨와 77년부터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공동체 내지는 농토를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했어요.”³⁾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 규모에서 생명의 회복과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생명을 일체의 가치관, 인생관, 사회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모든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할 것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에 의한 개인 및 사회적 생명의 진정한 부활, 해방이 요구되고 있다. 한 포기의 배추에 있어서의 참된 생명력의 문제로부터 이론 물리학의 “장”의 원리나 철학에서의 범주론과 연표방식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전환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그에 입각한 일체 인간과 자연생명계까지를 포함하는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⁴⁾

3)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123쪽

4) 1982년경 원주에서 발행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서에서 따옴. 이 문서는 김지하에 의해 기초가 잡히고 원주활동가들이 공동으로 교정을 보고 완성한 문서로 추정된다.

우리는 200여 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알고 있다. 소농과 농촌공동체의 몰락, 농업자본의 독점화와 산업자본의 성장,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지구를 과소비하는 도시와 도시문명의 역사는 곧 자본주의 역사이자 생명의 파괴와 죽음의 역사이다. 또한 우리는 근대의 또 다른 얼굴인 사회주의 운동의 시작과 혁명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기억한다. 국유화와 협동농장을 통해 인간의 자율을 억압한 사회, 자본 대신 국가독점과 테크노크라트의 지배를 통해 역시 인류의 진화를 막아버린 체제이다. 그것은 모두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기초해 있으며 기계론적 과학주의와 성장론에 기초한 산업문명이다.

현대 자본주의 동력이었던 화석연료는 종언을 고하고 있고 아직 새로운 에너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핵 발전과 핵무기는 지구적 차원의 행성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세계인구는 70억을 넘어섰는데 기아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식량 생산과 분배는 위협받고 있다. 세계의 밀림은 이제 지구 표면적의 5%도 남아 있지 않으며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정신분열적 증상과 범죄 현상은 인류사회가 생긴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의 위기가 도래해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화 된 근대 국가권력이 통치하는 세계에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권력이 생명을 지키지 않음은 역사가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가 30여 년 전의 초기문서⁵⁾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것이 보다 대중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1985년 원주소비조합의 태동과 1986년 한살림농산의 설립 그리고, 1989년의 『한살림선언』이다. 그런데 초기문서에서 확인되듯 생명운동은 기본적으로 현대 산업문명과 이를 이끌어 온 이원론적인 근대

5) 앞서 이야기 한 원주에서 발행된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서로 1982년경 완성된 것임,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출고 '생명운동의 형성과 전개'참조, 이하에서는 '초기문서'라 칭함

서구 철학을 넘어서는 것이자, 이기적이며 경쟁적인 개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 이성과 감성, 개인과 사회, 나와 너를 나누어 사고하는 이원론이자 주체철학의 폐해를 넘어서자는 이야기이다. 이 이원론이 끌고 온 사회의 모습이 곧 생명 파괴와 위기의 사회라고 진단하는 것이다.

“뿌리 뽑힌 민중적 삶, 인간성의 상실, 폭력 숭배, 소비 숭배, 가학·피학 증세의 보편화, 인간 및 범 생명의 물질화, 테러리즘, 복수의 악순환, 이러한 집단적 정신 분열의 현상은 죽음의 옆얼굴이다. 이렇듯, 빈부의 격차에서부터 생태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한 현상의 내부를 꿰뚫어 흐르고 있는 것은 생명 경시, 생명 파괴, 반생명의 악마적 경향이다. 이에 대응하여 역사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 규모에서 생명 회복과 생명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생명을 일체의 가치관, 인생관, 사회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모든 문화,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할 것과 협동적 삶의 확장에 의한 개인 및 사회적 생명의 진정한 부활, 해방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문서의 개요)

또한 한살림선언은 산업문명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진단하고 있다.

- 첫째 핵 위협과 공포이다.
- 둘째 자연환경의 파괴이다.
- 셋째 자원 고갈과 인구 폭발이다.
- 넷째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열적 사회현상이다.
- 다섯째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이다.
- 여섯째 중앙집권화 된 기술관료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이다.
- 일곱째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위기이다.

생명사상과 운동의 이러한 현실진단은 모든 운동에서 협동적 생존과 연대의 확장을 기초로 다양한 계층과 계급, 다양한 분야의 운동과 연대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진화와 사회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과 입장은 전통적인 서구 합리주의와 근대 사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탈근대적 입장은 협동운동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독점자본에 반대하는 소비조합을 넘어서 생명 본래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을 중시하고 생명 본래의 특질인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유기농업과 직거래를 강조하는 ‘생활협동조합’⁶⁾으로의 진화를 이루어냈다. 결국 생명운동은 협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은 다양한 협동운동 가운데 제도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운동의 한 형태이다. 다만 생명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협동운동은 근대적 시선의 반독점운동이나 이원론적인 근대사상, 자본주의의 시선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산업자본이나 유통자본과의 경쟁을 통한 성장이나 소비자의 편익과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운동이 인간과 자연을 같은 층위에서 같은 기원을 가진 절대 의존적 존재로 바라보며 그 중에서 인간은 신령스러운 존재로 진화해왔고 진화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한다고 할 때, 생명운동이 지향하는 협동운동은 협동운동의 주체인 인간의 생명활동 범주 내에서의 자연과 협동, 이웃과의 협동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운동을 바탕으로 전국에 접속하고 세계에 접속하는 협동운동이다. 결국 생명운동의 가장 큰 본질 중 하나는 협동운동이자 공동체운동이다. 그것은 소유영역에서의 협동(호혜적 소유)뿐만 아니라 생산과 노동영역에서의 협동(호혜적 노동과 생산), 교환과 거래영역에서 역시 협동(호혜적 거래)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운동을 상정한다. 여기서 호혜란 자연과

6) 생활협동조합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사용하였지만 한국도 생명운동의 대중화 시점인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전통적 서구협동조합인 ‘소비조합’의 틀을 넘어서는 인식과 실천이다. 최근 서구에서도 생활(Life)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소비조합(Consumer Co-operative)을 사용하고 내용도 아직은 반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간 사이의 호혜이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호혜이다. 생명운동이 지향하는 협동의 방향이 서구 근대성 아래 진화해 온 대다수 협동조합과 비교해 갖는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자연과 인간을 상호의존적인 생명관계로 인식한다면 생산에 있어서도 유기농업과 같이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이로운 생산을 지향해야 하고, 노동 역시 끝없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족과 자급 그리고 생명활동이 풍요로운 노동을 지향한다. 거래관계 역시 자본주의 시장처럼 욕망의 실현을 위한 욕망의 거래가 아니라 자족과 검약을 바탕으로 한 최소관리비용을 포함한 직거래, 그리고 필요한 사람 또는 공동체와의 나눔, 지역화폐와 같은 공동체적 거래를 호혜적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서구 협동조합은 한국의 생명협동운동이 지향하는 이러한 호혜성의 원칙에서 보면 한계와 결함이 많은 사례이다. 이를테면 몬드라곤복합체의 경우 생태적 관점의 결여, 성장주의적 관점과 시장에서의 경쟁, 조합 내 노동과 조합 외 노동의 차별 등은 그 수많은 성과와 진화에도 불구하고 생명운동진영에서 볼 때 결핍과 아쉬움일 수밖에 없다. 특히 몬드라곤 노동자들의 복지가 어딘가에서의 이윤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 내 어디일 것이다. 소비조합 분야의 최대 성공자로 종종 인용되는 스웨덴 소비조합 총연맹이 까르프를 인수했다는 점은 시장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점이지 이것이 곧 협동운동의 미래와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생명협동운동 진영에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트렌토나 볼로냐의 사례가 독점자본주의를 넘어서 민의 자립경제의 가능성을 점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이 전반적인 세계 시장의 동향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와 생명공동체에 대한 접근철학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는 운동의 현실이 한국 사회의 현장에 위치해 있으며 탈근대적 생명사상에 기초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대 협동조합이 사회적 소유 이론에 근거한 것은 틀림이 없고 이것은 자

본주의 사적소유 이론이나 사회주의의 국가적 소유 이론에 비하면 진실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호혜적인 생산과 노동, 호혜적인 거래로까지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협동조합은 성장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근대협동조합으로부터 소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생산, 그리고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호혜적 협동운동으로의 진화는 일본과 한국의 협동운동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협동조합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위치에 와 있지만 서유럽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산력 진보에 기초한 성장주의, 자본과의 경쟁 끝에 위기를 맞았듯이 또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태내에 존재함으로써 자본주의 구심력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며 사상적 비전을 갖지 못함으로써 전술적 자립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유럽 협동조합운동의 퇴조에 대한 일본 협동조합 이론가 후루사와 고유(古澤廣祐)의 다음 진단은 눈여겨 볼 만하다.

“현대 사회 속에서 협동조합은 실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구미 선진 국가들에서는 현상적으로 볼 때 협동조합, 특히 생협 활동이 크든 작든 곤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기존의 사회경제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모순에 대하여 대항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해 두고 싶다.

대항적이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생활방위적인 측면과 생활창조적인 측면이 그것이다. 종래의 협동조합운동, 예를 들면 생협운동은 무엇보다 생활방위적인 면을 강하게 지니고 성립하였다. 가격의 안정이나 공정성, 품질보증, 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하여 폭넓은 지지를 얻어 온 것이다. 그래서 시장 시스템이 그런 대로 유효하게 기능하고, 거기에서 경쟁 원리나 규모의 경제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면,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으로의 경쟁력은 자본력에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에 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구미사회의 생협이 쇠퇴한 요인이었다.

단지 경제력에 있어서의 대항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협동조합은 상사(商社)에 대항하여 상사가 되고 슈퍼마켓에 대항하여 스스로 슈퍼마켓이 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시장시스템과 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승부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좌표축을 상정하여 독자적인 평가 기준이나 가치나 의미를 가진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든지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⁷⁾

즉 서구협동조합운동을 경제적인 운동이나 사회적 노동을 실현하는 운동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시장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상태에 따라 협동조합의 존립과 성공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UN과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사유와 분석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실의 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근대체제 전반의 위기로 볼 것인가?, 새로운 자본주의(협동조합적 자본주의(?))또는 사회적 자본주의)로의 대체인가 아니면 자연과 인간의 공생, 인간 간의 공생에 기초한 인간의 진화와 사회적 진화의 전환점으로 볼 것인가? 협동조합운동은 그 자체로 의미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류와 우주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생명사상과 결합해 새롭게 진화해야 할 것이다.

7) 2003년 생명문화포럼 자료집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을...

그렇다면 생명운동과 현대 협동조합운동은 대립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응관계에 있고 한국 사회의 최근 경험 이외에는 큰 접점이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협동운동과 생명운동은 서로 장단점을 흡수하며 함께 창조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생명운동의 입장에서 협동운동은 포괄적이고 진화적 관계의 연장에 있다. 생명운동진영은 서구 근대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과와 진화 과정을 배우고 학습해야 한다. 그렇다고 서구 근대협동조합을 따라가거나 사고를 퇴행시킬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간 협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무엇인지 생명운동의 경험에 비추어 짚어보고 대안운동이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생명운동은 기계적 세계관을 넘어 유기적 전체로서 생명을 인식하며, 생명은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진화하는 존재임을 확인한다. 또한 생명은 순환적인 되먹임체제에 의해 활동하며 생명의 본질이 현상의 물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신임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모든 생명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유기적 연관성 속에 존재하며 생명의 유지 역시 전체로서의 생명 질서에 의존해 가능하기에 생명의 존재적 본질을 협동(공동체)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생명운동은 협동운동이지만 일원론적 인식에 기초한 협동운동이고 자족과 자립의 협동운동을 지향한다. 그것은 직선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 이론과 차원을 달리한다.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반생태주의와 대립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영혼 없는 기계모형으로 보는 행동과학이나 정신분석이론을 넘어 우주적 존재이자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발견해 낸다.

현대 협동조합은 사적소유를 넘어서 공동체적 소유와 공동체적 삶에 대한 명확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 협동조합운동은 또한 근대성의 한계에 갇혀 있음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운동사에서 수많은 협동조합의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시장에서 사기업과의 경쟁이나 자본주의 기업을 흥내내다 이루어진 일임을 협동조합운동사는 보여주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대 서구협동조합운동의 경우 태동 시기의 폭력적인 산업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자구책으로서의 자립과 공동체적 열망이 근대협동조합운동의 문을 열었다면, 생명공동체운동은 21세기 현대 산업자본주의의 끝 지점에서 서구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탈근대적 문제제기와 실천의 차별성이 있다. 물론 19세기와 21세기 사이에 협동조합운동 또한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생명운동과 창조적으로 만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 무비판적, 무성찰적으로 번지는 협동조합운동이 자칫 서구의 근대 협동조합운동이 걸어온 간난의 길을 상당 시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며 생명운동의 시선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래 유럽으로부터 온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 생산조합이란 압정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만, 지금은 대기업의 하청업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신용’도 ‘협동’도 다른 개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그 답이 나와 있는 듯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만, 그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창조적 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⁸⁾

협동조합운동이 운동성과 정신을 놓치면 쉽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경

8)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풀 한 포기도 공경으로」, 1990년 6월 일본인의 방문을 받고 들려준 이야기, 일본관서 기공협회의 기관지 〈脈脈〉제 31호에 실린 것을 1997년 최성현의 번역으로 〈녹색평론〉 3-4월호에 재수록.

제적 동기만 남아 경영주의로 흐르게 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무수한 단위농협들과 신협을 보면 그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협동조합의 일부도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다. ICA에서 제정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개정해온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협동조합이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장치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정의와 가치, 원칙 또한 1995년 ICA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개정된 것이다. 협동조합들이 ICA가 정한 정의와 가치, 원칙만 충실히 준수해도 협동조합은 상당한 진화를 이룩하고 사회 진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부침을 거듭한 것은 개개 협동조합이 현실의 시장과 권력에 늘상 노출되어 있고 현실의 철학적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협동조합 그룹(지역이든 부문이든)의 공통점은 그들만의 창립자 정신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요한 임직원들은 ICA가 선언한 가치나 원칙들도 준수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창립자 정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로치데일 선구자조합은 창립정신을 8원칙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몬드라곤은 호세 신부의 정신을 그들의 10원칙에 담아 지켜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협동조합의 포괄적인 정신이 있을 뿐 구체적 현실에서는 창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정신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협동운동 또한 다양한 설립주체들,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과 정신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것은 상당한 실패를 포함해서 진행될 것이다.

한편 한국 사회 민간 협동운동의 중요한 한 주류는 생명사상에 기반한 '생명협동운동'이다. 한살림을 기점으로 시작된 생활협동운동과 지역공동체운동,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동공동체운동 등은 생명협동운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협동운동은 대체적으로 기존

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되 다음과 같은 공통된 고유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일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과 자연의 신령스러움을 존중한다.

둘째, 운동의 현장을 지역으로 파악하고 지역에 다양한 생명협동 공동체경제를 만들고 확산한다.

셋째, 자율적인 사람, 자립적인 경제, 자치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넷째, 물질적 성장만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진화를 도모한다.

다섯째, 생명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저항과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활동을 함께 지향한다.

이상의 가치들은 한국의 생명운동이 협동운동을 통해 경제적 목적과 생활편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을 통한 급격한 변혁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를 필두로 한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민(民)의 생활운동이며 협동운동을 그 중심에 둔 적극적인 자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확장과 연대의 생명공동체운동

생명운동은 반독점운동과 어떠한 관계여야 할까? 저항적 실천의 반독점 협동운동과 탈근대와 창조적 실천의 생명협동운동은 함께 가야 하는 운동이다. 그것은 아직 현실의 환경상 진화하지 못한 영역과 현실의 문제를 넘고자 하는 적극적 진화의지의 차이 정도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

실은 반독점운동으로서의 협동운동도 아직은 필요하고 반(反)기계 문명 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도 필요하다. 협동운동에 있어서 일종의 ‘기우뚱한 균형’이다. 그것은 생명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확장과 연대의 한 영역이 될 것이다.

확장운동은 주체를 중심으로 주체의 주변을 동화시킴으로서 넓혀나가는 운동이다. 연대운동은 옆으로 손을 잡는 운동이다. 생명운동진영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생명운동을 창조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농산물 생산의 마을공동체운동, 가공의 생산협동조합운동, 생활상의 다양한 생필품의 자급 협동운동, 문화적으로는 도서관, 어린이집, 대안교육, 문화센터 등도 협동조합으로 모색할 수 있다.

연대운동은 생명협동운동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반독점 협동운동과 연대해 나가는 것이다. 공동체운동 일반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국가와 자본에 대응하여 저항하는 운동에 생명운동이 함께해야 하고, 시선은 다르더라도 지역공동체운동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협동운동에 연대해야 한다. 또한 이미 생필품이 되어버린 설탕이나 우리나라에서 전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옷감에 대해 반독점운동의 일환으로 공정무역과 해외의 협동공동체 지원 운동을 함께할 수 있다. 특히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지 문제와 영농 주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농촌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지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어 농지 값이 급등한 현실은 영농 후계와 귀농을 어렵게 함으로서 생명협동운동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지의 민 공유(民共有) 운동으로서 농지신탁협동조합운동을 통해 국가 소유와 사적 소유를 넘어서는 생명협동운동의 신기원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농지신탁협동운동은 그 자체로 생명운동진영의 확장운동영역이며 동시에 반독점 협동운동진영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과 연대해야 풍성해지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명운동은 이러한 확장과 연대의 협동운동을 통해 다음 세상으로 질적

으로 비약·포월(抱越)하는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초기부터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민중운동, 특히 생명과 협동을 가치와 실천의 핵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은 마땅히 총체적인 연대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민회, 노조, 신협, 소협, 노청, 사선 등은 전체적인 운동 과정에서 협력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유관 단체들과 긴밀한 정보 교환 및 프로젝트 내용의 동일성과 호흡의 일치를 협의해야 하며 동일한 운동을 동시에 집행토록 제도적 보장과 자금 지원 등 여러 문제들의 해결점을 협의하여 찾아야 한다. 생명운동은 또한 사회운동이며 동시에 영성운동이다. 따라서 여러 종교단체와 신구기독교회 및 수도단체나 수양단체들과 협력, 연대가 강화되어야 하고 다른 행동단체나 일반사회단체 및 기구와 연대를 강화하고 이것을 지식인, 청소년, 직업여성, 주부, 소시민, 상인, 군인, 학생, 언론인, 연예인, 실업인, 공무원, 문인, 예술가들 속으로 지속적, 적극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나아가 외국의 민중운동 및 교회운동, 생명보호운동, 평화운동 등과의 연대 강화는 당연한 일이며 생명과 협동의 확장적 총체성이 그대로 요구하는 바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조건은 가장 먼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영성적 차원의 변화, 영적 능력의 증대, 즉 생명에의 귀의, 의식화가 얼마만큼 빛나게 이루어지느냐에 있다.⁹⁾

9) 앞의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서에서 따옴(본문 21쪽)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실험

들어가며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협동해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세상을 꿈꾸며 시작되었다. 지난 26년 동안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적잖은 조직 및 사업의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협동운동의 가능성과 지평을 열었다. 그 배경에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 이윤보다는 협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생산활동에 전념해 온 생산자들과 이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실천해 온 소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한살림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슬로건에서 나타나듯 책임생산과 책임소비를 통해 도농상생의 협동사회경제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연대하는 도농상생의 협동

*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사회경제 영역을 창출해낸 매우 중요한 사례로써, 국가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의 지배를 넘어서 협동사회경제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과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한살림이 제기하고 추진해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협동운동’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이어 새로운 협동운동의 수준과 단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도농상생의 한살림 협동운동의 성격과 내용

먼저 한살림이 일찍부터 제기하고 실천·지향해온 새로운 협동운동의 성격과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살림은 도농 연대형 협동운동이다

한살림은 농민운동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지만 전통적 농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농민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살림은 농민 권익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생명공동체 회복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농민운동을 제기하였다. 이런 새로운 차원의 농민운동은 ‘유기농’을 매개로 한 자연과 인간의 공생 실천, 인간과 인간의 협동 실천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공생 실천, 생산과 소비의 협동 실천이라는 지향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새로운 방향의 농민운동은 이후 생태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맞물려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과 전면개방 국면에서 대안운동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한살림은 농촌의 희생과 농업의 피해에 따른 농민생존권 투쟁에 집중하는 농민 권익 중심의 전통적 농민운동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농민운동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살림은 전통적 생협운동(소비자협동조합)의 실천 경험과 힘을 계승하

여 시작되었지만, 전통적 생협이 갖는 제약과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차원의 생협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값싸고 좋은 것’만을 바라는 소비자 권의 우선의 전통적 소비자운동과 전통적 생협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생협운동이라는 성격과 지향을 지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 권리나 주권을 내건 전통적 생협의 의미와 성격을 넘어서 ‘농업’이 지니는 공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새로운 생협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처럼 한살림은 전통적 농민운동과 전통적 생협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단·대립된 관계를 극복해가는 도농 연대의 새로운 협동운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다. 이것은 한살림이 유통경로 단축과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뛰어넘어 직거래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켰음을 말해준다.

한살림은 도농 제휴형 협동운동이다

한살림은 유기농 직거래를 통한 가격, 품질, 안전성 등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시장유통에서 평가되지 않는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 가치를 중시한다. 이처럼 한살림은 기존 시장경제시스템의 평가 기준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항하여 독자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도농 제휴형 협동운동을 전개해왔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시장경제에 지배되지 않으며 환경 부하가 높지 않은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도농공동체운동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하는 관계에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안전한 물품이 안정된 가격(시장가격과 달리 재생산 가능한 가격)에 거래됨으로써 생산자의 생계와 생활을 안정시킨다. 또한 시장 출하를 위한 불필요한 생산자의 수고와 비용, 중간유통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소비자가격도 그만큼

적정하게 형성되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증하는 상호관계가 유지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하는 관계는 소비자의 이해와 합의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생산자가 재배관리 노력과 생산 현장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체험 활동과 일손돕기 등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보다 넓고 깊은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에게도 생산 과정 및 상황에 따른 요리법이나 보존법을 고안해내는 등 생산과 소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드는 생활혁명이 요구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하는 관계에서는 물품의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 및 품질 안정이라는 경제적 편익성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의미와 내용이 공유되면서 더욱 풍부하고 충실한 관계성의 세계가 형성되고 축적되어 간다.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시스템에서는 생산 현장 방문 등의 도농교류 활동이나 생산계획, 생육상황, 가격 결정 등에 관여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로, 밥상 앞에서 생산 현장과 생산자를 떠올리고 기후와 풍토를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로 여겨진다. 소비를 단순히 물품만을 소비하는 과정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생산과정에 포함된 의미와 내용, 생산자와의 관계 까지도 소비하는 행위라고 이해한다면 더욱 풍부하고 다원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생활창조적 행위가 된다.

한살림은 단순히 소비자 요구에 의해 규정되는 시장경제시스템으로는 온전히 이해되기 어렵다. 그보다는 ‘유기농’이라는 비경제적 가치, 즉 사용가치를 찾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형성되어온 자발적 시스템(voluntary system)으로 보아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서 환경과 건강,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함께 참여·연대하고 있다.

한살림은 도농 혼합형 협동운동이다

한살림은 생산자만의 협동이나 소비자만의 협동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추구한다. 한살림은 소비 과정에 한정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¹⁾ 생산 과정도 시야에 포함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사회적으로 생협은 소비자 조직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한살림은 지역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도 자연스럽게 지역한살림생협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물론 조합원의 구성비에서는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높지만). 이것이 한살림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특징이자 정체성으로, 총회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조합원 쌍방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따라서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생산자-소비자 혼합형 또는 복합형 생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생협의 실천 모형과 사례는 국내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 생협조직만이 아니라 농업법인이나 가공법인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한다는 한살림의 정체성을 구현해가는 방향에서 소비자(조직)가 적극 참여하는 협동적 조직구조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즉 생산자만의 협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환,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높은 기술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치가공사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현재 한살림 내에서 이런 개념과 형태로 조직 전환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일부 생산법인들이 나타나고 있다(예 : 충북 괴산의 한살림축산식품 등). 그리고 생산자-소비자 혼합형 내지 복합형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서서히 모색되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인 설립된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현재 설립 준비에 들어간 (가칭)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 이것은 유럽 생협(소비자협동조합)이 쇠퇴한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유럽의 생협은 새로운 좌표축을 설정해서 독자적인 평가기준(가치와 의미)을 부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생협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기존의 생협 제도 통과는 별도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지역한살림생협과는 별도로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규모 생·소 혼합형 내지 복합형 협동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회원제 성격²⁾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 출자하여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푸드 직판장이나 레스토랑 등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역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는 소규모 지역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살림의 실천 의지와 상상력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도농 혼합형·복합형 협동조합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수록 한살림은 더욱 한살림답게 될 것이고, 한살림운동의 내용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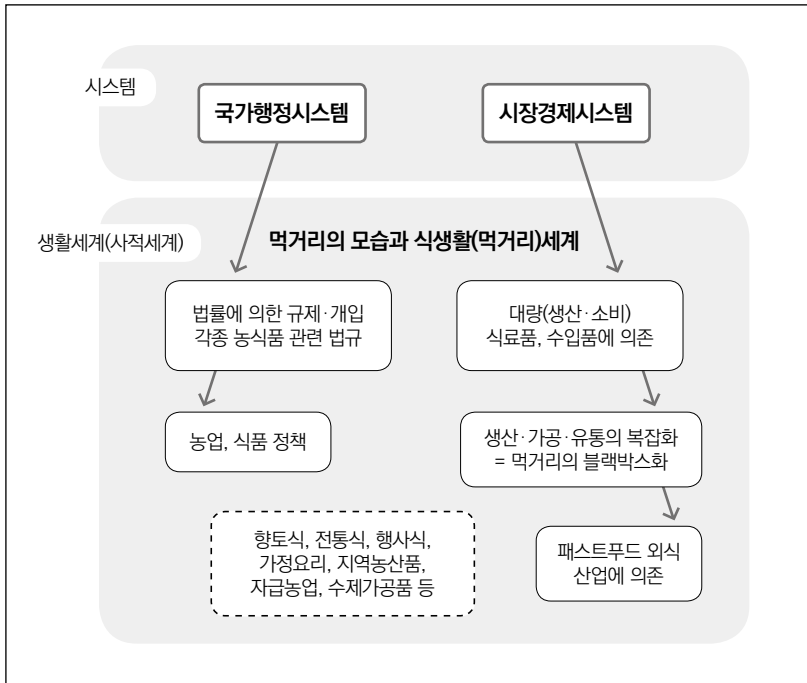
도농상생의 한살림 협동운동의 수준과 단계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와 먹거리 자급 실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먹거리의 자급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먹거리는 저비용으로 생산 가능한 국내외 생산지에서 조달되고 있다. 게다가 공업적으로 생산된 불안정한 먹거리가 다량 유통·판매되고 있다. 이제 먹거리는 자본주의 산업구조와 경제의 세계화에 완

2) 여기에서 회원제는 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합원과 소비자 조합원이 책임생산하고 책임소비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림1〉 시스템에 의한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관계도



전히 편입되어 있다. 먹거리의 상품화와 세계화가 우리의 식생활(먹거리) 세계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버마스³⁾가 말한 ‘시스템과 생활세계’의 도식으로 보면,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경제시스템과 관료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행정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Kolonialisierung der

3)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J. Harbermas)는 사회를 시스템과 생활세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시스템이란 국가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을 각각 합리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시스템에는 목적합리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생활세계는 인간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적 행위의 세계이다. 커뮤니케이션적 행위는 행위참가자들의 자기중심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행위가 아니라 참가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시장경제시스템과 국가행정시스템이 비대화해져가고 그것이 생활세계로 개입하는 것을 ‘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로 파악하고 그것을 비판한다.

Lebenswelt)'가 식생활(먹거리)에도 예외 없이 깊숙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1).

일본의 동물학자인 오바라 히데오는 스스로 살아가는 공간을 극도의 인공환경으로 바꾸어 먹거리를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자동적으로 공급 받고 자연현상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가축'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또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런 가축의 상태로 몰아넣는 의식과 행동을 '자기가축화'라고 표현하면서 현대문명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국가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이 지배하는 '식생활(먹거리)세계의 식민지화'에서 벗어나 먹거리의 자급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먹거리 자급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은 먹거리 전체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살림의 실천 사례에서 보듯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 관계 속에서 대리인(조직)으로부터 구입하는 것, 지역 내에서 교환을 통해 지역 내 자급을 실천하는 것 등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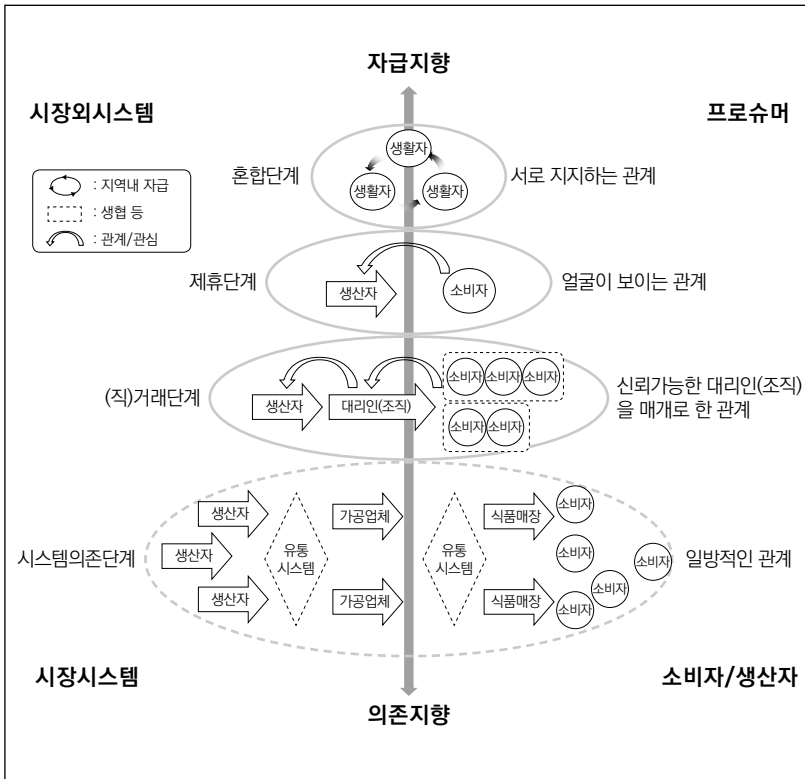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2>는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의 전체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거리 자급 단계는 시스템 의존 단계, (직)거래 단계, 제휴 단계, 혼합 단계 등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져 간다.

첫째, 시스템 의존 단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분단된 시장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수준이다. 이 단계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먹거리가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쳐 식품매장을 통해 빠르게, 값싸게, 편리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관계로서 그야말로 일방통행이다. 시장경제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관계의 수준으로 철저히 분리되고 분단되어 있다. 백화점과 할인

점 등의 대형식품매장, 전문식품점이나 수퍼마켓,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 등 일반소매유통 영역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직)거래 단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통해 경제적 유리성을 실현하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 소비자로서 대리인(조직)을 통한 의식적인 먹거리 선택과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단순히 먹거리를 직접 거래하는 관계의 수준으로 유통경로 단축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적정가격이 형성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유리성이 실현된다. 아직 조직화, 규모화되지 못한

〈그림2〉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의 전체상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관계를 가지고 직접 배송하거나 택배를 통해, 또는 종교·사회단체의 계절 행사 등 일회성 판매를 통해 직거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단순히 먹거리 직거래에 머물러 있는 생협조직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단계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먹거리의 사용가치 등에 대해 홍보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제휴 단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결합하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먹거리를 직접 거래하는 관계를 넘어 다양하고 다면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 단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결합·제휴하는 관계로, 시장유통에서 평가되지 않는 상호 교류와 신뢰를 통해 생산자는 농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생산물을 구입하는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협의하여 생산계획량, 즉 공급예정량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자는 책임생산, 소비자는 책임인수하는 거래 관계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토대로 하는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조직이다.

넷째, 혼합 단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업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의 주체로서 협업하는 지속가능한 순환이 생겨난다. 여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 존재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해 공동 출자·운영하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자기완결성을 가지고 직접 거래하며 다면적으로 교류하는 단계로, 조직 내에서 먹거리 자치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조직 내에서 먹거리 생산·소비가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먹거리 자급 단계를 말한다.

프로슈머 개념에 의한 먹거리 자급단계 향상

이처럼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은 자급경제와 의존경제의 관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다. 우선 가까워서 실천할 수 있는 먹거리 자급에서 시작하여 그 단계를 점점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생산과 소비가 일체화된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내다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조합하여 프로슈머(생산소비자)라고 불렀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제휴 단계와 혼합 단계에서는 그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프로슈머의 개념이 깊이 들어오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한살림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지역이나 조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직)거래 단계를 지나 제휴 단계를 향해 가고 있지 않을까 싶다.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제휴 단계보다는 (직)거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나 조직도 적지 않은 듯하다. 앞서 언급한 도농상생의 한살림 협동운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직)거래 단계를 벗어나 제휴 단계로 진전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살림 운동과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부분적이지만 지역을 무대로 한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혼합되는 먹거리 자급 시스템을 실험,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먹거리 자급 단계가 '(직)거래 단계→제휴 단계→혼합 단계'로 업그레이드되어 갈수록 한살림의 특성과 정체성도 그만큼 잘 드러나게 된다. 한살림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치체계가 프로슈머로 나아갈수록, 또 먹거리 자급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국가주의나 영리주의 논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살림은 국가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의 지배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살림 운동 및 정책의 도달점인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세상도 더욱 앞당겨지게 된다.

프로슈머는 국가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에 편입된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프로슈머의 행동원리는 화폐에 의한 교환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재생산을 중심에 두는 생명가치, 사용가치가 작동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존재에서 프로슈머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내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살림운동이 안팎으로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살림은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에 대한 대항운동으로서 프로슈머에 의한 먹거리 자급단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지금껏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제휴하고 혼합되는 새로운 협동운동을 제기하고 전개해온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나오며

지난 26년에 걸쳐 생산과 소비의 대립관계를 상생·협동의 원리로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협동사회경제의 영역을 구축해온 한살림의 실천 경험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살림의 조직 및 사업 확대는 협동사회경제의 활동영역이 그만큼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 제휴, 협동하는 운동은 협동사회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한살림운동의 매개였던 유기농 먹거리는 이제 일반 시장에서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과 저성장 상태의 장기화 가능성, 국내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현상 등으로 한살림의 조직 및 사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면 한살림의 성장과 발전은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한살림 협동운동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간직하고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회적 대항력을 갖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한살림 협동운동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 그만큼 우리 농업과 먹거리, 우리 삶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윤형근. 2005.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실천과제. 계간농정연구 통권15호: 167-193. 농정연구센터

조완형. 2012.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교훈-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제20차 지역리더포럼 자료집: 3-51. 지역재단

조완형. 2006. 생협운동의 최근동향과 대응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4집 제21호: 115-135. 한국협동조합학회

Wan-Hyung Cho, 2012.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Hansalim's Direct Trade Movement with Eco-friendly Agrifood in Korea. Regional Symposium on Marketing and Finance of The Organic Supply Chain. 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Association for Asia and Pacific(AFMA)

古沢広祐. 1995. 地球文明ビジョン-「環境」が語る脱成長社会-. pp. 215-242. 日本放送出版協会

吉田省三. 1988. 産消提携運動の現状と問題点-地域自給経済論と消費者運動-. 経営と経済 第67巻 第4号: 125-138. 長崎大学経済学会

西村和代. 2008. 生活者による「食の主権」回復運動としての食育: ソーシャル・イノベーションの観点から. 同志社政策科学研究 第10巻(第2号): 57-76. 同志社大学大学院総合政策科学会

小原秀雄. 1999, 街のホモ・サピエンス-自己家畜化するヒト. pp. 154-238. 徳間書店

槇瀧俊子外. 2004. 食・農からだの社会学. pp. 80-95. 新曜社

波多野豪. 1998. 有機農業の経済学-産消提携のネットワーク. pp. 10-26. 日本経済評論社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하여

국가와 시장의 실패와 대안의 새길 찾기

지금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근대화 과정을 이끌어왔던 ‘고도성장’, ‘지속 성장’, ‘동반성장’의 신화가 급속히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공통 현안이 된 양극화 문제는 특히 심각해 서, 고용 양극화가 소득, 교육, 의식주, 건강의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생산과 소비의 개별화된 경제 주체들 각자가 보낸 가격 신호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조정되고 조율된다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생산과 소비, 자본과 노동을 분리시킨 채,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경쟁을 통한 이윤 확보의 길을 걸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에 대한 압박감과 낙오와 배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사람들을 파편화, 무기력화시켜 왔다. 게다가 먹거리, 환경, 교육, 의료, 보육, 주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거, 복지, 노동 등 삶의 기본요소들이 양과 질 모두에서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역할을 국가의 '투박한 손'에 맡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국가의 보호막이 해체되는 과정과 맞물려서 급속히 진행되어 온 경제의 세계화는 각종 부작용과 모순을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속에 고스란히 집적시켜 드러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변동에 따라 지역의 자산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지역 전체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자본의 투자 목적에 따라 지역 자원이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성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 상호 연결성은 끊어지고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와 사회, 공간의 위기가 동시에 맞물려 나타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낡은 세계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길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주의 계획경제가 가진 경직성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탐욕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과 '공동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홀로 살아가기에 벅찬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관심과 필요를 나누고 함께 행동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게 하고 있다. 요즘 들어 사회적경제, 공동체경제, 협동경제, 공유경제, 호혜경제, 살림의경제 등 다양한 이름의 대안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1844년 영국 로치데일의 공정 선구자조합이 근대적 협동조합의 길을 개척한 지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선 지금 새삼스레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사실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창조적 대응의 노력을 통해 등장하고 발전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초기의 역할을 넘어서 자본주의 성장체제 자체가 내적 균열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새롭고 확장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¹⁾ 따라서 로치데일과 몬드라곤 등 자본주의 태동기와 성장기의 협동조합 경험도 여전히 의미 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따른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과 모색이 있어야 한다. 당면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적 위기 상황은 정책적 처방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운영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의 세계화가 만들어 낸 부정적 상호의존성을 협동조합을 통해 긍정적 상호의존성으로 전환시켜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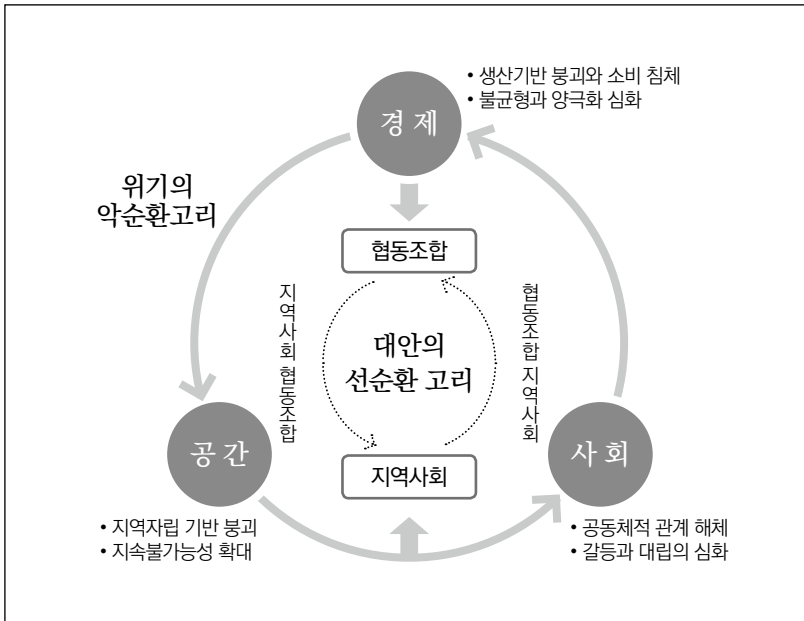
이 점에서 협동조합은 제도나 조직 형식의 차원을 넘어서 운동과 가치로서 역할과 의미가 충분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금융 자본주의의 무책임한 탐욕에 따른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공동체적 소유’, ‘민주적 운영’, ‘자립’, ‘지속가능성’ 같은 협동조합의 가치들을 현실 속에서 의미 있게 실현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들이 협동의 원리로 힘을 모아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역할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조직을 통해 구성원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확장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이용하고 통제

1) 유엔이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면서 그 슬로건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림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선순환 고리



하는 경제 활동체를 통해 스스로의 필요를 해결하고 결과를 함께 나누고 책임지는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의 정체성과 정착성을 높이고 사람과 장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 공동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본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켜 온 협동조합의 역할은 중요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기반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 기반한 협동조합’의 역할 및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를 선순환적 관계로 결합시켜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서로 살림’의 관계

지역사회 발전과 협동조합의 역할

오늘날 경제-공간-사회로 이어지는 위기의 증폭 현상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살림’(相生)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 갖는 특성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긴밀하게 결합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특성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념형으로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운명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힘을 길러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정점에 달한 상태에서 국가의 보호막이 약화되어 지역사회가 시장경제의 치열한 생존경쟁에 무기력하게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은 중요하다.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상호 신뢰와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은 클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²⁾에 대한 정의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실현’이라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역할 모델을 사회적으로 새롭게 확장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협동조합의 영역도 기존에 담당해 왔던 농림수산업, 상공업, 금융, 공제, 소비생활 등에서 돌봄 노동,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주택, 환경, 일자리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협동조합은 다목적, 다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1995년 ICA 창립 100주년 기념 대회를 맞아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2010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생협법에도 이 내용을 생협의 주요 역할로 담고 있다.

첫째, 지역 자원의 효과적인 결집과 연결

협동조합은 지역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결집시켜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발전으로 의미 있게 연결시켜 준다. 지역사회의 환경과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 즉 물리적, 인간적, 환경적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협동조합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자립과 주체성 확립

승자독식의 경쟁 시스템으로부터 지치고 소외된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으로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지역의 자기 결정권 확립과 지역사회의 재조직화에 있어 협동조합의 1인 1표 원칙에 따른 민주적 운영 방식과 조합원 자율에 바탕한 공동책임의 원리가 주는 의미는 크다.

셋째, 지역 통합성과 공동체성 강화

지역사회는 결코 동질적이거나 조화로운 곳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로 다른, 심지어 상호 대립적인 필요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적 통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협동조합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이 물리적인 공간 개발에서 장소와 사람의 발전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의 질을 높이고 신뢰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 정체성과 정착성 강화

협동조합은 투자자의 욕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단기적 이윤 추구의 논리로부터 벗어나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공유된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역할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공동 출자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순환시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떠나지 않고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기술과 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 역량 강화

세계적 경제위기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국가의 재정위기와 예산 삭감 등 급속한 변화들이 지역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창출과 지역사회의 상호부조를 조직하여 안팎의 변화와 충격으로부터 삶을 보호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역량을 높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은 분배불가능 적립금으로 자본의 안정성을 높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학습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가진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 과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들을 아래로부터 끌어올릴 수 있다.

협동조합 발전과 지역사회의 역할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협동조합은 의미 있는 역할자이지만 동시에 협동조합의 발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는 중요한 토대이자 거점이다.

사실 그동안의 협동조합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모범적 모델로 평가받는 협동조합은 많지 않다. 지난 과정에서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혼

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초창기에 내세웠던 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한 채 기구와 조직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은 안팎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에 집중한 결과 협동조합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경제적 대안으로서 의미와 특성이 약화되기도 하고, 조합원의 자발성과 참여를 통한 조직 운영보다 생산성 확보와 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결과 사람이 시스템에 묻혀 운동적 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조직 중심의 상호부조와 내부거래의 틀 속에 갇혀서 지역사회와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지속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은 물론 존립 자체를 도전 받게 된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역할을 확장해가는 협동조합의 '지역화' 전략은 중요하다. 여기에는 지역사회가 심리적 측면에서 삶의 안정과 관계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상호부조의 연결망을 만들어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생활재를 공동으로 생산해 내고, 정치적 측면에서 자율과 자치의 경험을 축적해 낼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자 활동 무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발전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의 효과적인 결집과 이용

지역사회는 오랜 시간을 통해 역사와 문화, 생태적 자원을 축적해 온 곳으로, 공간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모아내는 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긴밀성과 높은 신뢰는 결집된 자원을 협동조합의 실행 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

둘째, 조합원 필요의 확인과 확장

지역사회는 경제, 사회, 공간적으로 생활권으로서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합원들로부터 공통의 필요를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맥락에서 공문화 과정을 통해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욕구들을 보다 공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냄으로써 협동조합이 사회경제적으로 확장된 역할을 찾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셋째, 협동조합의 특성과 정체성 확립

협동조합을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조직 형식의 측면이나 기능적 효과성 측면에 치우쳐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가 극복하고자 했던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협동조합의 정체성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구성원들의 생생한 요구는 협동조합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즉 ‘복지’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도 협동조합은 참여 주체와 자원 형성 방식, 문제 해결 과정,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 등에서 정부가 하는 복지정책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의 역량과 책임 강화

지역사회는 협동조합 참여 주체들이 학습하고 직접 실천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가는 중요한 기반이다. 나아가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곳도 지역사회이며,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상호협력의 파트너를 발굴하고 공동의 실천 과제를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풍부하게 재조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이 펼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사회 속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역할의 책임성도 높여준다.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둘러싼 현실의 조건과 과제

우리나라의 발전 경로와 지역사회의 위기

앞서 이념형으로 살펴본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상호 보완적 관계와 역할을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결합 방식과 의미는 해당 국가나 사회의 맥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 ‘경로’와 ‘속도’, 국가-시장-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영미권 선진국가들과 비교해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소위 영미권 선진국가들은 이른 산업화에 힘입어 시장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하고, 자본축적에 성공한 상공인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의 적절한 운용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료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형성과 국가 발전의 이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 관료주의가 먼저 구축되고, 그 토대 위에 국가 주도형 산업화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구축되어 왔으며,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는 가장 늦게 발전되어 왔다.

우리가 지난 세기 동안 경험해 온 변화의 폭과 속도도 남다르다. ‘압축적 근대화’로 불리듯이 1960년부터 반세기 동안 GDP는 526배, 1인당 국민소득은 260배 증가해서,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무역규모 세계 9위, 세계 7대 수출국의 경제 수준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구조도 전통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해방 직후 농업인구가 75%였던 것이 작년 말 5.9%로 감소했다. 성장의 빛이 화려한 만큼 그 그늘도 짙을 수밖에 없어,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최다 자살율’,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또한 먹거리, 환경, 노동, 교육, 건강, 복지 등 삶의 기본 요소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사람들

의 불안감이 상당한 수준이다.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영향력에 비해 시민사회의 자율적 기반은 여전히 미약하며, 시장경제의 사회적 책임성도 낮다. 정치적 민주화가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되지 못한 결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공통된 현안으로 등장했다.

결국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할 때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문제는 물론이고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의 상생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경제적 체질 자체를 바꿔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장기 저성장 체제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에 대한 혁신보다는 FTA 확대 추진으로 경쟁국가 모델을 고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초대형 개발사업들을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경제적 타당성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왔다. 지자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이권과 정치논리가 결합된 개발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을 고갈시키고 그 부담을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각종 비리로 임기 중에 단체장이 구속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당성마저 훼손시키고 있다.³⁾ 지난 시절 우리가 걸어온 국가발전 과정에서 지역의 공간구조와 생산, 소비, 생활양식은 전면적으로 바뀌었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무너져 왔다. 일터와 삶터가 분리되고 이웃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다

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종 비리 등으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의 비율이 민선 1기에 9.3%이던 것이 2기 24.2%, 3기 32.8%, 4기에는 43.9%로 계속 증가되어 왔다. 4기 경우 기초단체장 230명 중 인 101명이 기소되었다.

양성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활을 건 경쟁 논리가 채워졌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들은 스스로의 발전 전망과 전략을 갖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자원을 유치하고 투자자의 손에 자신들의 미래를 맡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장소판촉’(place marketing)이라는 말처럼 많은 지역들이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정부의 지원과 자본의 투자에 매력적인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서 찾고 있다. 그 결과 외부의 환경과 관계 변화에 지역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

결국 지금 지역은 ‘시장주의적 재편’과 ‘공동체적 재구성’이라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 내 일자리는 감소하고, 생산 과정에서 지역 생태계는 파괴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자립과 자치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지할 수는 없다. 마침 최근 들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생활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안적 발전 전략으로 협동조합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는 지역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분명 새롭고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국가의 정책적 대상에서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와 결합한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흐름과 현실에 대한 진단

현재 당면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대안적인 삶의 영역을 직접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뜻과 힘을 모으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필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생활과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해내는 데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침 올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서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른 경제 영역들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중간지원 조직과 조례들을 만들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행정과 시민사회가 결합해 협동조합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기존에 각자 따로 다루어오던 마을만들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과제들을 경제와 사회, 공간을 결합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역동성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던 근대화 과정의 낡은 유산들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발전 양식과 협동조합의 역할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와 우리 사회의 현실적 조건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접근해야 한다.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수단 정도로 협동조합을 활용하려는 도구적 접근 태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협동조합이 걸어 온 길을 국가와 사회의 상호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가 주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기 하에 자립을 통한 독립을 목표로 했던 협동운동은 결국 일제의 탄압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해방 후 국가 주도의 근대화 과정이 본격화 되던 1960년대 이후 민간 자율적인 영역에서 서민들의 생활고 해결과 자립을 돕고자 등장했던 신탁이나 소비조합 같은 협동운동도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성을 잃은 채 제도에 포섭되거나 지속되지 못했다. 특히 농촌과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소비조합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과 광산지역 자체가 붕괴되면서 한계를 맞았다. 노동과 여성, 종교운동 영역에서 시도되었던 협동운동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는데, 도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협동운동은 도시 재개발 바람에 밀려났고, 직장 근로자와 도시 중산층 주부를 대상으로 했던 협동운동들도 주체를 형성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1960년대 중반부터 원주 지역에서 지학순 주교, 장일순 선생이 중심이 된 협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원주 지역에서는 1960, 70년대에 신협과 소협을 통한 협동운동이 펼쳐졌고, 특히 1972년에 발생한 남한강 대홍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통해 협동운동에 기반한 지역개발사업이 전개되었다. 이런 협동운동의 경험은 1980년대로 이어져 ‘생명’과 ‘협동’을 결합한 새로운 협동운동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가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정치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함께, 생명의 세계관의 확립을 통한 협동적 생존의 전략으로서 새로운 사회실천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산과 소비’,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는 자립과 공생의 생활협동운동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큰 물줄기를 만들었다.

1990년대 이후 대중소비사회의 등장과 함께 중산층의 급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협운동은 개방경제체제 속에서 수입농산물 증가와 먹거리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급속히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생협운동은 생활세계 현장에 뿌리내린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대중운동 조직체로, 먹거리와 같은 생활의 기본 소재를 매개로 조합원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과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 구조와 신뢰의 기반을 형성해 온 결과 협동운동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아 왔다.

한편,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몬드라곤 같은 협동적 생산조직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 협동

조합을 만들기도 했으나 경제조직체로서 생존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IMF 관리체제하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충격을 경험하면서 실업과 양극화,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으며, 그 흐름이 이어져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적 실천 양식으로 협동운동에 대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열풍의 밑바닥에는 자신들이 직접 다루기에는 부담스러운 주요 과제들을 시민사회 민간 영역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행정의 욕구와, 취약한 자립기반으로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했던 민간 주체들의 필요가 서로 만나서 만들어 낸 증폭 효과도 분명히 있다. 결국 핵심은 행정이 요구하는 속도와 제도적 관성에 휘둘리지 않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와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 실패가 재정위기로 이어져 국가 실패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려 대안 영역을 만들어가는 힘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제도와 물질적 기반의 조성에 앞서 참여 주체들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량을 키워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바로 이 점에서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 속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역량은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는 근대 국가의 형성과 국가 주도형 성장체제 속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포섭의 과정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대화 과정이 압축적이고 단절적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사회 현실의 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창조적 대응 노력이 뿌리내리기 어려웠고, 그만큼 협동조합 스스로의 경험과 역량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오지 못했다. 협동조합으로서 자율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협동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지역과 현장에 튼튼히

뿌리내리기 위한 활동 경험도 계속 이어져오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와 협동조합이 걸어온 과정과 현실적 조건들에 대한 성찰과 진단을 통해서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인 결합을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한 방안들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 이제는 ‘협동조합은 좋은 것이다’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협동조합은 이렇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나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과 지역사회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역할 확장과 조합원 필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우선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스스로 전통적인 역할의 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장된 대안적 역할 모델을 찾고 만들어야 한다.

기존 협동조합이 경제적 약자들(노동자, 소비자 등)의 기본 생존권과 필요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오늘날 협동조합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공통의 과제와 생활인들의 보편적 필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확장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조합원 개개인이 가진 필요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자기실현 욕구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장해가야 한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과 비전을 분명히 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필요를 조직화하는 단계에서 생활을 조직하고 지역사회를 재구성하는 단계로 협동조합의 역할을 넓혀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필요를 조직하고 해결하는 협동조합의 기본 역할에 있어 ‘조합원의 필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필요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며, 앞선 필요의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조응해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소비자들의 욕구인데, 조합원들이 ‘최저’가 아닌 ‘적정’ 가격을 채택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필요 충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필요를 조직한다’는 것은 단순히 흩어져 있던 개별화된 욕망을 결집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상호 책임의 관계 속에서 필요의 영역을 새로운 단계로 확장, 승화시켜 내는 것으로, 협동조합이 가진 운동성의 기반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협동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의 발전 단계

한편, 협동하는 사람이 협동하는 조직을 만들고, 협동하는 조직이 협동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협동조합운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동하는 사람 없이 협동조합의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협동조합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간형을 필요로 한다.⁴⁾ 협동조합의 정신은 단순한 소비자 고객이 아니라 자각된 주체

4) 따라서 근대적 인간형으로서 ‘정치적 인간’(homo-politicus), ‘경제적 인간’(homo-economicus)의 한계를 넘어서 ‘상호 의존하는 인간’(homo reciprocus), ‘공생하는 인간’(homo symbiosis)으로서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도 오늘날 협동조합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다.

로서 조합원이 있을 때 건강하게 발산된다. 일본 생활클럽생협이 ‘생각하는 주체’로서 조합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필요의 결집을 통한 조합원 출자도 결국 참여 주체들의 마음 모으기를 통해 가능하다.

협동의 진정한 가치는 ‘같음’이 아닌 ‘다름’으로부터 나온다.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통한 협동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각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과 차이 속에서 공통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협동에 따른 이익은 물론 부담과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으로부터 협동조합의 실질적 힘이 나온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도 다음과 같이 단계화 해볼 수 있다. 우선 협동의 시작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사안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가 가진 자원을 계약을 통해 나누는 ‘자원 교환’(resource exchange)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후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 가진 자원을 합의된 방식으로 공유하고 공동생산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자원 공유’(resource sharing) 단계를 넘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생산, 소비, 분배의 전 영역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권한 공유’(power sharing), ‘책임 공유’(responsibility sharing)의 단계로 협동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다주체 간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협동조합이 뿌리내린 지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생산기술과 생산기반을 토대로 지역 자립적인 순환경제 체계를 만들어 지역 자산의 역외(域外) 유출을 최소화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우애와 협동의 원리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원과 정보, 권력이 지역에서 공평하게 공유되고

순환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지역 생태계와 생물 자원들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고 물질과 에너지의 지역 순환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물론 지역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국적 없는 자본들이 만들어내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선 협동’(cross-sectoral collaboration)을 통해 경제와 사회, 공간의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만나고, 사람과 조직,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리를 지역사회 발전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물론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그 외 중소기업, 자영업자, 시민사회조직(CSO), 비영리조직(NPO) 같은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동도 중요하며, 나아가 행정과 의회 등 제도영역과의 협력 관계도 필요하다. 다만 행정이 가진 제도적 관성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과 제도영역 간 협력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이 가진 자치와 자립의 원칙,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위치와 역할이 분명하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마침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협동조합 영역을 육성시켜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 파트너로 삼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협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억압한 채 제도 영역으로 포섭해 버리지는 않을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으로 본 가능성과 과제

대안적 실천 모델로서 생협의 특성과 역할

경쟁과 배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협동의 원리로 가치를 조직하고 관계를 조직하고 생활을 조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뚜렷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이 상황 논리와 조직 형식에 매여 정체성과 운동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이념형으로서 협동조합이 가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 가능성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사례들은 많지 않다. 이 가운데 사회경제적 운동체로서 협동조합 모델을 가깝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한살림을 비롯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생협이 의미 있는 실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한살림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수 생협들은 소비자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실현하는 차원을 넘어 확장된 공공성 개념을 조직의 가치 지향으로 삼아 왔다. 대표적으로 한살림의 슬로건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에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틀을 넘어서 이웃과 미래세대, 못 생명과 생태계 전체를 함께 살려내고자 하는 조직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

둘째, 그동안 생협들은 결사체로서만이 아니라 사업체로서 경제조직을 함께 운영해 옴으로써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스스로 마련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 활동을 해 왔던 다수의 시민사회조직

(CSO), 비영리조직(NPO)들이 현재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 모델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협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해 온 경험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셋째, 우리 현실에서 생협이 가진 중요한 특성이자 장점은 생활세계 현장에 뿌리내린 조합원들의 참여에 기반하고 있으며, 먹거리와 같은 생활 소재를 매개로 조합원과 조직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생협이 가진 폭넓은 대중 조직적 특성은 큰 장점이다.

이처럼 사업과 활동을 함께 운영해 오면서 생협이 축적해 온 가치와 역량, 신뢰의 기반은 오늘날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든든한 자산이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지역과 함께 공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생협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현재 한살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살림운동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이 가진 의미

사실 한살림운동의 역사에서 지역살림은 내용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살림은 처음부터 생명살림의 농법을 토대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과 도시 지역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과 삶의 터전을 이웃과 함께 살맛 나는 곳으로 되살려내는 일을 함께 고민해 왔고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넘어 상호 관계와 영역들을 조직하고 실천해 왔다.

하지만 한살림이 최근 들어 ‘지역살림’을 주요 운동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조직별로 중장기 목표에 담아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데는 우리 사

회 안팎을 둘러싼 변화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먹거리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출산과 육아, 아토피, 교육 등 생활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 양극화와 실업, 환경위기 등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 그만큼 생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의 경험과 조직적 기반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나갈 필요성과 책임성도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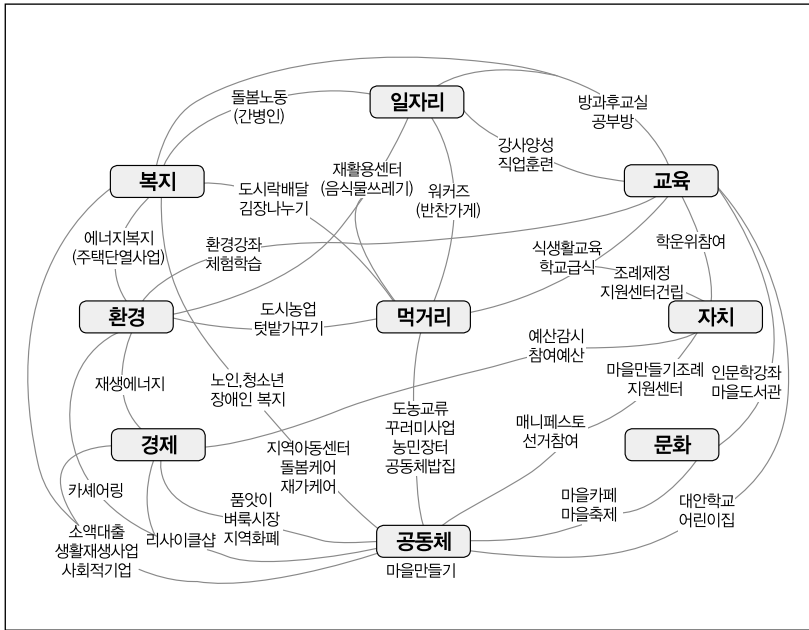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한살림은 지역사회를 살림의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짜 나가기 위한 지역살림운동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한살림이 생각하는 지역살림운동은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살림운동’이자, ‘지역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며, ‘살림의 주체들이 지역에서 펼쳐가는 운동’이자, ‘살림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운동’이다. 한살림이 지역살림운동의 의미를 “한살림이 그동안 펼쳐온 (직거래)사업 및 (생활실천)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다양한 생활 속 필요와 지역이 당면한 과제들(먹거리, 교육, 복지 등)을, ‘조합원의 참여로,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협동의 힘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살림운동의 방향과 과제

지역사회는 살림의 기본 단위이자 협동의 원리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실천해 나가는 현장이다. 바로 이런 지역사회에서 살림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와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 당사자들을 파트너로 조직하고 연대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는 먹거리는 물론 일자리, 복지, 환경, 교육, 문화, 자치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들 각각의 영역을 조합원과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실천 프로그램들을 통해 소통하고 연결시켜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활동 주기

〈그림2〉 협동을 통한 살림의 그물망 만들기



를 고려한 세대 간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의 특성(비혼 또는 독신, 자녀가 없는 세대 등)과 연령별 세대의 특성(청년, 중장년, 노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살림운동의 영역들을 적극 발굴해 실천 활동으로 연결해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살림운동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실천 모델로 의미 있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와 함께 실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인 만큼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학습과 경험의 축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살림이 그동안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각종 모임과 실천 활동들을 통해 조합원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메시지

를 확산하고 수렴해 온 과정들은 의미 있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들을 어떻게 꿰어내서 지역살림운동으로 연결시켜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살림은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위해 가칭 ‘지역살림운동 지원센터’와 ‘지역살림 기금조성’과 같은 지원 체계를 중장기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충분히’ 여성적인가?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활동가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왜 여성이 많을까? 내가 생물학적 남성이라서? 여자만큼 남자를 좋아하는 걸 보면 단지 그 때문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여성활동가들의 활동방식에서 어떤 끌림을 느껴서? 솔직히 그런 끌림을 느낀다. 남성활동가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이 분명 있다. 그런데 그 매력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생기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물론 타고난 무언은 있는 듯하다. 학교를 관두고 아이를 돌보면서, 그리고 동네에서 주부들과 독서회나 공부모임을 꾸려오면서 든 생각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면도 있고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면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를 보면 타고난 자질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변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면을 느낄 수 있다.

인간 모두가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건 인정해도 사람이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분명한 건 나의 선호와 환경 때문에 나의 사유와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표현방식도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 내가 여성활동가들에게서 느끼는 끌림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사회 속에서 강화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질을 타고났다면, 어떤 공간이나 조직이 그 자질을 강화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글의 가정은 여성적인 자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협동조합에는 여성활동가들이 많다. 협동조합운동의 기원을 보면 남성들이 대다수인데 어떤 점에서 협동조합이 여성에게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었을까? 협동조합운동이 중산층 여성들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일까? 알려진 만큼 실제로 여성들이 협동조합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런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중산층 여성들의 운동인가?

우리는 많은 편견 속에 살고, 공간과 시간, 관계망이 그런 편견을 없애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는 힘을 가진 자들이 무수히 많은 편견들을 만들었지만 그 중 가장 심한 편견을 꼽으려면 남녀에 관한 편견이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편견이 만들어지거나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여성은 여전히 어떤 '규정' 속에 갇혀 있다. 그 규정을 넘어서려고 하면 여전히 '쌈마이'나 '무서운 페미 언니'로 받아들여진다.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을 던져보면 이런 규정이 타자를 배제할 뿐 아니라 결국 나 자신도 배제해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감명 받은 책 중에 벨 훅스(bell hooks)의 『행복한 페미니즘』(백년글사랑, 2002년)이라는 책이 있다. 원제는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Feminism is for everybody)'인데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페미니즘을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인 훅스는 『나는 여자도 아닌가요: 흑인 여

성과 페미니즘(Ain't I a Woman : Black Women and Feminism)』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겹치는 제목이 참 시사적이다.

그래서인지 흑스는 『행복한 페미니즘』에서 “억압자와 피억압자라는 간명한 범주에 집어넣음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양극화하는 것은, 계급상승과 가부장제 권력의 공유를 추구하는 페미니스트 여성”이라고 규정한다. 여성의 불행한 가족사로 대통령 스토리를 만드는 한국이니만큼 말만 듣지 말고 누가 그 말을 하는지를 살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실 ‘모든 여성은 진보적’이라는 말은 ‘모든 노동계급은 혁명적’이라는 말처럼 공허하다. 진보와 혁명성은 타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벨 흑스의 예리함은 성차별을 계급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과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같은 남성, 여성 내에도 차별선은 그어지고 그런 다양한 차원의 차별들이 삶을 위협한다. 그리고 그 차별선들은 같은 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볼 수 없도록 만든다. 차별이 없음을 부정할 게 아니라 가부장제도는 모두에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물리쳐야 할 텐데 서로 마주보지 못하게 만든다. 왜? 남녀를 불문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그런 차별선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이다. 여성성의 힘은 그런 분할과 차별, 폭력을 없애고 상호성과 사랑, 상호자유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흑스는 강조한다.

협동조합 얘기를 시작하면서 벨 흑스의 얘기를 꺼낸 이유는 편견이 우리 속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묻기 위해서이다. 흔히 협동조합운동은 중산층 여성들의 활동무대라고 불린다. 한편으로 남성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이 그렇게 불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남성과 여성들을 조직하는 시민사회운동이 그렇게 불렀다. 이 호칭에는 단순히 운동주체를 지칭하는 의미보다 ‘여유를 가진’ 주부들의 운동이라는 냉소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심지어 협동조합운동 내에서조차도 조합원을 중산층 여성이라

는 범주에 집어넣음으로써 조합원들의 다양한 삶과 욕구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운동들의 갈등이나 대립을 나쁘다고 피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그 대립이나 갈등의 지점이 제대로 잘 그려졌는지를 묻고 싶다.

일단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유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엄밀하게 따져 중산층 여성이란 누구인가? 자신이 중산층의 임금을 버는 여성, 아니면 중산층의 임금을 버는 남편을 둔 여성? 아마도 후자의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 그 속에 깔려 있으니 호명 자체가 매우 차별적이다. 만일 그런 게 아니라면 설령 남편이 중산층이라 해서 그 여성이 중산층 여성이라 낙인 찍힐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낙인이 가능하려면 가계의 자산을 남편이 공유하고 여성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한을 가져야 할 텐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정의는 '가족임금'이라는 가부장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가족임금제도가 여성을 가사노동의 틀에 가두고 남성노동자의 가부장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라는 점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밖에서 돈을 버니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가부장 논리는 집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가족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여성노동을 남성노동을 보완하는 예비노동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의 결정에 따라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불안한 노동자가 되었다. 노동하는 여성만이 아니라 가정주부도 외부의 힘에 기댄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남성의 경제력에 종속되어 자립하지 못한다.

반대로 가족임금은 가부장성을 유지하려면 기업의 가혹한 착취를 버텨내고 생계부양자라는 짐을 혼자 져야 한다고 남성노동자를 세뇌시킨다. 그래서 남성들은 주말엔 할 일 없이 텔레비전과 휴식을 즐기고 주중에는

‘노동기계’가 되는 삶을, 요즘에는 자기관리까지 강요당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한편으로 강요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즐기는 가부장성은 남성의 내면을 왜곡하고 획일화시키며, 생활능력을 감퇴시키고 감수성을 떨어뜨려 점점 더 남성을 고립시킨다. 중산층이라고 해서 남성이나 여성의 삶이 여유롭거나 대안사회에 열려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겉으로 우아하게 보이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가장 여유 없는 계층이 중산층이다. 그러니 냉소할 이유가 없다.

주체의 면만이 아니라 조직의 면에서도 오해가 있다. 협동조합은 중산층의 결사체가 아니라 약자의 결사체이다. 협동조합의 기원 자체가 그러하다. 로버트 오웬(R. Owen)이 협동조합을 구상했던 이유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최초의 협동조합이라 불리는 로치데일 협동조합도 가난한 노동자들의 조직이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운동은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디딤돌로 시작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씩 따로 떨어져서 국가나 자본의 관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 단결할 때 다른 가능성들이 하나씩 생겨난다. 다양한 협동조합들을 만들다보면 공동체가 강해지고 또 다른 협동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협동조합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홀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조직이고 힘이었다. 어떤 의미에서건 조직이란 개인이 홀로 하지 못하는 힘을 발산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득권층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두려워하고 조직을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관리해온 공조직 외에 또 다른 조직이 힘을 얻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걸 두려워하기에 사람들의 인식에 개입한다(한때 NGO라는 말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다 어느 순간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사라지게 된 것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협동조합의 해라며 흥분하는 모습에서도 그런 징후를 느끼게 된다). 그런 논리가 가부장적인 편견을 재생산하고 현실에서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내밀 수 없게 만든다. 박노해의 ‘이

불을 꿰매면서'라는 시에 나오듯 “거만하고 전제주의적인 기업주의 짓거리”를 비판하는 노동조합 활동가이지만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는 모순이 생겼다. 비슷한 맥락에서 약자의 무기인 협동조합을 한가한 사람들이나 주부들의 계모임, 자원봉사활동, 때로는 일반기업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인식의 원인을 기득권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협동조합운동 스스로가 재생산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협동조합운동은,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은 생활의 주체인 여성들을 중요한 주체로 삼았지만 가부장주의에서 해방시키려 하지 않았다. ‘밥상공동체’가 한 가정부터 우주를 포괄하는 이념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이념은 ‘누가 그 밥상을 차릴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의 생협운동은 함께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식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도 않았다(예를 들어, 일본 <가나가와 네토>처럼 여성을 ‘전일시민’, 남성을 ‘반일시민’이라 규정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2005년에 나온 『한살림운동과 조합원노동의 이해』라는 보고서를 보면,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주부를 주체로 삼은 이유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치유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생활을 화폐로 평가하는 시장시스템, 평균화시키는 행정시스템에 위탁하는 것의 위험을 자각한 주부들이 먹거리를 매개로 생활을 자치해 나간다는 운동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립된 소비를 “사회적 힘으로 조직하는 ‘공동구입’”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에서 주부들이 “사적영역을 공공화시키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훈련”받기를 기대했다. 비슷하게 1989년 <함께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에서 시작된 <여성민우회 생협>은 ‘사회주부’, 즉 “바람직한 사회상의 실현을 추구하며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기혼여성”을 운동의 주체로 삼았다. 사회주부는 “자신들의 가족 내 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사적인 돌봄을 공적인 돌봄으로 확장시켜나가는 생활정치를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치유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자처했다. 문제는 그런 주체의 성장에 공동구입이라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이미 무너졌다는 점이다. 반공급을 유지하는 몇몇 지역생협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비자생협이 개인공급방식을 받아들였고 그러다보니 사회적인 힘을 조직하는 과정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교육은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데, 그 생활에 사회적 관계가 없다보니 교육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앞의 한살림 보고서가 지적하듯 공급활동 외에 조합원활동이나 조합원노동을 통해 “한살림의 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자기실현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운동은 가족임금제도를 비롯한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자신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삶터만이 아니라 일터도 바뀌야 삶터가 바뀌고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 텐데, 전체를 보는 시야는 부족했다. 소비자생협운동이 농민과 농업을 살리려는 노력에 힘을 쏟아온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렵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한국 사회의 풍경을 이미 바꿔놓았다. 더글러스 러미스가 『에콜로지화 평화의 교차점』(녹색평론사, 2010년)에서 말하듯,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은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와 노력을 이해하고, 그 위업을 인정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과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산과 소비를 순환의 관계로 파악하는 인식은 자본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인식인데, 그 혁명성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냥 직거래만 남았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도 서서히 협동조합의 특성에 눈을 뜨고 그것을 길들이거나 활용하려는 전략을 펼쳐 왔다. 협동조합운동은 이에 일공동체나 워커즈 콜렉티브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은 가족임금체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비슷하게 사회적기업의 여성고용 비중이 높지만 이 역시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들이고 가족임금을 해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가족임금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이런 대안들은 원래 목표한 대로 자본주의 화폐경제를 대체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조합원의 자발성이 강조되지만 조합원이 협동조합 내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닌 이상 사회의 강요나 억압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진정 자율적인 선택이라면 그것을 가능케 할 조직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졌다. 따라서 ‘가정을 넘어 사회로’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가정과 사회를 분리시키는 벽은 더 높아졌고, 가족임금제도와 여성의 가정주부화라는 도식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소비자생협운동은 지금도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의 먹거리’라는 틀을 여성들, 더 정확히는 주부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밥상에 담긴 그 많은 의미를 부정하고픈 생각은 없다. 다만 이 틀은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이 가진 문제점을, 가부장주의를 해체시키지 않고 강화시킨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자녀교육의 책임자가 되고 이로 인해 자식의 교육과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문제를 낳는다. 그런 점에서 가부장주의를 남녀만이 아니라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도 찾는 벨 훅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봄직 하다. “백인 우월주의적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지배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은 우리의 문화가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고 어린이를 어른이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라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만든 이 나라 최초의 사회 정의 운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주의는 “남녀를 막론하고 자기 아이에 대하여 가부장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한 운동이다.

협동조합이 누구의 운동인가라는 물음은 사실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누

구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약자나 소수자들이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배경인데, 이런 역할은 아직 과제이다.

협동조합 7원칙을 다시 생각한다

일본의 <그린코프연합>이 발족하며 선언한 내용은 약간 충격이었다. <모심과살림연구소>가 펴낸 『모심 侍』(2002년)에 실린 다케다 케지로의 「그린코프선언 외」에는 “①생협은 어머니들의 연합체이다, ②생협운동은 어머니 연합이 담당하는 여성 자립운동이다, ③그린코프는 자립한 어머니 연합과 여성운동 간의 공통의 본질을 모색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다는 선언이 담겨 있다. <그린코프생협>은 ‘사업 근대화’를 내세우고 반 중심의 공동활동을 해체하며 생협노동을 임노동으로 규정했던 생협인데, 이 선언은 어머니와 여성자립을 강조하지 않는가. 더구나 이 선언은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어머니에 관한 생각에 찬성하는 남성까지 포함하는 “가능성으로서의 어머니”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존재로서의 어머니로부터, 의식하는 어머니로, 더 나아가 연대하는 어머니로 진화해 나간다는 생각”을 밝혔다. 경제가 생활을, 직장이 지역을 지배하는 시대에 맞서 인간의 자립, 어머니의 자립, 아이의 자립을 추구하고 “어디까지나 연대와 협동에 의한 자주적인 지역주민의 활동에 기초”한 지역활동을 하겠다는 구상은 나름 감동적이다. 하지만 이 선언과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활동을 조화시킬 방법에 관한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런 관심은 우리 사회에도 이미 존재했다. 2000년 7월 4일 민우회생협 조합원선언은 조화·협동·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 여성, 지역사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성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이 조합원선언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남

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안적 생활양식을 개발하고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조화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생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합원선언은 여성들이 이끄는 ‘여성생협’을 목표로, 남녀를 막론하고 조합원들이 ‘여성적 관점’으로 대안적인 생활양식과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했다.

그리고 2012년 6월 20일 <살림의료생협>의 어라 사무국장은 「여성주의자가 만난 사회운동방법으로서의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협동조합만큼 여성주의와 잘 어울리는 조직이 없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7원칙이 여성주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왜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과정이 여성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인지를 설명하는 발표를 들으며 협동조합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에서 여성이 다수임에도 여성주의와 협동조합의 원칙을 같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살림의료생협>의 공간에 오면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어 지역의 숨겨진 여성주의자들이 드러나고 다른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발표자의 말은 협동조합운동의 핵심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성별만이 아니라 계급, 인종, 이성애 중심의 차별에 저항하는 의료, 탈의료화를 추구한다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여성운동이라는 말도 가슴에 와 닿았다.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같이 병원을 보러 다니고 병원에 들어올 기계를 선택한다는 말에서도 협동조합운동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성의 역량, 생명의 살림살이를 강화시키는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 그리고 협동조합을 하기에 그리 좋지 않은 환경인 한국에서 협동조합 7원칙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앞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틀로써 7원칙을 성찰해 보자.

협동조합 7원칙 중에서 제 1원칙이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이미 사회적인 차별이 폭넓게 존재하기에 문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는 참으로 무력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조합원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기혼자나 전통가족만을 중심에 둘 수도 없다. 비혼자나 아이 없는 가족, 성소수자 가족도 협동조합에 다가 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약자들이 일하는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들에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미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제 2원칙 ‘민주적 관리’나 제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도 기계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 민주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얘기이고 참여란 단지 통로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드러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차별을 내부에서 바로잡고 그 정의를 사회화하는 결사체이다. 그러하기에 각 조합원들의 의견과 의지, 다양한 색깔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이끌어야 하기에 내부민주주의야말로 외부로의 확장을 위한 전제이다. 조합이 조합원 개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잠재적인 조합원들을 조합으로 끌어들이려면 민주주의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와 참여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협동조합에서도 ‘민주’보다 ‘관리’에 방점이 찍히고 ‘참여’보다 ‘경제’에 강조점이 찍힌다. 단지 조합원의 수가 많다고 해서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구조가 무력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외려 ‘자신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겠다고 여기는 조합원들이 많다면 지금 당장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도 민주주의는 실현된다. 그리고 억압된 주체일수록 민주주의를 회피하거나 타인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억압된 주체가 타자와 무관하지 않고 같은 지반 위에 서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해는 남성적인 결정의 화법보다 상황을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하는 ‘수다’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공식적인 대화보다 비공식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서로간의 공감감이 생겨야 이해가 가능하다. 이해(理解)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내용을 따지는 과정이고 입장(standing)이 아니라 그 밑(under-standing)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가부장주의와 자본주의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다양성을 배제하며 소통을 차단하려 든다. 가부장주의와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우리 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만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 4원칙 ‘자율과 독립의 원칙’과 제 5원칙 ‘교육, 훈련, 정보제공의 원칙’이 중요하다. 농협이나 신협 사례에서 보듯 국가가 협동조합을 관리하려 드는 사회, 재벌들이 공장과 사무실을 군대로 만들고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자신의 생존과 조합원의 변화를 도모하기 힘들다. 아울러 자발성, 평등, 참여와 같은 협동조합의 가치도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가나 시장과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자율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나 시장과 관계 맺지 않는다는 점을 뜻하지 않는다. 현실과 분리된 공동체를 꾸리고 자기들끼리만 잘살려는 게 아니라면 외부와의 접촉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자율성은 나를 지킬 힘, 국가나 시장과 약속을 맺을 힘이 내게 있음을 뜻한다. 이 힘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고 임금노동이나 화폐경제에 종속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디딤돌로 협동조합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생활이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새로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은 조합의 물류나 시스템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다(자본주

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물류나 시스템이 이익을 좇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생산과 소비를 하나의 순환체계 속에서 이해하는 조합원이 늘어날수록 협동조합운동의 힘도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조합원이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자 할 때 조합이 든든한 뒷심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단지 식생활교육이나 교양교육만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다. 앞서 말했듯이 일터와 삶터의 변화를 스스로 해석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조합원, 그들이 협동조합운동의 희망이다. 그런 조합원을 많이 기르고 그들이 서로 협동하고 연대할 틀을 제공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6원칙 '협동조합 간의 연대'나 7원칙 '지역사회에의 기여'는 협동조합의 그런 시야를 뜻한다. 적대적인 경쟁, 인수합병(M&A)이 원칙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과 복불복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에서 협동의 원칙은 다른 세상을 뜻한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가려면 몇몇 조합이 아니라 전체의 힘이 모여야 하고 '공생(共生)'과 '공생(公生)'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간의 공생(共生)은 서로 간의 경쟁을 막거나 최소한 적대적인 경쟁을 최소화시키는 창구이고 사회적 시장을 만들 가능성을 뜻한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면 협동조합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험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공생(公生)은 협동과 지역사회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뜻한다.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가 만들어진 한국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의미는 단순히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역 자체가 가진 동력에 주목한다는 의미이며, 그 힘과 기술, 전통에 기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강화시키지 않고서 세계화의 시대에 협동조합이 생존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런 공생의 관계를 인식하려면 전일(全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나와 타자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없이

공생과 공생이 강화되지는 못한다. 내 살을 베어 타인을 먹이려는 자세가 있어야 이런 공생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기존의 강화된 남성성으로는 길러질 수 없고 여성적인 자급 관점이 필요하다.

마리아 미즈(M. Mies)와 베로니카 벤홀트 톰젠이 쓴 『자급관점(Subsistence Perspective)』(곧 한글번역판이 출판될 예정임)의 서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당시에는 대통령의 부인)이 방글라데시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던 이야기이다. 힐러리가 그라민 은행의 소액대출을 받아 자립을 시작한 마을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을 여성들이 이렇게 묻는다.

“아파(자매님), 당신은 암소가 있나요?”

“아뇨, 나는 암소가 없어요.”

“아파, 당신은 소득이 있나요?”

“네, 전에는 내 소득이 있었지요. 하지만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백악관으로 온 뒤에는 일을 관췄어요.”

“아이는 몇인가요?”

“딸 한 명요.”

“아이를 더 갖고 싶은가요?”

“네, 한두 명 정도 더 갖고 싶지만, 지금의 딸 첼시와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한다. “불쌍한 힐러리! 그녀는 소도 없고 소득도 없고 딸도 하나밖에 없다네.”

미즈와 톰젠은 이 이야기에서 다섯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첫째는 현실을 보는 관점에 대한 반성이다. 보통 우리는 서유럽이나 미대륙을 보며 삶을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반구의 가난한 여성농민과 도시여성의 일상생활에서 삶을 구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허나 좋은 삶이 자연과 타자, 여성, 아이들을 희생시키고서야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

찌 좋은 삶일 수 있겠는가? 우리 삶이 전쟁 속에 사는 타자들의 삶을 딛고 평화를 누린다면 그것이 어찌 평화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미즈와 톱젠은 가장 낮은 곳, 밑바닥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외부의 힘이나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급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엄청난 자원이 아니라 암소 한 마리와 닭 몇 마리, 아이들, 약간의 땅만으로도 자립은 가능하고 그것이야말로 좋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셋째, 가난한 여성이 미국의 영부인을 대하는 그 자세이다. 권력자를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감과 위엄, 존엄함. 이들은 더 이상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넷째, 마을 여성에게 좋은 것이 전체 사회에도 좋은 것이고,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자립적인 삶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미즈와 톱젠은 이를 “사회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고 비식민주의적이고 생태적인 유토피아”라고 부른다.

다섯째, 세계를 ‘제1세계’와 ‘제3세계’로 나누는 정신분열증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힐러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런 차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여성으로 위치 짓고 있다. 자신들의 삶의 지향이 힐러리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의 물음은 근본적으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미즈와 톱젠의 논의는 가사노동과 비정규직노동이 같은 지반 위에서 있음을 드러낸다. 비정규직 노동을 없애고 변화를 피하는 건 여성의 가정주부화를 빼놓고 진행될 수 없고, 노동의 성격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수 없다. 따라서 명목적인 7원칙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7원칙으로 원칙을 재해석해야 한다.

여성이 협동조합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나?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A. Gramsci)는 헤게모니(hegemony) 개념으로 사회를 설명했다. 지적·도덕적·정치적 동의를 뜻하는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지배가 억압이라는 수단만이 아니라 동의라는 기제를 통해서도 행사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가부장제 역시 헤게모니를 통해 작동한다. 그것이 일정한 동의체계를 갖추고 있고 때로는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줄도 안다는 얘기다. 이를 적용하면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것만으로는 협동조합의 헤게모니를 설명할 수 없다.

협동조합운동의 실제 현실은 어떨까? 2004년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나온 「여성주의 정치학으로서 생협운동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살림과 민우회 생협의 활동여성들을 중심으로」는 그런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 논문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한편에서는 생협운동의 의미에 치중해 여성들의 활동상의 어려움 및 갈등 부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생협활동을 성 역할 강화라고만 간주하여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을 모두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살림과 민우회생협 활동가와 실무자 등을 인터뷰해서 작성된 이 논문에 따르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상은 주부일(집안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남편은 생계책임자이고 여성은 집안살림을 맡는 성별 구도 하에서 남편의 눈에 아내의 생협활동은 주부가 여가활동으로 선택한 하나의 자원활동쯤으로 비춰지고, 결국 남편과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가 좋아서 하는 일’로 치부된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여성의 활동이 본부와 지부, 사업과 운동의 관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맡거나 의사결정이나 의견수렴과정에서 드러나는 위계성 등도 지적한다. 그리고 민우회생협의 활동은 여성운동과 생협운동을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생협운동이 여성들의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실제로 지금 현재를 봐도 단위생협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대부분 여성이지만 생협운동을 대표하거나 정책이나 비전을 짜거나 생협운동에 관해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성들이 많다. 협동조합과 그것의 지향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생산자나 공급업체로 가도 비슷한 상황이다. 가장 잘 알고 오래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인정하면 그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직위가 남성들 중심으로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 논문은 어떤 가능성에 주목할까? “생협운동이 단지 가사량을 늘리고 참여 여성들이 가사활동에 충실하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협운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인식하고 대안사회를 구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얻게 되는 등 여성과 생협운동 간의 다양한 측면들을 주시함으로써 여성운동으로서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협활동이 “가정 내 성별분업을 해체시키고 대안적 지역문화를 생성할 뿐 아니라, 소비와 파괴의 악순환을 매개하는 생산영역에도 변화”를 준다면 살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안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협활동을 통해 주부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며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여성들이 협동조합운동의 헤게모니를 쥔다는 것은 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이 여성성에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이다. 흑스의 입을 빌려 얘기하자면 운동이 상호성과 사랑, 상호자유를 지향한다는 것이고, 여성이 협동조합을 통해 자립하며 생산과 재생산 영역 모두를 바꾸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여성활동가의 삶을 바꿨지만 여성활동가가 협동조합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이고, 앞으로의 변화는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는 여성과 남성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깐.

영성과 협동조합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 변혁적 협동운동을 위하여

왜 ‘영성’과 협동조합인가?

‘몬드라곤’과 ‘코프고베’와 ‘한살림’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무엇일까? 물론 답은 ‘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은 두말할 것 없는 세계적인 협동조합 복합체이고, 코프고베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생활협동조합이며, 한살림은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 중 하나이다. 그렇다, 공통점은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셋은 모두 성공적인 협동조합 모델임과 동시에, 영혼이 살아있는 지도자와 사회화된 영성을 지니고 있다. 몬드라곤의 돈 호세 마리아 신부와 가톨릭 영성, 일본협동조합운동의 아버지로 숭앙받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와 기독교 영성, 그리고 한살림과 원주협동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무위당(無爲堂) 장일순의 모심(侍)의 생명사상이 그것이다.

*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한살림전북 이사장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데 왜 영성(spirituality)¹⁾일까?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숨겨져 있다. 협동운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은 사업의 규모나 경영적 효율성보다 정신, 영혼, 혹은 영성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있는 것 아닐까?

2012년 오늘 한국의 협동조합 붐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그 핵심적인 동인은 무엇일까?²⁾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이후 대안적 경제시스템과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도 있다. 협동조합운동 혹은 협동운동³⁾의 본령은 무엇일까?

‘탈근대’와 ‘자본주의 이후’ 나아가 ‘문명사적 전환기’가 공론이 되고, 학교, 정당, 대의민주주의, 주식회사, 노동조합 등 근대적 건축물이 낡고 늙은 것이 되거나 괴물이 되어가는 오늘, 1844년 로치데일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대략 170여 년이 지난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되살아난 협동조합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몬드라곤 협동조합 지도자의 말대로 협동조합이 단순한 법적 구조가 아니라 경제사회철학이라면, 그 철학, 즉 협동조합의 본질은 무엇일까? 협동조합의 영혼(spirit)은 무엇일까? 마치 ‘만유인력(萬有引力)’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협동조합의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1) 영성이란 지성, 감성과 구별되는 의식의 깊은 차원을 말한다. 고급의 종교인과 철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지만, 해방신학의 창시자인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의 말을 빌려 보자. “영적인 것이란 작은 나의 세계를 우주적인 세계에 연결시키고, 전체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을 초월한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76쪽.

2)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의 협동조합 신드롬이 심히 우려스럽다.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으나,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면서 협동조합의 자조·상조의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에 뒤이어 또 하나의 ‘국가 복지’ 전달체계, 혹은 관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업주체보다 정부주도형 자원조직만 활성화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도 문제다.

3) 협동조합운동인가 협동운동인가 하는 문제는 쟁점 중 하나이다. 필자는 넓은 의미의 협동운동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물론 협동조합이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협동운동의 형태인 것은 분명하나 향후 협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살림의 경우 협동운동이라고 말해야 타당하다. 직거래매장(1986)–소비자협동조합(비법인, 1988)–비영리사단법인(1995)–생활협동조합법인(2002-)으로 바뀌어온 조직형태의 변화사가 그것을 증거한다.

협동조합과 영성: 몬드라곤과 코프고베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보이는 힘’은 탐욕의 신(神), 화폐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협동조합도 결국 사업규모에 의해 존재감이 인식된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는 진정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힘’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짐작은 해볼 수 있다. 사람들의 결사체인 협동조합의 성패는 결국 ‘사람들’에 달려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자발성과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는 몬드라곤과 일본생협운동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에너지, 혹은 아우라가 같은 게 느껴진다.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오언의 박애주의와 ‘새로운 사회(New Society)’에 대한 열망, 덴마크 협동공동체운동과 독일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에서의 기독교,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협동조합운동과 가톨릭의 역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으로 건너온 협동조합운동도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도저한 기독교 영성에 의해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정신성과 종교적 영성은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 아니었을까?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사를 일별해보면 그 아우라가 더욱 확실해진다. 일제 하 천도교(동학) 계열의 농민협동조합인 공생조합운동, 덴마크에 지도자를 파견하며 배워온 YMCA(기독교청년회)의 소협운동과 농민조합운동, 원불교의 간척사업과 협동공동체 등은 놓치지 않아야 할 한국 협동운동의 뿌리이다. 또한 현대 한국의 생협운동 및 신협운동에서도 종교적 배경이 탄생과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멀리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흥성의 풀무학교와 협동공동체들, 1970년대와 80년대 가톨릭의 지원 속에서 성장한 원주와 강원도의 협동운동,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듯 1960년대 초 가톨릭 수녀님과 신부님에 의해 시작된 한국 신용협동조합의 역사가 그것을 웅변한다. 또한 1980년대와 90년대 개신교의 민중교회운동이 시도한 노동자협동조합의 실험도 잊지 않아야 할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요컨대 국내외 협동조합운동의 태동과 성공의 이면에는 종교적 영성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몬드라곤과 일본의 생협운동이다.

몬드라곤과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가톨릭 영성⁴⁾

2010년 현재 총자산 331억 유로, 총매출 140억 유로, 수출액 36억 유로. 노동자 83,859명이 종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협동조합복합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세계적인 롤 모델로 떠올랐으며 명실상부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보통명사가 된 몬드라곤 이야기다. 1956년 5명의 초급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조그만 곤로공장에서 시작해 수많은 협동조합 기업군(群)과 영국, 아르헨티나, 중국 등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몬드라곤은 이미 하나의 경제 공화국이다.

이와 같은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신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스크 민족주의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사회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의 역사, 수준높은 교육기관과 인민금고의 역할, 탁월한 경영전략 등 여러 요인들이 오늘의 몬드라곤을 가능케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은 돈 호세 마리아 아리즈멘디아아리에타(1915~1976)라는 긴 이름을 가진 가톨릭 신부의 존재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4) 몬드라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협동조합연구소, 2012)를 중심으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역사비평사, 2012)와 관련 논문 등을 참고했다.

관련하여 평생 아무런 직책을 갖지 않았으나, 그는 몬드라곤의 그루(스승)였고 도덕적 사업적 조직적 멘토였다.

캐나다의 저명한 몬드라곤 연구자인 그레그 맥레오드는 몬드라곤의 사상적 원천을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 교회의 전통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시에 배척했으며, 경제를 매우 심오한 인류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둘째는 바스크 사회의 전통인 단결과 근로정신, 셋째는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의 통제도 거부한다. 넷째로 마르크시즘과 자유주의 대안으로써 ‘인격주의(personalism)’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원칙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몬드라곤의 사상적 핵심요소는 유대-기독교 가치라는 것이다. 몬드라곤이 이타적인 공동체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동조합복합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인간, 전인격적 인간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인격이란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인격’을 말한다.

돈 호세 신부에게 유일한 ‘주의(ism)’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었을 것이다. 사랑의 원리가 실현된 삶과 사회. 신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심지어는 협동조합주의마저도 거부했다. 모든 이념적 실천 속에서 지혜를 깨우쳤고, 동시에 모든 이념을 넘어섰다. 이념은 교과서가 될 수 없었다. 신부는 이념이 아니라 다른 ‘삶의 양식(way of life)’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날 수 있었다. “몬드라곤 시스템의 진수는 소비자나 생산자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를 하나의 복합체 조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립자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 양측의 경제적 균형을 존중하

는 시스템을 고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⁵⁾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은 필요의 충족이기도 했으나 이타적 마음, 곧 사랑이라는 종교적 영성이 없다면 불가능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윤리나 지혜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존재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몬드라곤은 국가와 자본을 넘어 경제와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돈 호세 마리아 신부는 궁극적으로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온전한 인격,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격으로 드러난 신격에 천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거룩한 인간주의’인 것이다.

돈 호세 마리아 신부는 말년에 학교 교정의 탑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신부는 탑 위에서 땅 위에 실현된 사랑의 공화국을 지그시 내려보곤 했을 것이다. 몬드라곤에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이다.

일본의 생협운동과 가가와 도요히코의 기독교 영성⁶⁾

돈 호세 마리아 신부가 태어날 즈음 가가와 도요히코는 고베의 빈민촌에서 전도와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노동, 농민, 협동조합 등 일본의 거의 모든 사회운동의 아버지였던 가가와 도요히코(1888~1960)가 오늘날 140만 세대의 조합원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생협인 ‘코프고베’를 설립한 때는 1921년이였다. 세계 3대 협동조합사상가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그는 실로 동아시아의 간디라 할 만하다. 간디가 그랬듯이 그는 사회운동가이자 정치가이면서, 또 수행자였다. 미국에서 정통신학을 공부한 목사였고 수행자로서나 봉사자로서나 평생 예수처럼 살기를 원했으며 또 그렇게 살아왔다. 그는 협동조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협동조합운동은 사랑과 형제애라는 기독교의 이상과 합치한다. 우리들

5) 46쪽,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6) 가가와 도요히코는 『우애의 경제학』(그물코, 2009)을 중심으로, 『일본생협운동사』 등을 참고하였다.

이 구하는 것은 우애의식의 부활, 기독교적 형제애의 부활이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협동조합을 정신적인 운동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종교적 경제관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이자 일본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대부였던 가가와 목사에게 형제애와 우애의 부활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인민들과 사회와 국가의 길이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형제애의 행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국가를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꿈꾸었다.

코프고베의 모토는 ‘생활과 협동’이 아니라, ‘사랑과 협동’이다. 협동의 기초는 사랑이며 사랑 없는 협동은 팔소 없는 찌빵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사랑과 협동’의 정신은 코프고베의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자의 이익을 좇을 일이 아니다. “만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정신으로 하나가 되면 사회에 조화가 태어나리라. 이것을 우리는 사회단위(social unit)라 부른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된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생산-소비 협동을 기대했다. 돈호세 마리아 신부와 가가와 도요히코牧사는 이렇게 둘이 아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우애의 경제학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제까지 발달하지 못한 본능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아왔던 경제활동의 모두를 속죄애의 의식적 행위로 정화하고 합리화할 것을 하나님-의식은 촉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상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일 경제활동을 현상 그대로 방치하면 세계평화는 결코 확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는 1936년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던 시대였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본능 영역에 속해 탐욕의 포로가 된 경제를 ‘사랑의 선물’로 재(再)정의 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경제의 이면, 보이지 않는 신의 사랑

과 이 땅에서의 실현. 가가와 도요히코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다.

협동조합과 경제의 전체성과 음양론

그렇다. 몬드라곤과 일본생협의 비결은 반딧불이처럼 투명한 두 영혼이었다. 경제적 편익만을 쫓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열망했다. 밥과 동시에 신기(神氣)를 구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전면적인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협동조직의 모델을 만들었다. 하지만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경제적 성공의 떡고물을 나누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식회사의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에 밀려서 로치데일 방식의 협동조합은 20세기 초중반 그 의미와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다.⁷⁾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차원의 협동운동의 지평을 연 일본의 협동운동과 몬드라곤의 성공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힘이 바로 가톨릭 영성과 기독교 영성의 사회화에 있었던 것이다. 만약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와 돈 호세 신부의 영성적 지도력이 없었다면 그 조직들은 지속가능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의 경제주의적 협동조합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몬드라곤과 일본생협의 규모와 경영기법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정신, 영혼, 영성이다. 협동조합의 전모,

7)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필자의 입장은 일본의 협동조합 이론가 이와미 다카시(石見尚)의 '제 3세대 협동조합론'과 그의 영향을 받는 오래된 문고판 서적에 근거한다. 20년 전, 『세계의 협동운동』(신협중앙회, 1991)의 지적이 간단치 않다. 16쪽. "개인의 전 생활 가운데 주로 시장경제에 관련된 부분만을 대중적으로 조직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불이익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제 1세대와 같이 참가자의 생활을 공동화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고립해 있으면서 경제생활의 일부를 분야별 기능별로 합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공동사회 건설이 아닌 공리주의에 기초한 기능의 공동화로 영어의 cooperative라는 의미 그대로였다. cooperative란 용어는 협동조합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제 2세대의 공리주의적 조합활동에서 발생한 명칭이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그 무엇, 사람들(association)과 그 사람들의 열망(aspiration)을 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 안에 숨겨진 삶의 전체성을 추적해야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필요와 열망의 전체성과 음양론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발상 자체가 그렇거니와 이후의 협동조합 역시 경제적 필요를 협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꾀했고 이는 일정하게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필요의 충족’, 즉 공동의 경제적 편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대안적 생활공동체로써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생협에서 목격하고 있듯이 협동조합은 대개 자본주의적 소비과정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은 오웬을 비롯한 1세대 협동운동의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고심의 결과가 담긴 것이 바로 ICA의 협동조합의 정의 아닐까?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의에 언급된 ‘열망’의 배경이 아닐까?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needs)**와 **열망(aspirations)**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association)**이다.”⁸⁾

널리 알려진 ICA의 1995년판 협동조합의 정의이다. ‘사업체’와 ‘결사체’에 대해서는 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고 특히 김기섭의 논

8) ICA의 협동조합 정의는 여러 번역본이 있으나 여기서는 김기섭의 번역을 따랐다. 『깨어나라 협동조합』(2012). 단 ‘aspirations’은 염원, 기대, 바람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필자의 감각을 좇아 ‘열망’으로 바꿔 썼다. spire의 어원상 숨쉬다. aspire는 a+spire, 즉 무엇인가를 향해 숨쉬는 것. 참고로 conspire는 공모로 번역되는데, com(together)+spire ‘함께 숨쉬다’라는 뜻이다. spirit의 어원도 물론 spire다.

의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⁹⁾ 그런데 필자에게는 결사체와 사업체보다 ‘필요’와 ‘열망’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바로 여기 ‘열망’ 속에 협동조합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열망의 재발견, 아니 필요와 열망의 역동적 음양론에 더 가깝다. 사업체와 결사체의 역동적 음양론이면서 동시에 필요와 열망의 음양론이다.(변증법이 아니다.)¹⁰⁾ 정확히 말하면 음개벽, 이면에 숨겨진 열망과 열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되살려야 한다. 협동조합의 전체성은 열망의 실현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사업체는 필요에 대응하고 결사체는 열망과 짝을 이룬다. 그러므로 필요-사업체와 열망-결사체의 역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때만이 협동조합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서 흔적만 남은 협동조합의 반쪽, 아니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깊은 열망을 되살려야만 21세기 새로운 차원의 협동조합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말이다. 오웬이 평생을 염원하고 수많은 대안공동체들이 실천해왔던 그 ‘더불어 삶’의 열망이 없이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사회의 지렛대가 아니라 그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받침대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본의 결합이나 사람의 결합이냐에 있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고 협동조합은 필요의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는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공히 사업체로서 공동(조합원)의 필요 혹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결정적인 차이는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열망의 현현(顯現)’에

9) 김기섭의 논리란 『깨어나라 협동조합』의 내용을 말한다. 필자는 협동조합에 관한 한 사실상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다. 오랫동안 이론과 실무로 갈고닦은 김기섭의 논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김지하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호혜·교환·재분배론과 노동에 대한 설명 등은 거의 대부분 공감한다.

10) 변증법이 아니라 음양론이다. 정반합이 아니라 내재하는 역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이다. 여성 안에 남성성이 있듯이, 빛의 성질이 파동이면서 입자이듯이. 심지어는 모순, 창과 방패마저도 공존하는 것이 음양론이며 불연기연(不然其然)이며 불일불이(不一不二)다.

있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본래적으로 주식회사의 열망은 이윤, 즉 자본의 유토피아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 열망은 더불어 숲이다. 박애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의 유토피아, 나아가 모든 생명이 어울려 함께 사는 생명의 숲이다.

숲 가꾸기로 유명한 한 기업체의 광고가 떠오른다. “사람들이 창가에 화분을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맞다. 기분이 좋아지니까도 맞다. 꽃이 예뻐서도 맞고, 건조 방지를 위해서도 맞다. 하지만 그 광고의 답은 다르다. “내 마음 안에 숲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열망이다. 더불어 살고자 하는 열망, 나누고자 하는 열망, 이것은 윤리 이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열망, 생명세계의 본성이라는 말이다. 자비와 사랑과 인(仁)의 그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우주론적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 신부는 우주의 비밀을 이렇게 말한다. “이 세계는 객체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의 영적 친교(communion)이다.”

더욱이 문명사적 전환기, 21세기 협동운동이 나아갈 바는 필요의 충족에 기반하면서도 동시에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영성 사회, 모두가 자기실현하는 창조사회의 길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정의 속에 있는 ‘열망’의 숨은 뜻 아닐까?

일본 생협운동에서도 가가와 도요히코의 정신과 열망은 희미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오늘 쿠프고베의 소개문은 열망의 의미, 협동조합의 보이지 않은 깊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원의 생활을 지원하고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모두의 힘을 모아 각자의 소원과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쿠프고베는 ‘사랑과 협동’의 정신을 출발점으로 앞

으로도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¹¹⁾

필요(생활지원 풍요)와 열망(소원과 꿈을 현실로)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코프고베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경영적인 안정을 위해, 생협을 기본적인 사명인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원이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열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 ‘사랑’이다. 사람들의 마음 한켠 오롯이 남아있는 더불어 삶의 꿈, 나아가 자기실현과 우주와의 합일을 꿈꾸는 깊은 내면의 열망 말이다. 협동조합 안에서 개인의 꿈과 소원을 모두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물품과 활동 안에서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따뜻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생협 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편의점이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영혼은 ‘더불어 삶’의 열망이다.

경제, 교환과 호혜의 전체성과 음양론

협동조합은 필요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경제조직이다. 예컨대 생활협동조합에서의 경제행위는 주로 물품의 공급과 구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매장 안에서 생협물품은 화폐를 통해 상품처럼 판매된다. 매장이 작은 상품시장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분명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 있다. 하지만 그 물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수요공급의 논리가 아닌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비껴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협의시스템만으로 상품시장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필자의 결론은 “아니다”이다.)? 그럼 전통시장의 가격 흥정도 협의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결론은 “그렇다”이다.)

협동조합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 머물 것인가? 밖을 향할 것인가?

11)코프고베 홈페이지. www.coopkobei.org

가?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어차피 시장경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경쟁력을 높여 주식회사를 이기는 길이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시장 밖에서 비시장적으로 협동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1세대 협동운동이나 70년대부터 시작된 급진적 생태공동운동의 선택지였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은 블랙홀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초강력 중력장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제 3의 선택은 가능할까? 무엇일까?

그 해답은 필요와 열망의 음양론에서 이미 암시되었듯이 경제관계의 보이지 않는 면을 재발견하는 데 있다. 교환과 호혜의 음양론이 그것이다. 일본의 인류학자 나카자와 신이치는 ‘교환과 증여의 복(復)논리’라고 말했고, 한국의 시인 김지하는 ‘호혜와 교환의 융합’이라고 표현했다.¹²⁾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잃어버린 호혜의 마음, 즉 증여-답례의 마음을 되살리는 데 있다는 말이다. 상품 안에 내재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에 머물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분석이라면, 거기서 더욱 파고 들어가 생명세계의 증여-답례의 마음, 필요의 교환 안에 숨겨진 호혜의 열망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전일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경제현상이 교환의 원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와 순수증여라는 다른 두 원리와 단단히 묶여 있는 전체성을 가진 운동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¹³⁾

나카자와 신이치에 따르면 경제인류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이전까지 모든 경제관계는 한마디로 교환/증여의 이중적 관계였다고 한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품을 교환할 때에도 물품과 더불어 호혜의 마음과 인

12) 한국과 일본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시인이자 사상가로, 종교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두 사람, 둘 다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김지하 시인의 『춤추는 도깨비』와 여러 저작들, 나카자와 신이치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대칭성 인류학』 등을 참고했다.

13) 214쪽,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동아시아, 2004)

격, 나아가 물품에 묻어있던 영혼까지도 함께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시장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했지만, 시장교환과 화폐거래의 이면에 마음과 인격이 함께 오고 갔다는 것이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일부 생협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러하듯이, 전통시장의 에누리와 흥정과 외상 안에 인정이 묻어있듯이 말이다.(경제적 합리성이 최고의 수준인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왜 자본주의 이전과 이후인가? 농업(노동)의 성격 변화를 통해서 명백히 확인된다. 자본주의 이전 농민들에게 한 알의 씨앗에서 생산되는 풍성한 농작물은 땅의 선물이고 하늘의 축복이었다. 작은 수고로도 온 가족과 공동체를 먹이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자연이 주는 선물 즉 증여의 결과였다. 우주의 거룩한 힘이였다. 당연히 농민의 땀과 노동은 아름답고 신성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의 농업(노동)은 달랐다. 비료와 농약, 농기계가 동원되고, 따라서 농작물의 수확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노동 및 자본 투입의 결과물이었다. 더 이상 자연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과 개발(악탈)의 대상일 뿐이다. 공업생산물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하늘에 감사할 일이 아니라 자본을 송배하며 자신의 투자 및 경영능력을 믿을 뿐이다. 노동력과 함께 인격마저도 사고팔리니 그 땀과 노동은 고통일 뿐이며, 오로지 화폐가치로만 평가된다. 시장(교환과정)에서 인격과 영혼과 감사의 마음을 기대하는 것은 숲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이 되었다.

협동조합 경제는 잃어버린 증여-답례의 주고받기, 즉 호혜의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보이지 않는 힘이며, 협동조합의 영성이 아닐까? 그 때문에 돈 호세 마리아 신부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협동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경제적 합리성으로 포장된 몰인격과 몰영성적 화폐관계, 상품관계로부터 벗어나 경제의 전체성, 교환/호혜의 복논리를 회복

하는 게 협동운동의 진정한 과제 아닐까?¹⁴⁾

예수의 포도원에서는 노동의 법이 다르다. 아침에 온 일꾼에게나 오후에 온 일꾼에게나 같은 액수의 보상을 한다. 그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선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다. 생명의 무게를 측정할 수 없듯이 생명활동으로써 노동은 그 하나하나가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생명의 인드라망을 출렁이게 하는 우주적 사건이다.

또한 호혜는 받고주기가 아니라 주고받기이다. 신약성서는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하라고 강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한다. 동아시아 식으로 말하면 천지부모의 은혜가 생명공동체의 전제조건이다. 자연은 증여 없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웃사랑은 윤리적 당위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양식이며 인간 내면 깊은 곳 존재론적 열망인 것이다. 그래서 호혜는 ‘받고주기’가 아니라 ‘주고받기’인 것이다. 이것은 곧 공동체의 지속가능 원리이기도 하다. 신뢰에 기반해 주고받기의 호혜적 순환적 고리¹⁵⁾를 이어감으로써 공동체의 생명력은 유지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교환과 호혜의 음양론이다. 호혜의 열망은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교환을 통해서 실현된다. 김지하 시인이 불교에서 발견한 자리아타(自利利他)가 그것이다. 나의 이익이 곧 너의 이익이 되는 관계. 예컨대 밥/쌀을 매개로 연결되는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의 관계가 그러하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 곧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14) WHO(세계보건기구) 일찍이 0000년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영적인 건강에 주목하였듯이 이후의 경제학은 영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5) 상품교환의 과정을 통해 돈도 돌고 물건과 자원도 돌고 돈다. 그런데 호혜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순환이 일어난다. 석기시대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쓴 살린스라는 인류학자는 이를 ‘대칭적 호혜’와 ‘일반적 호혜’로 구분하여 말하기도 한다(『풀라니의 경제사상』 참조).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집에 B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면 이게 ‘증여(주기)’다. 그리고 이에 대해 B가 A에게 답례로 식사를 대접했다면 이를 ‘받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쌍방 상호간 동등한 가치의 주고받기를 ‘대칭적 호혜(balanced reciprocity)’라고 말한다. 그런데 A가 B에게 대접을 하지 않고 C라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C는 D에게 D는 G에게... 이런 식으로 돌고돌아 Z라는 사람이 다시 A에게 대접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일러 ‘일반적 호혜(generalized reciprocity)’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호혜의 순환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신뢰의 공동체란 바로 이러한 호혜적 순환의 공동체를 말한다.

농민과 농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생산자에게는 유기농업을 하는 것이 소비자의 밥상을 살리는 일이 된다. 호혜적 교환이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둘이 아니다. 이제 ‘자리이타’는 ‘이타자리(利他自利)’로 깊어진다.

또한 <화엄경>에 나오는 ‘동진불염(同塵不染) 이생상도(利生常道)’의 경지다. “장바닥의 먼지는 함께 뒤집어쓰되 탐욕에는 결코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중생의 삶을 이롭게 하는 항상된 진리의 길”이라는 뜻이다. ‘장바닥에서 먼지를 함께 뒤집어쓰는’은 교환을 의미하고, ‘탐욕에는 결코 물들지 않음’은 호혜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교환 안에 내재된 호혜의 마음인 것이다.

요컨대 열망은 욕망의 지극한 상태이며 욕망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나카자와 신이치는 돈을 주고 산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크리스마스의 밤은 교환의 원리와 증여의 원리가 사랑으로 땀어지는 것이다.” 증여와 교환은 “살을 맞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호혜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

호혜와 교환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며, 마음의 깊은 바닥엔 ‘신령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거꾸로 호혜의 마음이 사라지면 오늘날 마트와 백화점에서 보는 탈인격화된, 영혼 없는 공리주의적 경제관계로 전락하고 만다. 혹 협동조합의 매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열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협동조합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기업일 뿐, 협동공동체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유심론이나 관념론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전체성의 회복이다. 영(靈)과 육(肉)을 분리시키지 않는 전체로써의 영성이다. ‘경제인간’을 넘어서 전인격적 인간의 귀환이다.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개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그들이 모두 평등한 이들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인류 형제애의 교리는 인격적 개성이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

다. 공동체의 실체는 바로 개성적 인격체들의 관계이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이다.”¹⁶⁾

플라니에게 (자본주의의 극단인) 파시즘의 본질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써의 인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본질은 독점이나 불평등에 있지 않다. 여기서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인격주의와 가가와도요히코 목사의 형제애와 플라니의 영혼이 있는 인간이 만난다. 그러므로 뗏속까지 상품화된 자본주의시대,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 영성적 협동운동이 혁명이다. 물품 안에서, 심지어는 돈(화폐) 안에서 신령한 마음을 보는 것이 새로운 비전이다. 바로 이것, ‘직관(intuition)’이다.

협동조합에서의 영성,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물품 안에 녹아든 농민들의 땀을 느끼고 정성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떤 협동조합이든 그 크기가 작건 크건 간에 우리는 삶을 나누고 있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언젠가는 밥 한 그릇으로부터 생명세계를 깨닫고 우주의식과의 소통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내 마음에 숲이 있음을, 숲이 곧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가가와 목사와 호세 신부의 하느님 나라 아닐까? 이때 협동은 생존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근원적 존재양식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성의 출발이다. 축산농민과 채식을 명상할 때,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협동조합은 생명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경제적 합리성과 윤리의 무게를 넘어서 농민과 여성의 마음 깊은 곳 생명감과 연민이 일어나고 깊은 명상을 통해 “내가 곧 너”임을 알아차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서양 수행공동체의 오랜 경구처럼, “내가 바뀌면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16) 『거대한 전환』, 621쪽 홍기빈의 해제에서 재인용

영성적 협동사회의 구상

경제의 전체성과 영성에 대한 통찰은 더 이상 담론으로 머물지 않는다. 이미 많은 대안적 사회운동과 협동운동이 협동공동체와 영성공동체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인도의 사회적 수행공동체 아난다마르가의 프라우트 이론이 정교하게 그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찍이 30년 전 원주에서 전통적 사회운동으로부터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생명사상에 기반한 협동운동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영성적 전체성(spiritual wholeness)과 협동적 삶(cooperative life)은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한 두 개의 열쇳말이다. 밥상공동체와 영성공동체의 음양론, 혹은 협동적 삶과 영성적 삶의 통합이다. 필요의 충족에 기초하는 영성의 실현, 생태적 삶의 바탕 위에 영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을 꿈꾼다. 자본주의 이후의 삶을 지금 여기서 실현한다.

사카르의 영성적 협동사회¹⁷⁾

사카르(1921~1990)는 인도의 수행자이자 영성적 사회혁명가였다. 탄트라 수행법을 바탕으로 ‘지복(至福)의 길’이란 뜻을 가진 사회적 영성공동체인 아난다마르가를 창립하고 평생을 이끌어왔다. 1971년 투옥되어 6년 동안 투옥생활을 했는데 수년 간 하루에 물을 섞은 요구르트 두 잔만을 마시며 단식으로 저항과 수행을 병행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1959년에 사회적 대안이론으로 제시한 것이 ‘프라우트(PROUT)’였다. 프라우트는 ‘진보적 활용론’으로 번역되는 ‘Progressive Utilization

17) 사카르와 프라우트 이론에 대한 기본자료는 주로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물병자리, 2008)에 의지하고 있다. 이 책의 역자인 다다 칫따란잔아난다는 한국 출신의 아난다마르가 성직자로서 『자본주의 종말』(물병자리, 1997)의 저자이며 『공동체의 경제』(녹색평론사, 2001)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프라우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경제 분석서로 『미 비즈니스세국의 몰락, 그 다음 세상』이라는 부제가 달린 『뉴골든에이지』(리더스북, 2009)란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다.

Theory'라는 영어 머릿글자들을 엮어 만든 말이다. 1990년대 초부터 경제적 공황과 자연환경의 급변에 대비하여 마스터 유닛(Master Unit)이라고 하는, 자급자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삶의 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⁸⁾ 오늘날 아난다마르가는 인도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와 호주, 아프리카 등 지구 곳곳에서 '명상'과 '협동조합'을 무기(?)로 새로운 사회와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카르는 사회진보를 “모든 존재들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한다. 그 기본 조건이 육체적, 정신적 필요의 충족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필요조건일 뿐이다. 존재의 또 다른 영역이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사카르의 사회적 비전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너머 “영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체제”이다. 그리고 그 경제적 기초가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고 경제시스템의 핵심적 토대가 된다. 프라우트 경제시스템은 피라미드형 구조로써, 피라미드의 맨 아래 부분은 공공경제, 중간 중소기업의 경제단위는 협동경제(사회적 경제), 맨 위의 소규모영역은 시장경제로 구성된 산업구조이다. 이를테면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와 협동조합경제의 공존이다.

사카르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기업과도 다르고 강제적인 집단화로 만들어진 사회주의체제의 그것도 구별된다.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시스템은 ‘종속적 협동(subordinated cooperation)’을 통해 운영되고 관리자가 노동자를 감독하고 명령을 내린다. 이와 달리 프라우트의 협동조합은 ‘대등한 협동(coordinated cooperation)’에 기초해 경

18) 프라우트 이론은 어떻게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와 관련해 5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1. 개인은 소속 공동체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물질적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2. 우주의 모든 감각적, 초감각적, 영적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3. 인간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지닌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 영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4.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 감각적, 초감각적, 영적인 잠재성을 활용할 때는 이들 상호 간에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한다. 5. 활용 방법은 시간·장소·사람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며, 진취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제적인 목표와 사회적인 목표를 결합시켜 부와 권한을 조합의 각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산시킨다.

삶의 전체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는 지속해서도 안 되고 지속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는 오직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인간사회 전체 및 개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열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카르의 사회적 비전은 자본주의 너머에 있다. 물론 사회주의도 넘어서고 있다. 그 출발점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사상이다. 이제 인류는 개인의 물질적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되, 경제적·물질적 성장 욕망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신적·영적인 면에서 무한성장을 향해야 한다. “균형을 회복한 물질적·정신적·영적인 차원들이 상호 결합되어 건전하고도 전일적인(holistic) 사회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모심의 생명사상과 한살림 협동운동¹⁹⁾

“전 인류와 전 생명계에 찬란한 부활을 가져다 줄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역사적 책임을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존엄한 생명의 존중과 사랑’이라는 보편 진리를 생활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새롭고도 폭넓은 세계관을 창출해내야 하며 **영성적(靈性的)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새로운 생존양식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인간과 자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결정적인 친교와 평화를 성취시킬 **생명의 세계관, 생명의 존재양식을 출현시켜야 합니다.**”²⁰⁾

벌써 30년 전의 글이다. 1982년 김지하 시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지학순

19) 생명사상과 한살림 협동운동에 대해 충분히 다루기에는 지면이 좁다. 여기서는 1980년대 초 생명사상에 기반한 새로운 협동운동의 탄생과 그 의미를 적는 것으로 줄인다.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엮은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깨안다』(그물고, 2006)와 『한살림선언/다시읽기』(도서출판한살림, 2011)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20)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펴낸 『생명운동자료모음』에 실려있다. 강조는 필자.

주교(1921~1993)와 장일순 선생(1928~1994)을 비롯한 이른바 ‘원주 캠프’가 검토하여 세상에 내놓은 운동 팸플릿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란 문건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일명 ‘원주보고서’라고 알려진 이 글에서 그 당시 원주의 사회운동가들은 사회운동의 전환을 천명한다. ‘생명운동’이란 말이 세상에 처음 나온 문건이기도 하다.

원주보고서는 기존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며,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영성을 지닌 살아있는 ‘한’ 생명임을 천명한다. 장일순이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을 빌려 말했듯이 “천지만물 가운데 하느님을 모시지 않은 존재가 없다(天地萬物莫非待天主).”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거룩한 한 우주인 것이다. 서울역의 노숙자도, 매일 마주하는 밥 한 그릇도, 심지어 돌멩이와 풀 한 포기마저도 우주생명을 모시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한 세계관과 철학이 곧 ‘모심(待)’의 생명사상이다.

원주 캠프의 사상적 ‘대전환’은 새로운 차원의 협동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알려져 있듯 1985년 원주소협을 창립하고 1986년 서울 한살림농산을 설립하면서 생명사상에 기반한 협동운동을 시작하기 전, 이미 1970년대 강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동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원주 캠프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좌장인 장일순과 원주 캠프의 실무기획 및 프로그램을 총괄한 김영주, 오랫동안 협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펼쳐왔으며 나중에 한살림을 창립한 박재일 등 원주의 사회운동가들은 광산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용협동, 생산협동, 구매협동 등 여러 가지 협동사업을 실험했다. 그런데 결국 신용협동조합을 빼놓고는 실패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주요 원인은 탄광산업의 쇠퇴, 이농 현상, 정치적 탄압 등이었지만,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협동운동의 한계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새로운 탐색의 결과로 나온 문건이 ‘원주보고서’였던 것이다.

이제 원주 캠프는 새로운 협동운동, 영성적 협동운동을 준비하게 된다. ‘하나로 연결된 생명세계’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협동운동의 새로운 지

평을 열게 된다. 생산·소비 공동협동이 모색되고, 생산·소비 협동의 매개인 먹거리도 농약과 화학비료에 오염된 쌀/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먹거리로 바뀌게 된다. 물론 농업도 화학농업에서 생명농업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도농직거래를 비용절감과 가격인하라는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시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호혜적 관계의 복원으로 이해하게 된다. 교환 속의 호혜혁명이다.

그리고 “생산자 코뮌과 소비자 코뮌의 협동”이라는 세계 협동운동의 오랜 이상(理想)이 한살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산·소비 공동참여형 협동조직 모델로 탄생하게 된다. 농민은 농민끼리 광부는 광부끼리, 소비자운동 따로 생산자운동 따로, 각 협동조합의 경제적 편익을 위해 경쟁하는 협동운동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살리는 새로운 차원의 협동운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영성적 협동공동체의 의미는 ‘한살림’이라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다. 한살림이란 말 그대로 ‘함께 살기’, 협동적 삶을 뜻한다. 하지만 한살림의 ‘한’은 전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 하나하나의 개체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개체성은 전체성을 담고 있는 개체, 즉 무위당 장일순의 또 다른 호인 일숙자(一粟子)의 그것처럼, ‘나락 한 알 속의 우주’인 것이다. 합일(合一), 즉 우주 영성적인 ‘하나됨’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변혁적 협동운동을 위하여

영성은 추상적이지 않다. 영성은 시대적이다. 몬드라곤은 파시즘에 대한 바스크 공동체의 저항이었으며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은 일본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다. 또한 모심의 생명사상은 탈빈곤의 생존권적 생명권과 반독재의 자유권적 생명권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그 바탕엔 사랑의 영성이 있었고, 그 드러난 모습이 협동조합이었던 것이다. 사카르의

영성적 협동사회와 한살림의 생명공동체운동은 자본주의의 파괴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는 전위적 시대정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영성은 래디컬(radical)이다. 공동체의 눈물이 '나'의 슬픔이요, 생태계 파괴가 곧 '나'의 아픔이다. '나'의 영혼을 부정하고 삶의 전체성을 해체하는 자본의 논리를 용납할 수가 없다. 생명과 영성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업보로 인해 이미 이 세계는 종말을 치닫고 있다. 세계화의 역설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없는 시장포화시대,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기후붕괴와 핵기술은 지구생명공동체의 절멸을 재촉하고 있다.

원주 캠프의 대전환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전환'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지속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희망은 오로지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환이 희망이다. 영성적 삶, 생태적 삶, 그리고 공동체적이며 협동적인 삶으로의 전환 말이다.

그렇다면 협동운동 역시 삶과 사회를 변화시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사회적 전환운동에 함께 나서야 할 일이다. 잘 먹고 잘사는 협동조합을 넘어서 삶과 사회를 바꾸는 협동운동으로 가야 한다. 요컨대 '변혁적 협동운동'이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삶과 사회를 바꿀 것인가? 변혁적 협동운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경영 능력과 사업 규모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20세기 사회변화의 동력이 생산력과 계급투쟁이었다면, 21세기 협동운동의 새로운 비결은 영성이다. 1세대 협동조합운동의 전체성을 되살리면서, 2세대의 경제적 합리주의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3세대의 그것은 영성에 기반한 협동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영혼이 있는 협동운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영성이란 '더불어 숲'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다. 공동체성 따로 생태적 감수성 따로, 영성 따로 존재하는 아니다. 내 안의 공동체성, 내 안에 있는

자연, 내 안에 있는 우주생명을 깨달음으로써 전일적 삶의 열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빵과 말씀은 둘이 아니다. 먹어야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나 항상 들어가 있는 쩌빵 안의 팔소처럼 빵 안에 말씀을 담아야 한다. 거꾸로 밥 한 그릇 안에 담겨진 생명세계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종말이 운위되는 문명사적 전환기,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협동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후를 예비하는 협동운동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영성, 모심의 영성을 기반으로 체제 유지의 협동운동이 아니라 체제변혁의 협동운동으로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성환. 1991. 『세계의 협동운동』.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김지하. 2010. 『춤추는 도깨비』. 자음과 모음.
- 김지하. 2003. 『생명학1·2』. 화남출판사.
- 김기섭. 2012. 『깨어나라 노동조합』. 들녘.
- 나카무라 히사시. 1990. 『공생의 경제 생명의 사회』. 도서출판한살림.
- 나카자와 신이치. 2005. 『대칭성인류학』. 동아시아.
- 나카자와 신이치. 2004.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시아.
- 가가와 도요히코. 2009. 『우애의 경제학』. 그물코.
- 다다 마헤시와라난다. 2008.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물병자리.
-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꺼안다』. 그물코.
- 모심과살림연구소. 2011. 『한살림선언/다시읽기』. 도서출판한살림.
- J.R.스탠필드. 1997. 『칼 폴라니의 경제사상』. 한울아카데미.
- 그레그 맥레오드. 2012.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칼 폴라니. 2009.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 사이토 요시아키.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그물코.
- 이와미 다카시. 2003. 『제3세대 협동조합과 사회운동』. 모심과살림연구소.
-

살림의 길

생명문화운동
놀이가 밥이다
• 편해문

생활협동운동
일본 생협의 위기 대응을 둘러싼
이론적 고찰
• 강내영

사회실천운동
2012년 가이아를 점령하라
• 데이비드 니콜

놀이가 밥이다

어린이에게 ‘놀이밥’ 먹이기 운동을 제안하며

아이들은 왜 돌아다닐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 잘못이 아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약을 팔고 그 약을 받아 먹이는 일이 성찰 없이 벌어진다. 아이들은 소리 질러야 한다. 지르고 싶은 만큼 질러야 한다. 울어야 한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뒀야 한다. 뛰어야 한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온 동네를 뛰어다녀야 그게 아이다. 나아가 구르고 뒹굴고 물어뜯고 때로 비명을 지르며 이 시기를 오래도록 보내야 한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땅바닥을 박박 기고 굴러다녀야 한다. 이 어린아이들 아직 사람 아니다. 짐승에 가깝다. 짐승이 울부짖고 뛰고 물어뜯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아닌가. 짐승이 사람 되려면 놀아야 한다.

하루를 이렇게 보낸 아이들은 밤 9시를 넘기지 못하고 졸음에 겨워 펑펑

* 놀이운동가. 지은 책으로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깨롱깨롱 놀이노래》 등이 있다.

나가떨어진다. 밤 9시 전에 훑아떨어져야 아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끄럽다며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뛰지도 못하게 하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뛰어내리거나 구르지도 못하게 한다. 얌전히 손을 앞으로 모으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란다. 그래서 세상에 놀지 못해, 놀 수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만 간다. 마음 한구석에 놀지 못해 답답하기만 한 심정을 애써 꺾꺾 눌러보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고 아이들 마음속에 응어리로 차곡차곡 쌓인다. 이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듯 어려서 마음껏 놀지 못한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아이들은 가만히 좀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끝나고 이런저런 학원에 가거라 그러면 잘 간다. 그러나 새겨들으시라.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누구나 가지고 나오는 100이라는 소리 지르기, 달음박질, 뛰어내리기, 구르기, 울기, 물어뜯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꺾꺾 눌러 감추는 것임을 말이다. 소리도 못 지르고 울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초등 고학년이 되도록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조용히 앉아 책도 잠시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는 때가 가까워지는데 오래도록 꺾꺾 눌러놓았던 것들이 마구 저 깊은 곳에서 밀고 올라와 아이는 가만히 앉아 견딜 수 없다. 아나스타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교육의 틀로 아이를 몰아넣으면서 어찌 그 애가 불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부모들은 모두 자기 아이들이 커서 행복하길 바라지만 아이들은 커서 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져. 그리 행복하지 않아.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 블라지미르, 주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 풀, 나무, 꽃들이 자라지. 여기에 물 주는 시간을 미리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할 수 있을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누군가가 물 주는 날짜와 시간을 지혜롭게 미리 처방했다 해서 당신이 꽃에 물을 주

지는 않겠지……. 그런데, 실상은, 실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야. 시스템이 어떤 것이든 그건 단지 시스템일 뿐이지, 아직 어린 사람한테서 가슴, 마음을 빼앗아 항상 자기한테 복종시키려고 할 뿐이야. 아이를 다른 사람들처럼 조정하기 편한 사람으로 성장도록 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리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 활짝 피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어, 온 우주를 호령할 그거!”

아이들은 마침내 돌아다닌다. 소리 지른다. 운다. 마구 뛰어다닌다. 아니면 생기라고는 없는 아주 무기력한 아이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마구 뛰는 아이와 무기력한 아이는 사실 같은 모습이다. 마구 뛰거나 무기력한 아이들 사이에 있어야 할 명랑한 아이를 만나는 일이 참 어렵다. 아이들은 얼굴에 ‘명랑’이라는 두 글자가 딱 새겨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오래도록 속으로 억눌렀던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세상에 꺼내 보이면 바로 약을 권하고 마침내 먹인다.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마치 아토피에 바르는 연고처럼 한때 상처를 덮을 뿐이다. 그리고 이 약에 끊임없이 기대게 하여 남은 삶을 약에 붙잡혀 살도록 이끈다. 이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무서운 상술에 아이들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 이 무슨 몸쓸 짓들인가.

결핍된 것은 주의력이 아니라 놀이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각종 장애 이름표가 남발되고 있다. 여러 가지 까닭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이들 심리 연구의 영역 확대와 제약회사의 상술 그리고 부모들의 동조에 힘입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셈, 학습, 감각, 운동, 주의력장애의 직접 원인과 맞닥뜨리는 것에는 매우 불편해하고 서로 쉬쉬하는 것 같다. 이런 장애의 종류는 새롭게 개발되어 가짓수를 늘려갈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 또한 늘어갈 것이다. 많은 아이가 병원을 들락거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누가 고통 속에서 해멜 것이며 이득을 볼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왜 아이들이 ADHD로 가는 것일까. 많은 원인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이들 처지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기 어렵다. ADHD, 한마디로 아이들도 살려고 그러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려니 죽을 것 같아 마구 돌아다니고 던지고 욕하는 거다. 주의력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자연스레 자극을 찾아 헤멜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주의력이 이토록 떨어진 것일까. 아이들의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데는 오랜 내력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제 마음대로 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과 아이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력은 놀이에 흠뻑 빠져 놀아야 생긴다는 상식을 거부하니 답답하다. 다시 말해 아이가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놀 수 없었다는 한 증거라는 말이다. 아이들에게 진정 결핍된 것은 주의력이 아니라 놀이다. 의사들아! 부모들아! 교사들아! 병 주고 약 주는 어른들아! 아이들에게 약을 주기에 앞서 제발 아이들을 놀게 놔둬라.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따져보지 않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까닭만으로 그 어린 생명의 기운을 한순간에 꺾는 약을 먹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져보아야 한다. 왜 다 큰 아이들이 교실과 집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고 기운 없어 하는지 말이다. 오로지 할 일이라고는 노는 일밖에 없었던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문 앞에서부터 빼돌려 이상한 곳에 꼼짝 못하게 가두는 일을 도대체 몇 년씩이나 공모했는지 말이다. ADHD 아이를 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려고 이런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ADHD 아이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의 자유를 박탈했고 학습을 지나치게 강요한 결과가 ADHD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엇나간 이야기로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부모 가슴에 돌을 하나 더 얹으려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지금 무엇인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증세와 처방에 빠지기보다는 아이의 살아온 내력을 더듬어 보아야 한다는 데 다름 아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간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놀이 결핍이 주의력 결핍과 매우 관련이 크다는 사실이다. 오늘 고통받고 있는 아이의 살아온 내력을 살펴볼 때 가장 크게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은 놀이와 자유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임을 나도 잘 안다. 놀 동무와 놀 틈과 놀 터가 허락되어도 쉽게 놀이에 끼지 못해 힘겨워하는 아이가 있으며 지나친 충동으로 동무들이 피하기만 해 놀이 속에서 온통 상처뿐인 아이도 있음을 말이다. 그래서 더욱 앞선 아이의 놀이 내력을 살펴야 오늘 아이를 읽고 진정 도울 수 있다.

아이들은 공격받고 있다

다행히 약을 먹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가. 이런저런 곳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은 요령을 익히고 눈치를 보고 결국 자기만 아는 아이들이 되어간다. 주변에 다 자란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아이들을 웃자라게 해서 도대체 어찌자는 말인가.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 또한 좋지 않다. 환경호르몬, 중금속, 식품첨가물, 설탕, 유전자조작 식품, 방사선을 쬔 식품 등등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온통 아이들의 신경계통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어 아이들은 더욱 가만히 있지 못한다. 소아암과 당뇨가 아이들에게서 심심찮게 발견되고 아토피, 중이염, 천식, 비염을 돌아가며 달고 산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도 한창 어울려 놀 때는 가려움을 덜 느낀다. 놀아야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을 기를 수 있는데, 약물에 기대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 어떤 상황에도 약물은 아이들과 멀리 두어야 한다.

너무 많이 먹어 생긴다는 소아비만 또한 놀이를 아이들 가까이에서 내몰아 생긴 것이라면 지나친 주장일까? 그렇지 않다. 더욱 기막힌 것은 우리 사회 빈곤층 아이들 또한 비만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빈곤층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놀이의 접근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한 시간에 1,000원을 들고 놀 수 있는 시설이 PC방 말고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있는 집 아이들은 수영도 하고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가서 몸이라도 움직이지만, 빈곤층 아이들한테는 어렵없는 일이다. 또한, 빈곤층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매우 걱정할 수준이다. 컴퓨터 게임과 텔레비전은 빈곤층 아이들을 더욱 모질게 파고든다. 참 기막힌 현실이다.

아이들의 문제는 놀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부모는 아이들이 평생 쓸 몸을 가꿔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모두 다 뇌에 미쳐 머리가 좋아진다면 뭐든지 하는 어른들을 볼 때 소름이 돋는다. 그러나 왜들 모를까. 뇌가 아이들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이다. 몸이 바르게 만들어져야 뇌 또한 건강해진다는 것을 왜 모를까. 감히 말하건대,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은 아이들을 진단하고 약을 먹이는 사람들일지 모른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이 기막힌 이름은 아이들이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아이들의 타고난 생명의 기운을 학대해 아이들을 어떻게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판결의 죄목으로 읽혀야 마땅하다. 아이들에게 결핍된 것은 주의력이 아니라 놀이다.

오늘 한 그릇의 ‘놀이밥’을 먹이자

어른이고 아이고 많이 놀고 바르게 먹고 더 자야 낫는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놀고 더 자고 바르게 먹이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못 놀고 엉망으로 먹고 잠도 자지 않는 것을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자. 나라와 교육과 피리 부는 어른들이 모두 나서 아이들

을 멸종시키겠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을 보자. 그리고 멸종하는 아이들에게 오늘 따듯한 한 그릇의 ‘놀이밥’을 퍼주자. 그래서 아이가 밖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고 게임도 재미있다는 것을 몸으로 균형 잡게 해주자. 게임과 놀이의 균형을 아이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돕자. 게임에 관해 어떠한 강제도 아이들에게는 무용하다. 아이들은 이제 들고 다니며 게임을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밖에서 놀면서 ‘놀이밥’을 꼬박꼬박 하루에 서너 시간씩 놀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2시간 이상 하지 못한다. 왜? 줌이 쭈서 그렇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문 앞에서부터 빼돌렸던 아이들은 이틀을 컴퓨터 앞에 앉혀놔도 아무런 불편을 모른다. 몸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줌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줌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줌이 쭈서 친구를 불러내 인라인스케이트라도 타는 아이들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한테 달려있다. 아이들을 산 몸으로 만들 것인지 살아도 죽은 몸을 만들 것인지 우리한테 달려있다. 부모는 아이들이 평생 쓸 몸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쥐가 나면 움직이고 줌이 쭈시면 별떡 일어나는 살아있는 몸 말이다.

게임은 중독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아빠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에 오르는 것을 즐거워하던 아이가 있었다. 엄마 방, 동생과 누나 방을 돌아다니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던 아이였다. 이 아이가 게임을 만나고부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더니 문을 열지 않는다. 게임을 만나고 난 뒤로 이런저런 일에 시큰둥해지더니 곧 사람살이의 이런저런 것에 관심을 잃는다.

컴퓨터 게임이 지닌 선정성, 폭력성을 따져 아이들에게 해로움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소용이 없다. 선정성과 폭력성을 앞세우는 일은 게임의

해악이 무엇인지 모르게 물을 타는 것이다. 게임의 무엇이 무서운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정말 무서운 것은 게임에 가까워질수록 동무와 형제와 부모 같은 사람과 멀어진다는 것, 삶이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 가슴 아프다는 것, 힘들다는 것, 눈물겹다는 것, 관계라는 것에서 멀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느낄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누가 무엇으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간 아이를 불러낼 수 있단 말인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야 할 아이들을 온갖 중독으로 물들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아이들에게 게임은 술과 담배 그리고 약물보다 해로움이 결코 적지 않다. 차라리 게임보다 술과 담배와 약물이 덜 해로울 수 있다. 술과 담배와 약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말릴 수 있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 대부분은 무언가를 죽여야 점수가 올라가는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다. 좋지 않은 일을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이 극악한 게임의 원리가 아이들에게 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게임은 점점 많은 생명을 무작위로 죽이는 대량 살상으로 옮겨간다. 마침내 게임은 학살로 치닫는다. 이른바 ‘멀티 샷’이다. 게임은 미군들의 모병에 적극 활용되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 본토 병커에서 옆 전우와 커피를 마시며 무인 전투기에 실린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을 화면에 개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게임 하듯 퍼붓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옛날에는 전쟁 무기들이 아이들 장난감 개발의 원천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거꾸로 뒤집혀 아이들 게임에서 출발한 기술이 전쟁의 도구로 옮겨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게임과 같은 ‘중독’에 빠지지 않는 길은 없을까. 있다. 어려서부터 밖에서 몸으로 놀았던 아이들은 게임중독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밖에서 땀 흘리며 노는 재미를 한껏 몸에 새겼던 아이들은 그 이후에 만난 게임과 같은 것들을 이 세상의 많은 놀이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 만약 아이가 게임에 깊이 빠졌다면 그 아이는 평소

놀이 못했거나 부모들이 놀지 못하게 하였던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나라와 견주어 유난히 게임중독 증세를 많이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놀이를 막고 있는지 반증한다.

게임중독의 치료와 예방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것은 본디 만들어질 때부터 중독을 전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게임으로 말미암은 천문학적인 이득은 누구에게로 가며 또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쏟아 붓는 비용은 누가 내고 있는지를 말이다. 우리는 이중으로 돈을 빼앗기고 있다. 게임을 하느라 돈 쓰고 치료받느라 또 돈을 쓴다. 목소리를 높여 게임중독과 예방과 재활의 모든 비용을 아이들의 영혼을 부수는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는 천박한 게임업자들에게 물려야 마땅하다. 이것이 상식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은 문화관광부와 대통령이 게임을 성장산업의 핵심으로 낙점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몰아준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이름으로 우수게임을 뽑아 상을 주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나라와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은 미디어와 게임에 푹 빠진다. 그러나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문화관광부와 대통령은 내놓지 않는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아이들을 중독에 빠트려 돈을 벌려는 게임 개발업자들을 장려하고 대통령이 상까지 주지만 그 피해자인 아이들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는 나라를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아이들의 영혼을 게임에 팔아 먹고 게임 산업 진흥에 자축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문화산업은 우아한 사기다.

어린이 생명운동은 놀이로부터

지금은 아이들이 멸종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때이며 그렇게 만든 모든 것

들에 대해 무자비한 비판과 싸움을 해야 할 때이다. 어린이 목숨을 살릴 어린이 생명운동을 시작하며 이 땅의 아이 가진 부모와 교사들에게 10가지를 제안한다. 오늘을 사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무언가로 힘들어할 때 아래 써놓은 10가지를 속으로 하나씩 천천히 읽었으면 한다. 아이들은 놀이를 폭포처럼 맞고 자라야 한다. 아이들한테 놀이는 생명의 밥이다. 밥 먹이자. 아이들한테 생명의 놀이밥을 먹이자는 것이 바로 어린이 생명운동의 씨앗이고 줄기이고 꽃이고 열매이다. 놀이를 살려 아이를 살리는 어린이 생명놀이운동을 감히 제안하며 여러 해 고민한 10가지 실천 강령을 내놓는다. 늘 아이들 가까이 두고 마음을 다잡는 데 쓰였으면 한다. 아이들은 놀아야 자고 놀아야 먹는다. 아이들 문제는 놀아야 풀린다. 이게 순리다.

생명놀이운동 10가지 실천 강령

- ① 아이들이 나가 놀 수 있도록 돕습니다.
- ② 아이들이 놀 때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 ③ 함께 놀 수 있는 이웃 동무를 찾습니다.
- ④ 장난감을 사주기보다는 놀잇감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하루에 서너 시간씩 놀이밥을 꼬박꼬박 먹입니다.
- ⑥ 놀아주기보다는 놀입니다.
- ⑦ 공부나 학습, 창의력 따위를 놀이와 연관 짓지 않습니다.
- ⑧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곳을 함께 가꿉니다.
- ⑨ 아이들에게 한가한 시간을 줍니다.
- ⑩ 해방된 부모라야 아이들 자유놀이를 존중합니다.

일본 생협의 위기 대응을 둘러싼 이론적 고찰

세 가지 갈래 : 원리론·기능론·경영분화론

들어가며

전후(戰後) 일본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향하고 있음을 유통업체 인사 가운데 가장 빨리 간파한 인물이 이토요카도(IY) 그룹의 이토우 명예회장이다. 1968년 슈퍼마켓 ‘이토요카도’는 고객을 끌기 위한 ‘미끼상품’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유통업체는 일회성 현상이라고 치부했지만 이토우는 이를 주시하면서 ‘공급 부족의 시대’가 끝났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히트상품과 재고상품을 구분해 재고를 관리하는 경영 근대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계열사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된다.

이처럼 유통그룹이 대량으로 싸게 파는 구조와 방식에서 대전환을 모색하는 시기에, 일본 생협은 ‘단품집결형’, 즉 대량유통을 통한 낮은 가격 구조에 의한 성장방식을 채택하고, 버블경제에 편승하여 점포확장에 집중

* 모심과살림연구소 초빙연구원

투자하였다. 이는 앞으로 생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1990년대의 생협 : ‘규모화’에 의한 경영기반의 확립

일본의 생협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만 해도 미디어는 생협을 소비자운동의 기수로 취급하였지만, 이제는 사회면에서 떨어져 나와 경제면에 보도될 정도로 위상이 변화하였다.

〈표1〉 일본 생협의 년도별 추이¹⁾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생협수	658	670	663	649	652	647	646	641	637	627
조합원수 (만명)	1,410	1,542	1,625	1,729	1,801	1,863	1,925	1,969	2,063	2,081
조합원출자금(억엔)	2,404	2,740	3,152	3,508	3,834	4,130	4,355	4,479	4,667	4,843
총사업액 (억엔)	27,772	30,371	31,587	32,650	32,238	32,739	33,629	33,581	33,870	3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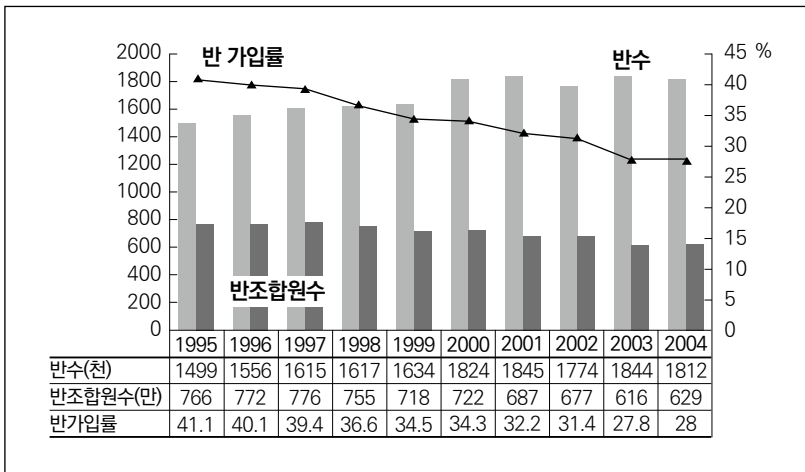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던 생협의 조합원 가입 수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지만 1991년도 이후로 총 사업액은 보합상태로 돌아선다. 이는 생협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조합원에 의해 선별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출자금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생협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쿠리모토(栗本, 2006)는 “일본형 생협의 특징을 부분

1) 〈1999년도 생협의 경영통계〉coop출판, 2000년 9월, 20쪽

적으로 승계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일본의 생협에 있어, 변화의 트렌드를 ‘규모화’와 ‘개별대응’으로 보고 있다. 개별 생협들은 두 갈래 길에서, 한쪽은 점포사업의 확장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개별배송을 도입한다. 전자는 체인스토어 이론에 근거하여 대규모 슈퍼마켓 수준의 면적과 상품진열 방식으로 경쟁에 대응하는 노선이며, 결과적으로 이를 따른 많은 생협이 경영 위기에 몰리고 있다. 후자를 선택한 생협은 순조롭게 사업을 확대해 간다. 이는 지금까지의 반별 예약공동구입에서 1인 예약공동구입 시스템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개별배송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면서 생협이 당면의 위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만 한편으로 생협이 목표로 하는 반별 예약과 공동구입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프1〉 반 수·반 가입률·반 조합원 수의 추이



이처럼 사업 면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협동을 근본으로 하는 생협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로, 조합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협동 조합과 조합원의 거리가 멀어지고 조합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동반하여 사업 외 측면, 특히 사회운동 측면이

악화되는 점이다.

생협이 사업의 규모화나 합병에 의해 거대화하는 것은 곧 슈퍼마켓 형태에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가 '구조화된 시장'에서 제약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소비에 있어 객체 이상은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쿠리모토는 생협이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데 한정되지 말고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생협론의 이론적 검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사회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버블경제에 편승해 무리한 투자를 한 생협 또한 총체적 위기에 빠진 채로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일본 생협이 목표해야 할 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생협의 새로운 상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내용은 각각 <원리론>, <경영론>, <기능분화론>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논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리론적 생협론

생협이라는 조직의 존립에 관한 사상적인 관점에서 생협이 추구해야 하는 것을 읽어내고자 하는 이론이다. '새로운 협동'이나 '주체 형성' 등 비교적 추상도가 높은 논의가 전개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개선 제안이라기보다는 생협에 대한 원리원칙론으로써의 이론 전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원점으로의 회귀' 또는 '원점의 재구축'이다. 현재 생협은 생협의 '원점'으로부터 이탈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노무라(野村, 2001)였다. 그의 이론은 생협이 '공급부족의 시대'에 탄생한 것을 중요하게 짚으며, '공급과잉 시대'에 생협이 대규

모 유통업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원점회귀’의 입장에서 틈새 산업으로부터 처음 출발한 생협이 다시 출발 지점에 대한 자기 확인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생협은 탄생에 있어 공통의 역사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생산자·판매자(공급측)의 강한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 생활재를 구매하는 소비자(노동시민)를 조직함으로써 탄생했으며, 공급부족이라는 경제구조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되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먹거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물자 부족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196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면서 정착했다. 지역 구매생협은 이러한 시대의 산물이었다. 새롭게 생겨난 생협 가운데 동북·호카이도의 생협은 겨울이 매서운 기후조건 탓에 점포형의 업태를 취했지만, 관동지역의 많은 생협은 초기투자자가 적은 공동구입형으로 출발했다. 어느 쪽이든 단품결집형의 상품정책을 토대로 대량구매의 장점에 따른 저렴한 가격의 실현을 추구한다. 모두가 협동한다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는 그 당시 주부 조합원의 마음에 강렬하게 인식되었다. 협동의 고리를 넓힘으로써 ‘보다 좋은 상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운동 슬로건은 생협을 소비자운동의 중심축으로 길러낸다. 그러나 틈새사업으로 출발해 성장을 이루어 온 생협은 80년대 유통시장의 대변화 속에서도 작은 성공을 과신하며 버블경제에 편승하게 된다. 그리하여 뒤늦게 점포경쟁에 뛰어든 이후에는 후발주자라는 초조함으로 인해 불량·과잉 투자를 무모하게 확대하는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공급과잉 시대의 생협은 조합원으로부터 일정한 신뢰를 획득해 가며 공급업자로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부여 받았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객만족을 둘러싼 시장의 경합 속에서 생협이 생활소비재의 보급 형태에 대해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잃어버릴 위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공급업자들의 틈새에서 사업을 시작한 생협은 소비자

를 조직한 사업체이지, 생산력을 소유한 곳은 아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생협의 지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을 사업으로 매개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생협이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생산자에게 그 정보를 잘 전달할 때 생협의 존재 의의는 인정받는다.

조합원 조직이 민주적 기관운영에 의해 활성화되고 조합원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급 측으로서는 생협과의 거래가 필수불가결하고, 생협의 존재 가치도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것은 직원들이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실현이 가능하다. 생활재와 일상의 필요서비스를 전부 사업화 하는 것이 아니라 ‘틈새사업’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급 측의 틈새, 즉 소비자의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분야를 특화하여 자신의 몸집에 맞게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다. 생협이 품질관리의 리스크가 높은 분야를 주요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복지 수요도 종전의 사업 방식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분야이다. 틈새 사업은 이러한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채산성을 유지할 가능성도 생겨난다. 이러한 모든 조건-생협의 역사, 조합원 조직의 성숙도, 직원의 전문적 숙련도 등-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전술적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몸집에 맞는 현실적 단기계획을 장기계획 안에 신속하게 전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와 생산의 협동을 매개로 하는 사업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유지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공급 측의 자유경쟁에 의해 무정부적인 거래의 공정함을 보장하려고 해왔지만, 자유경쟁이 자유로움이 아니라 강자 지배의 수단으로 변화된 시대로 들어선 오늘날, 생협의 사회적 존재가치는 시민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인지되어 왔다. 협동조합의 자치능력이란 이러한 셀프체크(self-check)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고, 그것은 더욱 단순하고 알기 쉬운 기본적 가치인 ‘신뢰’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며, 사회적으로 수용됨으로써 지지받고 있다. 조합원의 신뢰가 없어지면 협동조합의 존재 의미 또한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이어서 ‘원점회귀’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논의 중 가장 급진적인 입장으로 평가받는 다나카(田中, 1998 ; 2000 ; 2006)의 생협론을 소개한다.

일본의 생협·협동조합을 둘러싼 두 가지 대립적인 견해가 있다. 먼저 ‘협동조합주의’의 주장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별개의 원리에서 협동조합의 영향력 확대에 의해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의 반대 입장,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협동조합은 별개의 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협동조합이 그 영향력 확대에 의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는 계급투쟁의 확대로 변혁이 가능하고 협동조합은 그 일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이다.²⁾ 다나카는 협동조합주의의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나카의 생협론은 소비자로부터 출발한다. 소비자는 ‘상품교환의 말단을 담당하는 자로서, 구매자인 동시에 상품을 교환하는, 평등과 자유라는 근대적 인격’을 가진다. 또한 임금노동자라고 할 때는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유’란 노동력 상품의 소유자로서 ‘자유로운 인격’이지만, 생산과 생활수단에서는 분리된 자유라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는 생활수단이 상품으로 나타나고, 상품을 소비하는 생활의 윤택함이라는 것은 상품 소유의 윤택함이 되고, 상품 소유가 생활수단과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지는 것’을 수단으로 하는 상품소비적 생활양식은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개인주의적 생활은 ‘개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모든 개인을 개별화·고립화시켜 물상적 세계를 점차 넓혀나가면 소비자

2) 이와미(石見)의 <계급적 협동조합론>

가 ‘사적 생활’을 유지하는 한 그 격차는 확대된다.

결국 현대사회는 상품교환 세계의 확대와 심화(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소비자의 고립화가 진행되어, 상품세계는 물상적 세계로써 모든 개인에게 외적으로 대립한다. 그리고 물상화(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과의 관계로 표현됨)를 제한하는 인격적 제관계를 조직적으로 편성하는 ‘생활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사회변혁을 일구어 낸다. 생협은 그러한 직접적인 인격적 제관계를 연결하는 조직(인격적 결합체), 즉 협동조합의 하나로 위치한다. 따라서 생협을 하나의 장으로 형성된 인격적 결합체 또는 협동조합으로 보고, 상품교환 사회 또는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은 ‘별개의 원리’로 대치하면서 사회변혁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론적 현대생협론

2000년 1월 일본 생협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생협 위기를 어떻게 경영적으로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주요한 주제였다. 그 자리에서 실적이 우수하여 ‘우량생협’으로 분류되던 단협 간부들은 입을 모아 ‘인건비 절감’을 선언하였고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 삭감, 외부 위탁의 절감, 그리고 대량 해고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쿠레마츠(樽松, 2001)는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생협운동이 재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 생협운동의 3가지 위기-경영, 조직·운동, 신뢰의 위기-를 만들어낸 배경으로 지시와 점검에 의존한 조직 운영의 ‘관료화’를 지적한다. 특히 90년대 생협은 ‘사업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되면서 효율성과 민주주의를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어서 생협의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관료화’가 진행되었다고 본다. 이에 생협운동의 존재의의와 21세기 조직의 자세로서 ‘지시·명령의 조직으로부터 모두가 공감하며 참가하는 조직 운동’의 이론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심축인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

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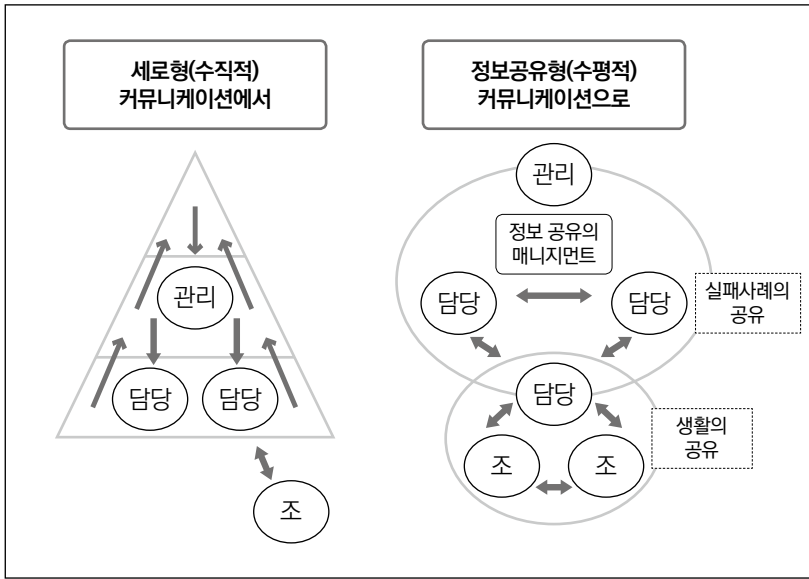
그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는 “개인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지금까지는 생협의 매니지먼트 수준이 낮다는 것을 문제시 해왔지만, 지금은 매니지먼트의 의미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변화 등 현대사회가 ‘통제’에서 ‘공감’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혁신을 할 수 없는 조직은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민주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리더십”이다. 생협이 항상 활력 있게 운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불가결하다. 공통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때로는 운동을 이끌며 모두의 참가를 이끌어내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특정한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의 바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때마다 적절한 ‘운동의 리더’를 선출하여 지원하는 리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용과 참여”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래의 ‘반’은 흩어져 있던 소비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작은 생협이 큰 힘을 발휘하게 하였다. 특히 ‘공동구입의 반’은 이용과 참여를 일체시킨 뛰어난 조직이었지만 현재는 이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불필요한 조합원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반’은 공동구입의 ‘이용반’이라는 역할에서 좀 더 확대되어 ‘지역반’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용’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조합원들도 함께하는 ‘참여’의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현대적인 기술 방법들을 도입하여 ‘협동조합 전략’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생활실태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점포관리나 노무관리의 방법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조합원들의 욕구조사에 관해서는 극도로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매니지먼트로써 <그림1>과 같은 ‘정보 공유형’ 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는데, 기존의 생협조직(수직형)에서는

〈그림1〉 신행 커뮤니케이션의 가설



정보가 상하 일방통행으로 전달되어 서로 간 대화는 필요치 않았다. 그러한 관료조직에서는 리더가 외부의 정보를 독점하고 의사결정을 맡아 해왔다. 최근에 들어서면서는 중간 매니지먼트에 권한이 주어지고 현장 매니지먼트로부터의 의견수렴도 중요시되고 있으나 의견수렴 활동은 위로 갈수록 듣기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향이 있다. 평가나 경쟁의 도입에 의해 상층부에는 성공사례만이 보고되고 다른 직장의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결국 수직형의 커뮤니케이션은 대표가 현장의 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구조로의 개선이 어렵고 조직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면 '정보공유형'은 매니지먼트의 기본인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먼저 실패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담당자가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이 느끼는 것을 조합원들 속에서 전달하고 공감이 넓어진다. 조직 전체도 정보의 공유를 중시함으로써 불필요

한 계층조직을 줄이게 된다. 자연히 관료적인 중간층은 불필요하게 된다. 21세기 생협을 향해 가면서 새로운 조직문화의 개혁을 통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기매김하는 것이 결국 생협의 재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영론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생협이 공동체 조직에서 개방성 있는 조직으로 질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이 어떻게 재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서술한 카미야마(神山 2001)의 생협론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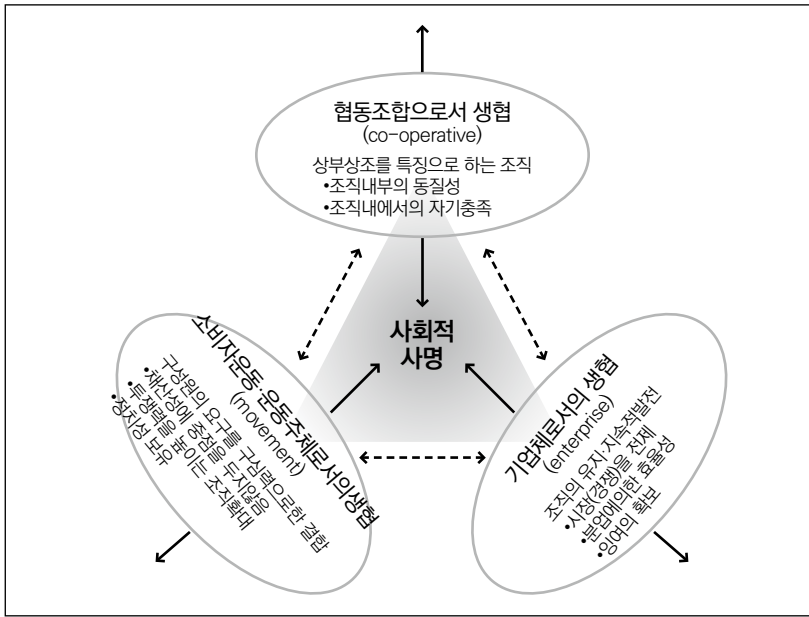
‘보다 나은 생활, 보다 좋은 사회’가 생협의 궁극적 목표이며 존재 의의라면 현대사회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환경 그 자체를 좋은 방향으로 변혁해가는 것이야말로 생협의 사명이 된다. 이 입장에서 본다면 원리적으로는 환경과 자체 조직의 끊임없는 변혁이야말로 협동조합시스템의 유전자에 담겨 있는 특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생협의 사업시스템에 있어 ‘시장적 성격’으로의 변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초창기의 공동구입조직은 주부가 직접 구매와 판매활동을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구매협동모델’의 형태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용만 하는 것도 활동’이라고 조합원의 성격이 정리되면서 전담자(직원)들이 구매대리사업의 담당자로 전면에 나서게 되는 ‘구매대리모델’의 성격이 강화되어 간다. 이는 협동조합 조직이 클로즈시스템(공동체적)³⁾에서 고객조직, 오픈시스템(시장적)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공동구입과 점포라는 두 가지 업태의 확장이라는 발상에서, 양자를

3) 공동체적인 클로즈시스템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동질의 정보를 공유화하기가 쉬워 지식이 없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품·가격의 선택의 폭이 좁고 내부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객관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반면에 오픈시스템의 경우는 좋아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가능하고 제3자가 발신하는 정보의 비교가 가능하여 경쟁원리에 의해 가격을 낮출 수가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그림2〉 생협 고유의 기능과 역할(CME)



‘생협다움’으로 총화·발전시키는 ‘생활협동센터’ 만들기가 전략과제로 제시되기도 한다. 공동구입의 ‘개혁 = 시스템화’라는 도식의 귀결이라기보다는 공동구입에서 상품의 단품집중 형태가 생활 전반으로 볼 때는 일부만의 공급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상품의 폭을 좁히면서 결과적으로 참가하는 층을 한정시키는 데 대한 한계를 인식한 것이다.

세 번째로, 사업시스템에 정보기술(예: OCR주문, IC집계카드, 이용대금의 자동이체 등)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사람’의 문제를 살펴보면 ‘생협노동’이 있다. 생협노동이란 ‘생협의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의 여부는 관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담자도 정규고용 직원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생협조직은 〈그림2〉와 같이 ‘협동조합’, ‘운동체’,

‘기업체’라는 3개의 다른 조직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업시스템으로 볼 때 조직행동은 각각의 특성을 가진 동기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을ダイナミク하게 총합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자 사회적 사명이며, 이때 이질적인 세 요소가 균형을 잡고 조정하면서 상생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협 고유의 과제로써 ‘전문노동 = 협의의 생협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전제로 할 때, 새로운 생협 모델은 개별 이용자의 문제를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해 전심전력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 모델에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네트워크의 핵으로서 위치를 특화해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능분화론적 현대생협론 (사업과 운동의 분리에 근거하여)

이 이론은 생협을 모체로 전개된 여러 활동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생활클럽 생협을 모태로 한 여러 형태의 워커즈 컬렉티브 등이 그러한 예이다. ‘생협 조합원들의 자주적 활동과 모체인 생협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정리할까’라는 것이 초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입장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온 ‘생협운동 = 사회운동 = 「생협은 사업과 운동이 양립(아니면 혼재)하는 조직」’이라는 도식 대신에 ‘생협 = 사업·제활동 = 운동’, 즉 경영과 운동을 분리하는 것으로, 앞서 소개한 〈원리론적 생협〉의 입장과는 대립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오늘날 생협 섹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집중화와 개별배송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수도권 생협(동도생활협동조합, 수도권 코프 사업연합, 동경 마이코프, 동경도 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물류회사 (주)코프·아이의 니시즈카 사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현재 수도권 코프의 현상에서 21세기형 사업시스템의 싹이 움트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원생협은 사업의

70%를 연합회에 위탁하고, 단협 기능은 다른 생협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합원에 의해 스스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조합원이 넓은 의미에서 생협의 기획부분(상품개발이나 조합원 제활동의 기획 등)을 담당하고, 직원은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만 전념하는 식의 역할분담이다. 조합원이 자치·자주관리 해야 할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지음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소비와 관련된 것 이외의 생협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생협이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생활필수품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재화나 서비스(특히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급에 있어서도 여러 면에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 공정’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안심을 기본으로 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의 구제·지구 환경보호·커뮤니티 형성 등에 관한 의식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의 예를 들면 워크즈 컬렉티브와 같은 형태로 전개되고 노동의 대가는 상호부조 활동과 같이 일종의 유상 불린티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 생협을 기반으로 한 서클 활동 등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업이나 활동은 생협에서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존재로 위치지어 있으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호의존적인 관계인 것도 사실이다. 생협의 역할은 상호의존의 정도를 극소화하고 자립의 정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조합원, 나아가서는 시민의 자치·자주관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있다.

끝내며

지금까지 <21세기 생협론>에 관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생협에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방향성에서는 서로 일치하

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리론> 및 일부의 <경영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생협이 구매와 사회운동에서 하나의 조직이라는 기존 인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지만, <경영론>의 일부와 <기능분화론>에서는 이러한 기존 생협론 인식으로부터의 전환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생협 진영에서도 생협의 방향성에 관해 유사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보다 더 협동조합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운동성과 사업성을 분리해 생각하고 활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업적 측면에서도 규모화와 대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유통 시스템과의 경쟁체제가 아닌 틈새를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주장들이 일본에서 어떤 배경과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참고로 한국 생협의 방향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아소 미유키 麻生幸, 2006, 「경영조직론에서 본 생협」, 현대생협론편집위원회편, 『현대생협론의 탐구<이론편>』 코프 출판, pp.157-174.

우에다 카즈히로 植田和弘, 2006, 「환경문제와 협동조합」, 현대생협론편집위원회편, 『현대생협론의 탐구<이론편>』 코프 출판, pp.295-311.

우에노 치즈코 上野千鶴子, 2006, 「생협의 젠더분석」, 현대생협론편집위원회편, 『현대생협론의 탐구<이론편>』 코프 출판, pp.111-149.

우치하시 카츠토 内橋克人, 1995, 『공생의 대지 새로운 경제가 시작된다』 이와나미 신서.

쿠리모토 아키라 栗本昭編, 2006, 『21세기 신협동조합 선언<신역판> 일본과 세계의 생협 그 10년의 실천』 코프 출판.

쿠레마츠 사이치 樽松佐一, 2001, 「21세기 생협의 새로운 전략과 이론을」, 노무라 카와노 유키코 河野雪子, 2007, 「새로운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미야기 생협의 조합원활동 중기계획에서 돌아본다」 『생활협동조합연구소』 382:26-31.

다나가 히데키 田中秀樹, 2006, 「생활주체형성과 생협운동」, 현대생협론편집위원회편, 『현대생협론의 탐구와 <이론편>』 코프출판, pp.85-107.

나카가와 유이치로 中川雄一郎編, 2000, 『생협이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커뮤니티와 복지사회를 위하여』 오츠키 서점.

2012년 ‘가이아’를 점령하라

서틀 액티비즘, 거리의 행동과 만나다...

1939년 10월 초,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영국의 신비주의자 다이온 포춘(Dion Fortune)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전쟁의 위기에 빠진 국가를 위해 ‘집단 의식(group mind)’을 고양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를 만드는 마법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였다. 이 계획은 나중에 ‘영국의 마법전쟁’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녀의 편지에는 모든 참여자들이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15분부터 12시 30분까지 특별한 명상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하여 명상을 할 것을 또한 요청했다. 몇몇의 숙련된 명상 수행자들은 포춘의 지도 하에 매주 일요일 런던에 자리한 그녀의 집에서 둥글게 둘러 앉아 명상을 하며 영적 중심점을 만들었다.

이 명상에서는 영적 힘을 이끌어내는 시각적인 상징이 이용되기도 했다. 상징은 처음에는 상상을 통해 나왔지만 모임이 계속되면서 마치 독립된

• David Nicole. Center for Subtle Activism 이사

• 자유활동가

*** 원제는 Occupy Gaia in 2012: Subtle Activism Meets Street Activism. 미국의 사회적 영성운동 블로그인 리얼 샌드위치(Real Sandwich)에 실렸다. ‘Subtle Activism’은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내용적으로는 일종의 ‘사회적 기도운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체인 것처럼 스스로 성장하며 유기적으로 발전해갔다. 포춘은 이를 두고 그것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러 이미지들은 최종적으로 아서왕의 전설과 그리스도교의 핵심 인물(아서왕과 멀린, 그리스도와 마리아)을 연결시켜 나갔다. 포춘의 모임은 이러한 명상을 통해 영국의 집단의식을 그리스도교와 아서왕 전설과 연관된 기사도와 용기라는 원형적 이상으로 전했고, 이는 역경의 시기에 국가의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모임을 통해 만들어진 신화는 영국의 국가 전통과 깊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가 정신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무의식적 이미지를 의식의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적 뒷받침도 더해졌다.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그러한 생각(무의식에서 전화된 의식:역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실제로 포춘은 (당시에 국가 정신의 거울로 널리 알려졌던) 타임지(The Times)의 사설에 대해 “적절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염원을 잘 표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틀 액티비즘

사회적 변화를 위한 영성 혹은 의식에 기반한 실천을 ‘서틀 액티비즘’이라고 한다면, 영국의 ‘마법 전쟁’은 그 탁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틀 액티비즘은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실천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영성의 내적 세계와 (보통 상상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외적 세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다. 사회적 변화 과정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창조적 방법이 있는데, 운동적 성공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집단의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기술과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음에도 강력한 정신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군대나 사회운동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서틀 액티비즘은

사회운동에는 의미의 차원을 깊게 해주고 참여자에게는 더 큰 동기를 부여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내면의 진화와 영적 흐름을 잘 인식하고 스며들 수 있게 함으로써 운동적 의지를 북돋워준다. 모든 존재는 외적인 분리 이면에 깊은 차원에서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모임도 영적으로 집중하면 공동체 전체나 국가, 종(種) 전체의 집단의식 에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직접적, 물리적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혹은 지구적 변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구의 신비주의는 '마법 전쟁'의 사례에서 이미 보여주었듯이 다양한 영적 형식과 전통을 통해 서틀 액티비즘을 실행하고 있다. 포춘 이후 가장 유명했던 영적 행동은 수천 명이 지구 곳곳에서 동시에 수행에 참여하여 전 지구적 명상 이벤트를 벌인 일이다(인터넷의 발달과, 전 세계적인 초교파 운동의 성장, 영적 전통의 혼합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더욱 용이해졌다.). 실행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 서틀 액티비즘은 내면 세계와 외부의 변화를 통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수많은 창조적, 영적 응답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점령 운동과 그것이 대표하는 세계사적인 전환운동을 뒷받침하는 서틀 액티비즘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점령운동의 영적 차원

점령운동에는 처음부터 어떤 마법이 작용했던 것 같다. 최근 몇십 년 사이 진보적 사회운동가들이 개입한 사건들은 대부분 주류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점령운동은 거의 즉각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다른 저항운동 이상의 그 무엇, 그야말로 역사적인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점령하라”라는 표현의 탁월한 기획력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는

99%다”라는 단순한 메시지 덕분일 수도 있으며, 투쟁의 전략 혹은 유명 인사들의 지지 덕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점령하라’가 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현실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진을 쳤던 캠프는 겨울을 지나며 대부분 사라졌고 이제 점령운동은 다음 단계를 향한 탐색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점령운동이 정치적 견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비평하기도 했다. 어쩌면 이 말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가을에 뿌려진 혁명의 씨앗은 분명 새로운 방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싹을 틔울 것이다.

점령운동에 의해 크게 조명된 불평등 문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얘기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아랍의 봄이 꽃을 피우고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분노한 청년들이 일어나고 점령운동의 현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오늘의 시대정신이 혁명적 행동을 지지하는 역사적인 시기로 들어섰음은 분명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점령 운동이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쟁점은 근본적 전환을 압박하는 다차원적 지구 위기의 한 가지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오일 피크, 대량 멸종, 토양 손실, 인구 과잉, 여전히 위협적인 금융위기의 다중적 위협을 인정한다면, 우리 문명이 이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점령운동은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지구 생명공동체의 폭발적인 자기조직화 과정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뤄내야 할 전환의 기획은 현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원리로 이 세상을 상상하고 조직하고 창조해 나가야 한다. 구시대에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연명해나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넘겨받거나 하는 두 가지뿐이다.

이 전환의 중심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가 분열되어 있는 현대판 최면상태로부터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진리를 인

정하고 살려내는 의식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생태주의자이자 문화사학자 토머스 베리는 이러한 전환을 일컬어 “우주를 ‘객체들의 집합’이 아닌 ‘주체들의 친교(communion)’로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천명했다. 인류 문명이 지구 위에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수많은 지구적 차원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전 지구적 협동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지구 생명공동체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점령 운동이 금융 시스템의 불평등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었음에도 초반부터 이처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다양한 참여자와 보편적인 주제를 겨냥했고, 대중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완전히 새롭고도 포용적인 세상에 대한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 믿는다. 가령 총회나 합의로 도출된 결정을 실행하는 일은 새롭고도 보다 참여적인 자치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발전된 실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사회의 집단지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가진 영성적 의미는 새로운 자각의 씨앗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회-정치 영역의 틈을 열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점령운동을 통해 새로운 인식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지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알다시피 가을에 에너지가 처음 분출된 이후, 점령 운동은 향후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숨을 고르고 에너지를 모으며 점점을 위한 자기 성찰의 국면, 휴지기로 들어갔다. 점령운동은 또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략으로서의 비폭력에 대해 재산상 혹은 물리적 공격과 폭력을 포함하는 ‘전술의 다양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엄존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근본 문제를 부각시킨 대가로 얻은 경찰 및 정부와의 야영지 관련 분쟁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게 된 현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여전히 이용하고 기대어 살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맞서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내적 성찰과 대화의 시간은 점령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 운동을 재편성할 에너지와 추진력을 얻는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의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틀 액티비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다시 말하면 서틀 액티비즘은 분명하고 직접적 형태의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직접행동은 꼭 필요하고 더욱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다른 상황에서는 수동적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창조적인 응답 중 하나이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갖가지 활동 가운데, 모두가 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일에 요청을 받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요청받은 사람들 모두가 거기에 응할 수도 없다). 실제로 점령 운동에 참여해 텐트를 치고 집회에서 행진했던 이들은 수천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은 되었을 것이고, 거리에서 함께하지 않았거나 함께할 수 없었지만 이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수백 만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서틀 액티비즘을 통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점령운동의 전망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연결될 수 있고, 운동의 공간을 계속 넓혀가는 전 지구적 깨달음의 장을 만들 수 있다.

‘가이아를 점령하라(Occupy Gaia)’는 점령운동을 지지하는 전 지구적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아필드 프로젝트(Gaiafield Project (<http://gaiafield.net>))가 소집한 서틀 액티비즘 프로그램이다.¹⁾ 이는 점령운동에 영성의 변혁적 힘을 연결시키도록 개발된 많은 선도적 운동 가운데 하나이다(다른 사례로는 명상 플래시몹, 변화를 위한 자리, 불교 평화 협회, 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여러 종교 간 연합 활동들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gaiafield.net>에서 볼 수 있다.

1) The Gaiafield Project is a project of the Center for Subtle Activism, an action research center associated with the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San Francisco. 가이아필드 프로젝트는 서틀 액티비즘 센터의 프로젝트이고, 활동 연구센터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통합 학문 연구소와 관련이 있다. 웹사이트 <http://gaiafield.net>

방사능 문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 먹는 일은 책임지는 일 - 쓰치다 다카시 씨에게 듣는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매스컴에 휘둘려 그저 안전한가 혹은 위험한가 하는 것만으로 방사능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초래한 장본인(도쿄전력, 정부 등)에 대한 분노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40여 년 전부터 이미 탈원전을 주장했고, 농가와 소비자 간 제휴운동에도 진력해 온 쓰치다 다카시(전 교토세이카대학 교수, 환경사회학) 씨에게 물어 보았다.(편집자 주)

엄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동일본 대지진 당일(2011년 3월 11일) 일본 유기농업연구회 전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후쿠이 현에 가 있었습니다. 3월 11일에 원전은

* 원글 출처는 일본 「현대농업」 2011년 11월호. 번역 : 박맹수(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이가현(전 한살림연합)

이미 대단히 중대한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전력 또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 같은 중대 사태가 일어난 것을 몰랐다면 그들은 원자력과 같은 매우 위험한 기술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숨겼다면 그들은 참으로 죄가 깊은 무리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커다란 문제입니다.

대회가 끝나 교토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상당역을 맡고 있습니다만, 1973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¹⁾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래 월 1회 정도로 탈원전 강연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매월 11일에는 칸사이전력 교토지점 앞에서 탈원전 캠페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¹⁾

그러한 강연회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호소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탈원전 강연회를 통해 사고 원전 주변의 농산물을 함께 먹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방사능이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켜버린 현실은 대단히 엄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태를 직시하면서 그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기중심적 생각과 지나친 공포감으로 인해 엄혹한 현실 앞에 소극적인 태도가 되어 버리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신부와 영유아는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 특히 고령자들은 후쿠시마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를 함께 먹음으로써 문명사회의 혜택을 누려온 책임을 함께 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 쓰치다 선생은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탈원전 및 오오이원전 재가동 반대를 위한 단식농성을 한 바 있음.

이카타 원전 소송에서 알게 된 것들

원전 문제에 관여하신 지 40년 가까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54년에 비키니 섬 수폭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핵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하고 원전을 만든다면, 다시 말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몰라도 한편에서는 핵 실험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원전은 평화적 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업적 이용이었지요. 그래서 당초부터 원전은 수상쩍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원전 문제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은 1973년 시코쿠전력 산하의 이카타 발전소 원전 소송 때입니다. 그 당시 원전에 대한 저의 지식은 원자로가 비등수형(沸騰水型)인가 아니면 가압수형(加壓水型)인가 하는 정도, 즉 개요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도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초보자였던 거지요, 그런데도 이카타 원전소송에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초보자인 제가 소송에 끌려나오게 되었던 것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아무도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원전 추진은 국책이었지요. 전문가들의 경우, 국책을 거스르면 연구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쿄대와 교토대의 원자력공학 교수들은 돈다발로 귀싸대기를 얻어맞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는 성과라는 것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즈음하여 등장했던 어용학자들의 태도를 봐도 아주 명확한 것이었지요.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증인으로 도쿄대와 원자력연구소의 1급 연구원을 줄지어 내세웠습니다. 그에 비해 원고인 주민 측은 초보자인 제가 원자로 노심 연료 분야를 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양측 증인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이카타 원전 소송은 도저히 승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정부 측은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인 교수들이, 주민 측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신출내기 조교수²⁾가 상대했던 거지요. 그래서 정부 측은 주민 측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고나서의 상황은 아주 불 만했습니다. 정부 측 증인인 도쿄대 교수가 답변에 공한 나머지 침묵하는 시간이 속출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렇게 재미있는 재판은 일찍이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원전은 국책사업이었고, 최종 판결은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편견에 근거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었고, 결론에 맞지 않는 원고 측 주장, 즉 주민 측 주장은 일방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재판이라면 무엇 때문에 재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판결을 널리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한 공적이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엉터리 같은 판결을 들은 뒤 마츠야마에서 오사카까지 칸사이기 선을 타고 밤에 돌아왔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도 3권 분립도 모두 뼈대만 남고 의미가 없어져가는, 바로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과학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학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의문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이카타 원전 소송 판결을 계기로 등을 떠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토대학 공학부 교수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농업과 먹거리가 못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카타 원전 소송이 시작되었을 무렵과 거의 동시에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드시게 되었군요.

2) 당시 쓰치다 씨는 교토대학 공학부 조교수였음.

1950년대 초에 ‘케세라세라’라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내가 시집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자일까 아니면 가난한 그림쟁이일까,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지, 앞날의 일은 몰라.”라는 가사입니다. 비유컨대, 한쪽은 가난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가난뱅이 화가, 다른 한쪽은 돈 많은 부자. 여자가 어느 쪽으로 시집갈지 망설인다는 노래입니다. 농업기본법 제정이 1961년이지요. 그 기본법에 근거한 농정이 시작되기 전에 불렸던 노래입니다. 당시 일본은 시대의 전환점에 와 있었던 거지요. 용케도 이 노래는 당시 일본 사회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삶의 보람이나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경제적 또는 물량적 행복만을 추구할 것인가를 비유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이 어느 쪽을 선택했는가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렇듯 물량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조금 뒤쳐진 채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농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속아 넘어갔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농민들을 부추기고, 약간의 보조금을 붙여 정치라는 이권 구조 속으로 농민들을 끌어들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농약과 화학비료가 대량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업이 못쓰게 되면 먹거리도 못쓰게 됩니다. 첨가물 투성이의 식품공해가 빈발하는 것도 불 보듯 뻔하지요. 세상이 온통 돈 중심의 시대가 되면 썩은 것은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되고, 그저 대량생산-대량소비로 비용절감을 도모하면서 값싼 상품을 많이 팔아 이익을 내려 합니다. 하지만 식품은 변질 되고 썩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거리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거리를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썩는 것은 아주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첨가물 등을 넣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일까요?

또 하나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가능성이 큰 식량 위기에 대해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

모임 설립 후 바로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힘을 기울이게 되셨다고요.

네, 지금은 저희 모임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중에 무농약 재배 농산물이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설립 때부터 저는 농약을 치지 않은 먹거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아니라,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문제 있는 소비자와 역시 문제 있는 생산자가 서로 손을 잡음으로써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해 가자는 것이었지요.

예를 들어 소비자 측이 “농약은 두려운 것이고, 신경독(神經毒)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처음에는 농민들에게 즉각 전달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우스 안에서 소독 작업을 하고 나서 밤에 맥주를 마시면 그 맥주가 아주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 농민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신경독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농민들에게 당신 손자들에게 먹일 것과 똑같은 먹거리를 원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재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농약의 정의(正義)에 대해 말하기보다 농약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생산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서히 무농약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날로 고령화되는 농민들에게 뜨거운 염천 아래에서 풀베기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에고이즘(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문제투성이인 사회 현실에 주목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무리 비싼 값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에고이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모임은 이렇게 자칫하면 에고이즘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람은 돈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에 기뻐하거나 즐거운 감정을 느꼈을 때 바로 그런 감정에 의해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예컨대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는 점을 생산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산자는 무농약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했을 때 소비자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보람을 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계는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쓰치다 씨께서는 현재 일본유기농업연구회 간사이시기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농업 운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유기농업연구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연구회 결성 당시의 취지서에 담긴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후쿠시마 대회 때입니다.

1971년 일본유기농업연구회가 결성될 당시 그 취지서에서 강조했던 것은 경제합리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경제합리주의에 따라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됐고, 그 결과로 흙과 먹거리와 건강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지요. 바로 그것이 망국의 위기라고 강조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운동이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기농 운동은 단순히 농민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먹고 있는 모든 소비자를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지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소비자들에게 각성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유기농 운동이 그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라는 좁은 의미

의 운동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산자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운동의 의미를 농(農)의 위기, 문명의 위기와 관련지어 호소해 왔는데 과연 그 같은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한다는 것. 이것은 유기농 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싸게 지불해야 할 대상은 ‘안전’이라는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을 생산해 내는’ 가치에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소비자는 물론이려니와 생산자들에게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본의 유기농업이 변질되고 만 것은 JAS법³⁾에 의한 유기인증제도가 시작되고부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이미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소비자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면서도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진정한 제휴’일 것입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분노해야

처음 주제로 돌아가면, “사고 원전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함께 먹자”는 호소 역시 유기농업과 농약 문제에 대한 쓰치다 씨의 생각과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사고 원전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잠정기준

3)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950년 제정)

치⁴⁾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사능 물질이 제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 원전 근처의 슈퍼에서 물건을 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온 물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이 많습니다. 사고 원전 주변 지역의 어린이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이 먹자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원전 주변의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그런 현실로부터 자기만 빠져 나오려는 생각은 이기주의입니다. 다 함께 마음 아파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 아파한다고 해도 싫은 것은 싫은 것입니다. 그 싫은 것의 정체에 대해 직시하면서 그에 따른 분노를 그것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안전지대로 피해 왔으니 됐다.”라고 할 때 과연 분노가 끓어오를까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분노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도쿄전력과 ‘원자력 무라(원자력 추진세력)’의 인간들이 저야 할 책임을 철저히 따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함께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서 교토에서도 ‘다이몬지의 오후리비’⁵⁾ 문제가 있었습니다.

4) 채소와 쌀의 경우 1킬로그램 당 500베크렐. (2012년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기준치 즉 1킬로그램 당 50베크렐이 적용되고 있음. - 번역자 주)

5) 죽은 혼령을 보내기 위해 불을 피우는 행사로 매년 8월 16일 교토에서 열림. 2011년 행사에서 당초 교토시와 고잔 오후리비 보존회 측이 고잔 오후리비에 쓸 장작으로 도호쿠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쓰러진 이와테 현 리쿠젠타카타시의 명승지 다카타마쓰바라의 소나무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방사능 불안을 호소하는 교토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계획을 취소함. 이후 유가족 등 재해를 당한 지역민들의 감정을 무시했다는 비난 전화와 글이 폭주했고, 주최측은 다시 리쿠젠타카타시의 소나무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실제 해당 소나무 장작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됨에 따라 사용을 재차 취소하고 대신 당초 그 소나무에 적혔던 피해지역 주민들의 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붙인 교토 산 나무 장작 1000개를 사용했음.

그 문제는 교토의 수치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큰 문제라고 미리 생각해서 ‘노’라고 말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믿는 사람들의 심정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을 ‘오쿠리비(혼령을 보내는 불)’나 ‘무카에루비(혼령을 맞이하는 불)’라는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써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은 선의에서 계획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데서 사회가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로 방사능 물질을 뒤집어 쓴 장작을 태우면 오염을 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지요. 아무리 작은 정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싫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은 자지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자기를 왜곡하지 않은 가운데 타인과 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방사성세슘이 1킬로그램 당 1천 베크렐. 이 정도 수준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분노는 행사를 계획했던 사람들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과학자로서 쓰치다 씨는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과학자를 그만 두어서 과학적인 논의 방법은 취하지 않습니다만, 1000베크렐이라는 방사능은 어느 정도일까. 후쿠시마현의 고도로 오염된 지역은 1m²당 3천만 베크렐의 오염도입니다. 1000과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아닌게 아니라 3천만 베크렐의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지요. 하지만 50만, 100만인 곳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쓴다면, 1000베크렐에 난리를 치고 있는 나 자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만을 바란다면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1000베크렐이 작은 수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전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존재해 왔을까요. 자연방사능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어용학자들이 자연방사능 이야기를 뿌린 죄를 면죄하듯 이야기하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로서 직시합시다. 자연계에는 방사성칼륨이 있습니다. 이것이 칼륨이라는 원소의 일부로서 온갖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상태로 있다면 무해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적인 방사성 세슘과 천연의 방사성 칼륨, 양쪽 모두 방사선의 피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거부는커녕 우리는 쌀이나 채소를 통해 방사성칼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토란에는 칼륨이 많지요. 그 대부분은 비방사성 칼륨이지만, 일부는 방사성 칼륨입니다. 알קות도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방사능을 많이 섭취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⁶⁾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감자도 고구마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방사성 칼륨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성분의 효과, 다른 요인으로 발암을 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매일 자연의 방사능을 섭취하고 있는 인간의 몸은 대체 몇 베크렐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방사성 칼륨만으로 매일 50 베크렐 정도씩 섭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배출도 하고 있지만, 신체에는 상시 3000~5000베크렐의 방사능이 있습니다. 만약 조금의 방사능도

6) 감자나 고구마의 방사성칼륨은 1kg당 120베크렐 이상이라는 사산(試算)이 있다. 쌀에는 1kg당 30베크렐 정도.

싫다면 만원 전철은 타지도 못하겠지요. 그런 여러가지를 생각하면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농민은 농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원전 주변에서는 도쿄전력과 원자력 무라가 만들어낸 원자력 발전 때문에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바꾸고자 노력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안전한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차별입니다.

이후에는 방사능과 어느 지점에선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방사능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방사능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이더라도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라고 해도 방사능이 여기 저기 뿌려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경제적 이권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여 위험한 원전을 늘린 도쿄전력과 원자력무라의 패거리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우리는 서일본에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관서에는 와카사⁷⁾라는 일본 제일의 원자력발전지대가 있습니다. 내일이 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만 하는 첫 번째 과제는 일본 전체의 원전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끼리 서로 문제를 떠맡길 일은 아닙니다.

7) 옛 지명의 하나. 지금의 후쿠이 현의 남서부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해 먹자

‘사고 원전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함께 먹자’라는 호소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네요.

방사능 피해는 아이들이 감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임산부는 지켜야만 합니다.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낮지요.

방사능의 피해, 특히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일찌감치부터 지적한 미국의 고프먼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논문과 책은 저희의 바이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비판적 논점은 고프먼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고프먼에 따르면 50세 이상이 방사능에 의한 암으로 죽을 위험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45세 이상도 위험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암이 걸리기 전에 수명이 다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지 말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선견적인 주장을 해 온 고프먼의 주장을 신용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사람은, 도쿄전력과 원자력무라에 대한 분노와 함께, 후쿠시마와 그 주변의 농산물을 먹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50살 이상의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을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손자들의 방사능 피폭을 줄이기 위해, 농업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농산물을 먹는다고 해도 벌을 받지는 않겠지요.

후쿠시마에는 몇 번이나 방문하셨는지요.

2011년 6월과 8월 하순에 두 번 방문했습니다.⁸⁾ 6월은 이타테 마을에 갔었습니다. 다테 시에서 고개를 넘어 이다테에 들어선 순간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소는 방목되어 있고, 밭은 전혀 경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

8) 쓰치다 선생은 지금도 계속 2개월에 1회 꼴로 후쿠시마 방문을 계속하면서 현지의 유기농가 및 유치원 등을 돕는 일을 하고 있음. - 번역자 주

화롭지만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8월에 방문한 미나미소마 시도 일부분 경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밭을 일구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지요. 밭은 한 해만 경작을 하지 않아도 다음에 밭을 일굴 때 굉장한 근성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짓이겨졌을 농민들의 마음, 그들의 진짜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없겠지요.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후쿠시마 현은 일본 전체 쌀 생산량의 5%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 후쿠시마 산 쌀이 판매되는 상황에 따라 5%의 생산량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하 광물자원에 의존하는 공업문명의 번영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언제까지나 먹거리를 수입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농지가 줄어들면 아이들은 점점 굶주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아이들과 손자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가까운 지역의 농업을 지키고 싶습니다.

왜 쿠바의 생태농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라도 국민들이 행복하기 어려운 작금의 장기불황, 석유고갈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잘사는 법’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유기농에 대한 높은 관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난한 과정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인간은 이미 지구의 한계를 25%나 넘어서서 환경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도성장을 포기하거나 하강하겠다는 과감한 행보는 여전히 위험천만하다는 것이 지배적 인식이다.

쿠바는 경제봉쇄로 국가적 위기를 맞아 갑자기 엔진을 잃어버린 비행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만의 동력을 개발해 초저공비행으로 연착륙하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주체들의 협력과 전통농업 복원으로 재발견한 유기농업 운동의 시작이었다.

• Fernando A. Funes Qauilar. 쿠바 농생태학 교수

• 모심과살림연구소 초빙연구원

*** 『지속가능한 농업과 저항 : 전환하는 쿠바의 먹거리 생산』(Sustainable Agriculture and Resistance : Transforming food production in cuba) (2002) 中 제1장을 발췌, 번역하여 소개함.

세계자연보호기금이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나라로 든 쿠바는 세계공황에 비길 만한 위기에서 살아남으며 이제는 평균수명, 교육수준, 1인당 GDP를 토대로 산출한 인간개발지수 0.8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나와 우리, 이후 세대의 먹거리가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쿠바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쿠바 유기농업운동 발전 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쿠바는 규모화된 협동농장 혹은 국영농장이 주축이었던 기존의 중앙집권적 제도나 생산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면적 발상의 전환을 꾀했다.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들과 도시텃밭 농부들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생산 강화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둘째, 식량위기 극복의 방안으로써 기존의 관행농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수입선을 모색하는 대신 전통농업을 복원하고 과학기술 체계를 재정비하여 교육과 현장훈련을 기반으로 한 농생태학을 정립했다. 그리고 농민, 학자, 행정관료 등이 현장, 연구소, 대학, 정부부서에서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유기농업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셋째, 도시의 빈터나 텃밭을 활용한 신선한 먹거리 생산이 직거래 장터 이하의 가격으로 도시 좌판과 재래시장을 통해서 거래되었다. 기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토지들이 생태농업 선구자들에게 재분배되었고, 생태농업을 시행한 지 수년 만에 소농들과 도시텃밭 농부들이 식량안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간의 삶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생태적 채무를 해결하라. 국민들이 아니라 굶주림과 싸우라’고 독려하는 쿠바 생태농업의 원칙과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유기농업은 최근 수십 년 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늘날 강력한 국제적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운동의 주요한 목적은 보편화된 “녹색혁명”형 농업모델을 찾는 것이다. 처음에 녹색혁명은 수확량에 큰 영

향을 미쳤으나 취약성과 환경, 건강, 생태계에 대한 위험성이 드러나고, 더불어 최빈 농민층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야기했다. 녹색 혁명은 오늘날 국제 환경문제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을 일으키고 지속시켜왔다. 이는 1992년 브라질에서 있었던 유엔 지구 정상회의에서부터 공히 인식되어 온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지의 상당 부분이 침식, 염분화, 황폐화되는 등 산업형 농업이 초래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상실, 삼림파괴 증가,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해 왔고, 국제 과학계도 반복해서 이 문제들을 제기해왔다. 지난 두 세대에 걸쳐 이 문제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세 권의 책,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1962), 『도둑맞은 미래』(테오 콜본 외, 1996), 『굶주리는 세계: 12가지 신화』(프란시스 라페 외, 1998)가 출간되었다. 이 책들은 우리 시대의 근원적 문제를 점검하고 지배적인 농업모델이 만들어낸 환경 문제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준다. 이들은 좀 더 생태적인 방향에서 농업발전을 재설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쿠바에는 오늘날의 유기농업운동을 이끌어온 중요하고 역사적인 선구자들이 있었다. 초기 개척자들은 생태농업적 전통을 수립하고 저술 등을 통해 중요한 지식, 개념, 아이디어를 미래세대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간, 특히 1990년대에 쿠바에서는 유기농업운동을 농업 시스템뿐 아니라 환경에 기반을 둔 발전이라는 국가적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왔다. 쿠바는 국가차원에서 특화한 제도, 법률, 연구, 교육 등의 체계를 수립하고, 생산적인 실습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레인(Lane)에 따르면, 쿠바 발전모델은 21세기에 최초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이 있다. 그녀는 이 잠재력을 구성하는 기본축의 하나로 과학과 교육에 기반을 둔 발전을 지목하고 있다.

1990년 이전의 쿠바농업: 혁명 이전

쿠바의 유기농업운동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바농업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원주민들은 콜럼버스 이전 시대 수렵·어업과 병행하는 아주 초보적인 농업을 수행했다. 정주농업은 식민지 지배기간 중 1511년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발의한 첫 번째 토지분배 시기에 시작되었다.

1536년 왕정의 토지 접거는 상티 스피리투스(Sancti Spiritus)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정착하는 농촌 지주계급에게 토지를 분배해 쿠바농민을 탄생시켰다. 약 65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노예들이 18세기 후반에 섬으로 유입되기 시작해서 사탕수수 산업을 탄생시키고 확장하여 쿠바 농업 발전의 핵심이 되었다.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농법은 얼마 후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프리카 노예들과 유럽, 스페인령 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기술들이 합쳐졌다. 이런 혼합기술은 섬의 자연조건에 적용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분야를 창조하고 조심스러운 선별, 토지 전유, 지역 기후에 걸맞은 파종 일정 계획, 복작과 돌려짓기를 활용한 파종, 토지개량에의 적용, 유기 비료 등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냈다.

4세기 동안 중소규모 토지 소유자들, 특히 작물기반의 중소 생산자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목축민들은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까지 여전히 대 자산가들로 이뤄져 있다가 후에 인구증가와 더불어 중소규모 작물과 겸하는 농장들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 포조 뿔케스(Pozos Dulces) 백작이 “사이짓기, 돌려짓기가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무성해진 토지 파괴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초기의 농생태학적 사고를 제시하였고, 라미로 게라와 페르난도 오토리즈 같은 역사학자들도 이 시기의 특징들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독립전쟁시기(1895-1898)의 초반에는 9만

7백 개 활동농장이 있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6만7백11개로 평균 면적은 58헥타르 였다. 미리 점유된 13헥타르 미만의 토지들은 국가 농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135헥타르 이상의 대농장들은 사탕수수와 가축생산에 전용되었다. 사탕수수 단지에서도 몇몇 토지는 소 목축, 산림 생산, 먹거리, 기타 작물용으로 이용되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개입과 대량의 자본이 섬으로 유입됨과 동시에 사탕수수 산업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대토지 소유 혹은 몇몇 사례들에서 소 목축과의 연계를 특화시키는 것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동시에 농장 수가 감소하고 토지가 소규모화되며 유형이 보다 다양해졌다. 1934년에 중소규모 농장은 38,130개만이 남았다. 이후에 대규모 쌀 생산은 대규모 라티퐁디움¹⁾들의 확산과 더불어 사탕수수의 궤적을 따랐다. 이러한 대규모 단작 라티퐁디움들은 ‘관행적’ 혹은 ‘현대적’ 농업의 원칙들을 사용하는 미국계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1958년 쿠바 인구의 56%는 여전히 농촌에 살고 있었으며, 극심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농업 분야에서 9.4%의 토지 보유자들이 73.3%의 토지를 소유한 반면에 85%의 농민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며 대토지에서도 4백만 헥타르 이상이 경작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반면에 20만 가족농들은 땅이 없었다. 농촌 지역은 문맹률, 유아 사망률이 높았으며, 비위생적인 조건에 처해 있었다. 6백만이 조금 넘는 전체 쿠바 인구 중에서 60만이 실업상태이고, 50만 명 이상이 1년에 4개월만 일하는 임시 농업노동자였다. 최상급의 농지 절반 이상이 외국계 소유자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

1) 소수의 스페인계 가문이 소유한 대농장 토지들

혁명기의 농업

1959년 쿠바혁명 승리 이후 1959년과 1963년에 농업개혁법을 통해 20만 가족농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반면에 70%의 라티퐁디움들은 국가 소유로 넘어갔다. 동시에 이 지역들의 교육, 문화, 건강, 경제개발 분야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농촌마을, 고속도로, 도로가 건설되었고, 농촌 전기화와 더불어 건강시설, 학교, 대학, 과학센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

혁명적 농업 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 ▶ 인구의 먹거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 ▶ 수출수입을 확대시키는 것
- ▶ 농촌지역의 빈곤과 비위생적 조건을 제거하는 것

혁명 초기에는 농업 다양화와 환경친화형 농업에 보다 중점을 두는 데 대한 지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농업 진화의 개념은 곧 당시의 요구와 경향성에 굴복해 관행농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런 청사진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을 포함하여 산업화된 농업의 전 지구적 전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초기에 직면했던 조건들에 비해 개선점들이 나타났지만, 현대 농업모델은 결국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문제들을 보여줬다.

〈현대 농업 모델의 문제점〉

- ▶ 과잉 특작화, 단작화, 과잉 집중
- ▶ 외부 투입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비료, 살충제, 동물농후사료, 농기계, 관개시설)
- ▶ 대규모 산림벌채
- ▶ 염류축적작용, 침식, 다짐작용, 토양 황폐화

- ▶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장식 목축체계 심화, 가금류, 돼지 사육
- ▶ 농촌-도시 이주민 급증(농촌인구 1956년 56%, 1989년 28%, 1990년대 중반 20%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기의 강력한 사회적 전환들은 투입재가 낭비되는 관행농업에서 수천 명의 농민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것이 다른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과 반대되는 모습이었다.

이 기간에는 80% 토지가 국가소유였으며, 20%가 사적소유 형태로 있었다. 평균적으로 130만 톤의 화학비료와 60만 톤의 농후사료가 매년 가축 사육에 쓰였으며,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살충제가 사용되었다. 트랙터 수는 9만 대까지 증가한 데 반해 소는 10만 마리에 못 미치도록 줄어들었다. 혁명 초기 30년 간 무역을 우선시했던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소련에서 이러한 농업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소농들은 전국소농연합을 만들고, 많은 이들이 소농생산협동조합 혹은 신용과 서비스 협동조합에 가입했다. 한편으로 다품종 작물들과 통합된 농업 활동은 땅에 묶여있는 채였다. 귀중한 농업 전통은 소농들이 가축 경운을 사용하고 직관적으로 생태 과학을 운용하는 것으로 지속해 왔으며, 이로써 외부 투입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자기 농토를 관리하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쿠바농업에서 최근의 변화

1970년대 쿠바 정부는 지배적인 농업모델의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투입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던 당시보다 합리적이고 시대 추세를 반영하는 농업체계로의 변화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수입되는 투입재와 천연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의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재정과

물질 절약을 촉진했으며 이윤율과 자급을 새롭게 강조했다.

연구기관들도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목표와 전략들로 바뀌나갔다. 이 시기에 세계 에너지 위기와 수입 연료, 비료, 농후사료, 살충제, 다른 제조품의 가격 상승은 쿠바 농업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1980년대는 수입되는 투입재 대체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 교육이 증가세를 보였다.

1960년대에 설립된 견고한 연구체계는 농무부 내에서 강화되었고, 17개 연구소와 38개 실험실(다양한 분야에서 795명의 연구자들과 168명의 박사들), 연구소와 대학들의 네트워크를 연계한 고등교육부, 교육부, 그 밖의 기관들에서 농생태학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 : 쿠바의 '특별한 시기'

1989년의 극심한 위기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더불어 급작스럽게 시작되었다. 중요한 것은 쿠바는 자본과 에너지 면에서 자국 내 조달 비중이 낮았다는 점이다. 1989년 이전 쿠바무역의 85% 이상은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10%가 조금 넘는 정도였다. 쿠바는 식량의 3분의 2를 수입했고, 석유와 기계부품의 80%를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수입했다.

쿠바의 구매능력은 40%까지 감소했고, 석유는 3분의 1, 비료는 25%, 살충제는 40%, 농후사료는 30%까지 수입이 줄어들어 모든 농업활동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갑자기 쿠바 무역에서 1년에 80억 달러가 사라졌다. 쿠바 GNP는 1989년과 1993년 사이에 193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떨어졌다. 수입은 대부분의 식량, 예비부품, 농화학재, 산업장비를 포함하여 75%까지 감소했다. 많은 산업시설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공공 교통수단과 전기발전은 최소한으로 운영되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서, 현대의 산업화된 농업체계는 식량생산을 증진시키는 데 난관에 직면해야 했던 반면에 여전히 수출용 생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투입재 가용성 면에서 모든 부문이 50% 이상 감소했다.

위기에 직면한 쿠바 정부는 경제 내핍상황을 진단하고 긴급한 변화를 단행했는데, 새로운 국내경제정책, 해외투자에 대한 개방, 쿠바시민들의 외환 보유 규제 자율화, 다양한 분야에서 사적 활동에 대한 허가를 승인했다. 구조적인 재편과 더불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시켜온 새로운 농업 기술은 처음으로 새로운 교육을 실행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되었다.

- ▶ 새로운 조직적 형태와 생산 구조를 통한 국영농업 부문의 분권화
- ▶ 다양한 지역에서 다품종 작물에 대한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토지분배
- ▶ 농업생산의 전문화 감소
- ▶ 생물학적 해충 방제 및 생물비료 생산
- ▶ 가족 경운을 새롭게 활용
- ▶ 도시, 가족, 지역사회 텃밭운동의 증진
- ▶ “공급과 수요” 조건 하에서 농민시장 개설

이 ‘특별한 시기’ 동안에 농업정책의 목표는 농업에서 투입재 비중을 낮추는 형태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생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연구와 교육, 정보 공유,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자본과 에너지에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했다.

동시에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를 강화했다. 1992년에 토리첼리 법안이 승인되고 미국계 해외 자회사가 쿠바에 식량과 의약품품을 수송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헬름-버튼법은 쿠바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시켰다. 이 법안들은 다양한 수정안과 봉쇄효과를 중첩시키고 야만적이고 극한 특성들을 심화시켰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가까스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표들

을 유지해 왔다. 식자율은 여전히 95%를 넘어서고, 교육은 16세까지 무상의무로, 1천1백만 주민들의 평균학력은 9학년이며, 50만명 이상이 대학졸업자이다. 1천명 당 사망하는 유아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아 사망율은 6.4이다. 인구 1만 명 당 약 60명의 의사가 있고, 평균 기대 수명은 여전히 75세 이상이다.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96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노동력의 43%를 차지하고 주로 교육, 보건의료, 과학, 기술 분야에서 활동한다.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과학계 종사자들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생산의 많은 부문은 최근 몇년 간 회복되고 있는데, 특히 뿌리작물, 덩이줄기, 신선한 야채들과 국가적 산림조성이 두드러지며, 현재 국유지가 21%를 넘어서었다. 도시농업 또한 식량보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소규모 쌀, 약초 생산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으며, 가축 경운이 재발견되었고, 농민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주식물보호국과 다른 국가기관들은 “가격상한제” 시장을 열어서 적절한 가격으로 식품을 공급했다.

농업 행정 구조

농무부는 국가 기관으로서 농업과 임업 생산을 감독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인구 대비 식량수요량, 산업에 대한 원자재, 관광 필요사항 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품을 충족시키고 최대 효과를 내는 수출을 장려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농지, 물, 기술 공급, 토양보호와 국내 야생 동물의 유전정보 축적, 사탕수수 외 농업과 임업 생산에서 저항성 있는 다품종 작물들과 종자들의 보존과 활용 등 다양한 노력들에 기대고 있다. 농무부 주식물보호국은 또한 동·식물 건강과 환경보호, 안전한 일터 환경에 대한 서비스와 검사를 보장하고 있다. 전체 인력 1,153,000명

(협동생산기본단위 노동자들을 포함) 중 26,352명은 고등교육의 학위를 갖춘 전문가이며, 62,200명은 기능사이다. 주식물보호국 국영기업체계는 487개 기업과 222개 독립농장으로 구성되어, 40만 명의 노동자들이 농업분야(69%), 산림재배(10%), 산업계(9%), 건설(2%), 운송(1%), 상거래(9%) 부문을 각각 담당한다.

쿠바 경제에서 사탕수수와 설탕 산업이 여러 면에서 중요시되는데, 설탕 산업부는 약 150만 헥타르의 농지를 관할하고 있으며 주식물보호국도 농업과 농산업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과 긴밀하게 관련된 기타 기관들

전국소농연합은 조직적이고 생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실습, 안내, 판매홍보, 국제적인 협력을 제공하는데, 개별 지주, 농업 노동자, 혹은 개별 농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소농들이 해당된다. 이 조직은 쿠바의 농업 전통, 경험, 문화의 상당 부분을 보존하도록 도와왔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적 농업으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교육부는 농촌지역의 기술적인 교육을 담당하여, 과학기술전문연구소 네트워크(특히 농촌 직업 고등학교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소들에는 농업 생산지가 배치되어 담당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으로 학생과 교수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고등교육부는 대학, 대학원 교육을 관할한다. 모든 농업대학들뿐 아니라 상당수 연구소, 실험실은 이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몇몇은 국가적,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주식물보호국의 활동에 중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환경부는 ‘특별한 시기’인 1994년에 설립되어 과학, 기술, 환경문제들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가운데 농업 부문이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식품부, 해외투자 경제협력부, 수압자원 연구소 모두가 농업 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생산구조의 변화

1993년 9월 쿠바 당국은 이전 국영농장 토지소유 체계에 변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협동생산기본단위로 전환시켜왔다. 이 토지들은 이전에 국영농장에서는 무료 토지 이용권의 기반(임대료 없음) 하에서 보장되었는데 이제는 생산수단(농장 설비, 도구, 가축, 건축물)을 협력적으로 구매하는 데로 나아갔다. 협동생산기본단위는 일반적으로 협동농장에 비해 넓은 지역을 포괄하며, 자치적이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이다.

오늘날 사적 부분은 농업생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농생산협동조합과 신용서비스협동조합(1970년대 설립되고 전국소농연합 산하에 조직되어 있음), 이전 국영농장은 협동생산기본단위뿐 아니라 개별 생산자들로 전환되었다. 게다가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국영농장은 협동생산기본단위를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설립되었다. 이 형태의 주된 특징은 이전 국영농장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수정된 주식물보호국 규칙 419호는 80,748헥타르의 토지를 커피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농민들에게 제공했고, 53,948헥타르는 담배 생산, 17,004헥타르는 새롭게 분배되었다.

토지 보유제도

구조	기원	보유권	이점
소농생산협동조합	독립 지주들	협동조합과 연합조직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 기부	임금, 노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함
신용 서비스 협동조합	전 임대농, 농장 노동자, 당원, 소작농, 소규모 지주	토지 이용권이 부여된 사적 토지	은행 신용대출, 이익공유
협동생산기본단위	전 국영농장 노동자들	생산수단, 가축 등 구매, 집단적 토지 이용권	임금, 노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함
농촌분야, 토지이용권이 부여된 토지	국유지, 주로 커피, 코코아, 담배	국유지의 토지 이용권	국가 주요작물 구매, 가축농 생산보조, 초과 생산분 자유시장 판매
도시농업	텃밭, 옥상, 발코니, 도시 및 도시 주변 공터	사적보유 혹은 토지 이용권 0.25 헥타르 까지	가족 자체수요 충족, 야채, 원예, 허브, 가축 이웃에게 판매
새로운 형태의 국영농장	협동생산기본단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결핍된 국영농장	국유지, 행정적 자율성이 높아진 국유 생산수단	임금, 노동과 생산결과를 기반으로 함
국영기업	국유지	국가에 귀속된 모든 생산수단	임금 노동자, 식량 및 수출용 생산

쿠바에서의 유기농업 운동

초기에 농업 선구자들이 일군 이 같은 비범한 작업은 이후 세대인 수천 명의 소작농, 농민들이 알려준 지식, 아이디어, 경험들로 오늘날 쿠바의 유기농업운동과 기본원칙을 만들어 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쿠바 과학자들과 농민들은 고투입 농업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몇몇 연

구소들이 이런 경향의 작업을 채택했으며, 쿠바가 중요한 투입재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경제 및 환경 관점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의식이 점차 형성되었다.

역사적 배경과 쿠바 당국이 발의한 최근 전환을 고려하여 1992년 주로 고등교육부 소속 교수, 연구자 그룹이 관행농업에 대한 대안을 개선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바나 농업대학(당시에 하바나 선진농업과학 연구소로 불렸음)에서 생태농업 아이디어들을 토론하는 데 함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기농업에 관한 최초의 전국회의를 조직하고 1993년 5월 국가농업과학연구소에서 대표단 100명 이상과 해외인사 40명의 참여로 쿠바유기농업연합 핵심 그룹을 창설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농업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적 인식을 발전시킬 것, 동시에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한 방법으로 충분하고 가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것.
- ▶ 지역 생태농업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것, 그리고 농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육과 훈련을 증진시킬 것.
- ▶ 농민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이며 자연적인 농업생산체계 수립을 증진시킬 것.
- ▶ 해외 기관들과 경험을 교환하는 것을 장려할 것(라틴아메리카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중점),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발전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
- ▶ 유기농산물 판매홍보의 중요성을 증진하고 공표할 것.

쿠바유기농업연합의 창설 이래로 워크숍, 현장 탐방, 대학, 연구소 내 토론, 컨퍼런스, 행사, 농민들과의 간담회뿐 아니라 이동 생태 도서관이 생산·연구·교육센터, 농업협동조합, 다른 관련 연구소들을 순회하면서 맹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시에 ‘생태농업 등대들’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농민들과 더불어 출범했고, 전국 각지의 생태농업 개념이 적용된 농장에서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를 촉진시켰다. 등대 프로젝트는 하바나 지역의 2개 지자체의 3개 소농생산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지역적으로 150 가구 가족농들과 약 400명의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유엔개발프로그램의 일환인 ‘지속가능한 농업 네트워킹과 농촌지도 프로젝트’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하바나 농업대학과 농업과학기술전문연구소에서의 훈련을 포함했다. 7개의 새로운 등대들이 최근 피나르 델 리오, 하바나, 씨엔푸에고, 상뜨 스피리투스, 빌라 클라라, 라스 투나스 지역에서 협동생산기본단위, 신용 서비스 협동조합, 소농생산협동조합들을 출범시켜 왔다.

‘등대들’과 같은 프로젝트는 ‘세계를 위한 빵(독일)’, ‘완전한 협력을 위한 인간주의 연구소(네덜란드)’, ‘옥스팜 미국(미국)’의 재정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전국소농연합을 위한 국립학교에서 이론과 실천적 주제들에 관한 컨퍼런스, 참여형 간담회, 비디오 토론들이 열려 왔다. 마침내, 농생태학과 유기농업에 관한 많은 과정과 워크숍이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쿠바유기농업연합 핵심그룹은 수년 간 주식물보호국, 설탕관리국 등 행정부서와 전국소농연합, 쿠바교회협의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유기농산물의 생산, 판매, 홍보를 목표로 이 기관들과 함께 작업했으며, 교육, 연구,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교류해 왔다.

1995년과 1997년에 제 2차, 3차 유기농업에 관한 전국 컨퍼런스가 하바나 지역의 동물과학연구소와 빌라 클라라 중앙 대학교에서 각각 열렸다. 2차 컨퍼런스에서 참여기관들과 합동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했는데, 각 나라들에서 온 유기농업 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한 선진지 견학이 포함되었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개의 전문 워크숍(생물해충방제와 가축을 활용한 토양 경작), 두 개의 단기과정(섞어짓기와 생태농업 체계의 설계), 3일 단위 컨퍼런스, 제 2차 유기농업 국제 과정이 개설되었다. 3차 컨퍼런스에서는 400명 이상의 대표단(해외 180, 쿠바 240)이 3일 동안 참석했다. 사전 워크숍은 산악지역, 도시농업에서의 개발, 생태적

해충관리에 관해 열렸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네트워크와 농촌지도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회의가 동시에 열려서, 회의 직후 '살충제 행동 네트워크'와 3차 유기농업 국제과정이 개최되었다. 3차 컨퍼런스 과정에서 '제1차 라틴 아메리카 유기 인증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는 인증제도에 관해 배우고 지역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 실행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 분야에서 하바나 농업대학의 지속가능한농업연구센터는 농생태학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1997년 이래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농생태학 1년 단위 통신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기농산물 인증과 유기농 커피에 관한 생산과 인증을 다루는 과정뿐 아니라 농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퍼런스와 워크숍을 개최한다. '유기농업 이탈리아 연합'은 국제유기농업 조사관으로서 이탈리아에서 두 개의 직업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노력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경제연합이 이를 승인하고 있다.

유기농업 잡지는 1995년부터 1년에 세 차례씩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 잡지의 목표는 유기농업뿐 아니라 체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점에서 저투입과 생태농업 기술에 관한 새로운 뉴스에서 각기 다른 양상들과 진전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 사회, 경제 주제에 관한 토론, 특히 세계 각 지역에서 관행농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과 관련된 내용이 실렸다. 전국 및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독자 수를 볼 때 이 잡지를 채택하는 빈도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 및 국제적 협력이 강력하게 작용해왔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센터나 기관에서 연계하거나 농업형태를 만드는 쿠바유기농업연합 핵심그룹은 프로젝트, 코스, 출판물, 회의 조직 등에서 공동으로 작업했다.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 작업뿐 아니라 국제회의들과 해외 대표단들의 전국적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실천적 참여도 있었다. 쿠바의 전문가와 농민 대표단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이티,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스리랑카, 미국, 기타 국가들에서의 농업 실습에 관해 보고했으며, 이 지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교류를 가졌다.

1996년에 쿠바유기농업연합 핵심그룹은 유기농업을 증진시킨 업적에 대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 상(Mallinckrodt: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유기농업운동회의 국제연맹에서 발표되었음)을 수상했다. 1999년 4월 쿠바유기농업연합은 이름을 변경해서 현재 유기농업 그룹(GAO)으로 불리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지위를 얻었다. 유기농업연합 핵심그룹은 생태적 농업의 홍보와 개발에 대한 동일한 전제 하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999년 12월 유기농업연합 핵심그룹은 유기농업 전파와 증진에 대한 업적으로 스웨덴 의회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대안 노벨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바른 삶 상”을 수상했다. 이것은 유기농업에 있어서 유기농업연합 핵심그룹의 훌륭한 작업으로 인한 것이며, 매일같이 유기농업 개발과 실천을 수행했던 쿠바인들에 대한 입증이기도 하지만, 40년 이상 경제봉쇄로 고통받았음에도 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길로서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다.

현재와 미래의 도전

유기농업과 농생태학은 과학기술적 모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농업, 바로 그 길을 표상한다. 이 과정은 곧 지역 현실의 조정과 더불어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유기농업과 농생태학은 쿠바의 사회경제적 맥락 내에서 뜻이 통하게 되며, 하나의 규칙으로써 이런 형태의 농업이 혁명적 세계관을 지탱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신자유주의가 수행하는 악랄한 세계화에 맞서며 다국적 기업에 의

존하지 않고,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고 연대하는 보다 인간적인 세계화를 추구하며, 자급을 우선한다. 생태농업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중간상인과 중개자의 역할을 줄이고, 잔인한 과학기술 방안보다 농민들의 의식을 발전시키며 지식을 적용하는 데 있다. 농민을 자연과의 협력자로, 문화적 존재로 고려하며, 단지 생산적 단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쿠바는 이상적으로 유기농에 대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입증하고, 진실로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위치에 와 있다. 현재 쿠바의 유리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 농산물에 대한 강력한 요구
- ▶ 농업활동과 연결된 질적으로 훌륭한 인력
- ▶ 공동체 활동을 경험한 인구 수
- ▶ 식량자급을 지지하는 행정, 사회구조
- ▶ 국민들의 이득을 위한 공개 캠페인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대중매체
- ▶ 새로운 모델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
- ▶ 최근 수년 간 많은 인구들의 귀촌
- ▶ 생태농업 문화창조에 기여하는 조직

유기농업은 일반적으로 점차적 전환 과정을 통해 전 국가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급격한 변화와 이전 생산체계의 급작스런 파열은 경제 위기 덕분에 쿠바에 닥쳐온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덕분에 쿠바는 생태농업적 생산을 완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각 지역, 작물, 생산목적, 기술 및 경제 환경과 같은 특정한 조건에 걸맞게 조정해왔다. 이런 상황은 커피, 감귤류, 과일 혹은 가공된 과일, 설탕, 꿀과 같은 몇몇 상품작물에서 급격한 전환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여러 이유로 일부 관행농업체계는 유지될 것이며, 유기적이고 생태농업적 체계가 완전히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러할 것이다. 관행농업의 고비용을 고려할 때 외화가 귀한 최근 경제 상황은 유기농업

을 실행하고 홍보하는 데 또한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업형태에 따르는 규칙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농산물이 유기농으로 인증 받고 판매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까운 미래에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련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려할 사항들은 표준에 대한 정의와 유기생산을 관장하는 법적 규칙들, 국가 인증 시스템, 선호도에 대한 시장조사, 국가 안팎의 가능성들, 매개 작물에 대한 진단 절차를 포함한다. 유기농산물 인증체계에 관하여 우리는 초기에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소비, 건강, 환경과의 영속적 관계성과 관련한 국가적 의식을 발전시키고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투입재 대체재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생태농업 체계가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물, 가축생산, 산림관리, 여타의 하부체계들이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에 기반을 두고 상승작용의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한 실험결과들과 전통적으로 생태농업을 실천해온 농민들의 임상경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으며, 농촌에서 가축, 작물, 과수, 임목이 통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한편, 잔류물들이 순환하고 가축경작과 풍력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기농업과 농생태학의 광범위한 잠재성을 입증하고, 농촌 지도를 위한 보다 효과적 방법론을 개발하며, 출판물의 수를 늘리는 것, 훈련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 협력을 증진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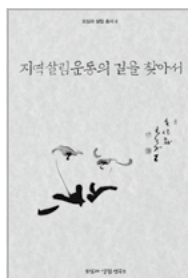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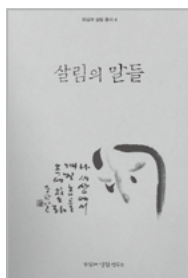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이러한 농업에서 패러다임 이동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역동적인 작업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위협은 화학적 투입재들의 수입이 다시금 보편적으로 일어날 때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엔 신념보다 오히려 필요성에 따라 유기적 방법을 활용하는 농민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모심과살림연구소 발간물

모심과살림 총서

《모심 侍》(2002) / 《밥과 명상》(2002)

《살림의 말들》(2004) / 《지역살림운동의 길을 찾아서》(2009)



모심과살림 단행본

《땅에 뿌리박은 지혜》 모심과살림연구소 엮음, 2006, 그물코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그물코

《마음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황주석, 2007, 모심과살림연구소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한살림선언 다시읽기)》

모심과살림연구소, 2010, 도서출판한살림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지침서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맞아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책

도서
출판 **한살림**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지침서”

그레그 맥레오드(Greg MacLeod) 씀 / 이인우 번역
기획 모심과살림연구소 / 발행 도서출판한살림 / 값 9,800원

특집

마을, 마을사람들



특집

들어가는 글 : 우리가 꿈꾸는 마을
도시의 마을과 행정 : '뉴타운'을 넘어 '마을공동체'로
도시마을 다시 만들기 : 서울 삼각산재미마을
오래된 도시마을 되살리기 : 서울 장수마을
생산지 공동체 마을만들기 : 전북 부안 산돌바다공동체
도시 젊은이들의 귀촌 : 전남 영광 여민동락
도시에서 농촌으로 간 예술가들 : 예술과마을네트워크
농촌마을의 행정 :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
일본의 마을만들기

마을에는 '마을사람들'이 산다
서울시 마을만들기, 성공한 결과를 경계하라
아이와 함께 성장해온 마을
고치고 가꾸며 사람들이 뿌리내리는 마을
일도 놀이도 신명나게, '무궁해' 농부들
농촌 어르신들과 살맛나게 이웃으로
'크고 빠름'을 버리고 열린 문화예술의 눈으로
마을공동체를 되살리는 기초자치단체시스템
시행착오가 자치의 힘을 키운다

살림 살림

길을 묻다·길을 가다
김경애의 풀빛밥상
제철살림
교육살림
살림이 눈여겨본 이 물건
다시 본 이 물건
명령거리며 살다
살림 오피니언
살림의 현장
시골살림 길잡이

낮이면 농사짓고 밤이면 기록할 뿐 역사지리학자 최영준 교수
꽃사과샐러드샐러드·버섯들깨순두부탕·표고버섯탕수·통밀들깨과자
나물 말리는 계절, 나물 무치는 행복
부모를 떠나 하루하루 도전하기
보이는 거품, 안 보이는 위험 황성세제와 비누
지금 숲을 파괴하고 있는 당신에게 휴지
우리 땅의 생명을 늘린 우렁이농법을 참안하다 충북 음성 성미마을 최재명 씨
88만 원 세대의 역습
그 밭에는 또다시 열매가 맺힌다 두물머리 농부 이야기
자연이 키우고 머물게 하라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02-6931-3604 salim@hansalim.or.kr

<http://mosim.or.kr>



재생종이로 만든 책